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3. 2

경 찰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과학치안 R&D 협업부서 가점제도 신설

- 현재·미래의 치안현장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과 ‘연구결과 현장 실증’에 대한 전 부서의 관심·지원 필요
- 과학치안 R&D 협업부서 대상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업무 부담에 따른 보상과 동기부여로 기능 간 적극적 협력을 도모(과제별 0.0~0.1점)

▶(발굴기준) 예산요구서 제출 후 경찰청 자체 심의 통과 시(~5월) → 0.03점

▶(채택기준) 예산요구서 과학기술부 심의 통과 시(~6월) → 0.05점

▶(수행기준) 국회 예산확정 후 과제 담당부서로 지정·수행 시(~10월) → 0.1점

□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 평가 결과, 상위부서(상위 20%)에 특별승급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신설,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 제고
- 올해는 '21년 평가등급 '우수' 이상 11개 부서에 특별승급 부여

년도(과제수)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21년(53개)	3(5%)	8(15%)	8(15%)	15(30%)	8(15%)	8(15%)	3(5%)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과제 ‘설계-추진-평가-환류’ 전 과정**에 자체평가위원이 참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합리적 평가 유도

* △외부위원(교수·법조인 등 27명) △내부위원(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장비정책관)

** 정책과제 컨설팅(3월)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4월) → 중간점검(7월) → 본평가(11월) → 추가평가('23.1월) 등 연간 5회 이상 실시

- (평가단 구성) 폭넓은 내·외부 평가단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외부평가단) 자체평가 위원(27명)으로 구성, 국민의 시각을 평가에 반영
- (내부평가단) 치안정책 과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찰청 과·계장(50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
 - ※ 평가자 소속 국·관의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 평가방법

- (중간점검) 정책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7월)
- (본평가)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지표 설계의 적절성 △정책과제 수행 노력 △목표 달성도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 과제별 최종점수는 외부평가단 50% + 내부평가단 50%로 반영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균(85)·표준편차(5) 보정, 평가자·평가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합리성 제고
 - ※ 자체평가 결과는 치안종합성과평가 ‘본청 부서평가’에 반영(50%)
- (추가평가) 우리청 정책과제 본평가(1~10월)와 자체평가 기간(1~12월)의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 11~12월 추진실적 등을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22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52개
 - ※ 본청 각 과별 1개 과제 / TF·직접수사부서 등 10개 부서는 유관도 평가 진행
- (평가지표) 4개 항목 內 8개 지표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2. 정책추진 노력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3.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성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3-2. 정책 효과성
	3-3. 향후 기대효과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4. 정책홍보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2. 평가결과

(1) 총 평

□ '22년도 총 52개 관리과제에 대한 경찰청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5%) △우수 8개(15%) △다소 우수 8개(15%)
△보통 15개(30%) △다소 미흡 8개(15%) △미흡 8개(15%) △부진 2개(5%)

우수 이상 (11개, 20%)	·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건인 ·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미흡 이하 (10개, 20%)	· 자치경찰제 내실화 ·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 52개 관리과제 152개 성과지표 중 145개 달성(평균 달성률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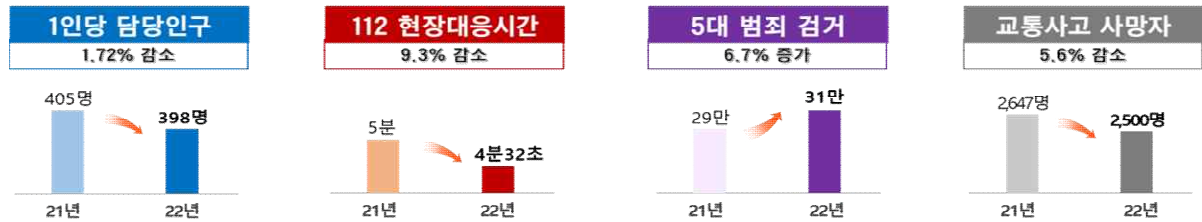
- 성과지표 152개 중 145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나, 7개 지표는 미달성

지표명	목표치	'22년 실적	달성률
①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88.9점	88점	98.9%
②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	-8.3%	-5.1%	61.4%
③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건수	761건	631건	82.9%
④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 만족도	81.8점	81점	99%
⑤인재 채용률	96.2%	92.9%	96.6%
⑥경감·6급 이하 연가사용 실적	63%	59.3%	94.1%
⑦예산확보 수준	55%	54.4%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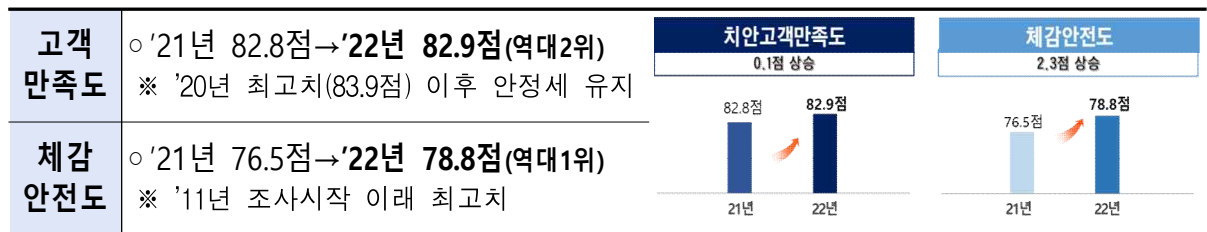
[2] 주요성과

□ 국민·현장 중심 정책관리·인력 운용으로 주요 민생지표 향상

- △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 112 현장대응시간 △ 5대 범죄 검거 △ 교통사고 사망자 등 정량적인 주요지표는 지속적으로 향상



-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의 ‘치안고객만족도’는 안정세 유지,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안전도’는 역대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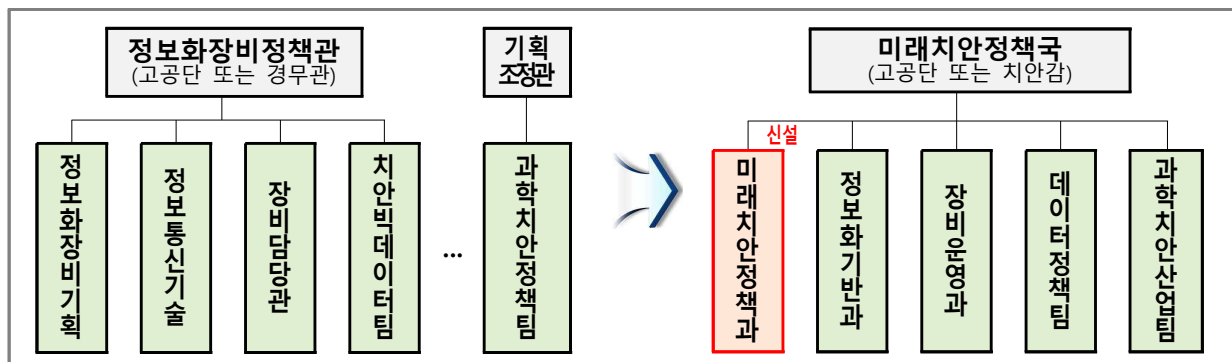


□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로 선제적·능동적 경찰활동을 조직 전반에 정착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미래비전 위원회」 발족('22.2월), 「경찰 미래비전 2050*」 대국민 발표('22.9.29.)

※ △ 5대 전략방향 △ 14개 도전과제 △ 29개 시행과제 △ 72개 실행과제

- △ R&D·치안산업 진흥 △ 데이터 융합 등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 신설(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 12.29.)



□ 현장 문제 해결형 과학수사 R&D 등 경찰 책임수사 총력 지원

- 부패·백골화가 진행된 사망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하여 범죄 혐의점 판단 등 변사사건 수사 지원을 위한 「법곤충 감정실」 구축('22.5.)
- △신속 DNA 분석기·혈흔탐지 新 시약 보급 △범죄자 DNA DB 운영
△고도화된 DNA 신원확인시스템(DIMS) 운영 등 DNA 수사역량 강화
- AI 활용 지문분석 시스템 구축 및 GeoPros 시스템 고도화

구분	주요 내용
AI 활용 지문분석 시스템	▶ 감정 절차 자동화, 검색알고리즘 개선 등 감정역량 제고
Geopross	▶ T맵 모빌리티 등 대외 데이터 협업 강화 및 매뉴얼 개편

□ 준법질서 확립으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 국민들의 일상이 된 사아버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보를 위해 조직 체계를 지속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치안활동 전개

▶ (범죄수사) △사기 검거 14.9%↑('21년 24,419 → '22년 28,063명) △사이버금융 검거, 30.5%↑('21년 4,290→'22년 5,612명) △사이버범죄 검거 10.7%↑('21년 619 → '22년 685명)
▶ (피해자보호) 불법촬영물·피싱사이트 등 26,220건 삭제·차단 요청(전년 대비 300%↑)

-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개선 등 병행

▶ (사망자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5.6%↓(2,647→2,500명) △보행 사망자 8.5% ↓(909→832명)
▶ (안전속도 5030 개선) 56개 구간(총 130.6km) 속도 상향(50→60km/h) 완료
▶ (제도개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 △'22년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등

□ 현장 경찰관 처우개선을 통한 제복 근무자의 자긍심 제고

- (처우개선) △열악한 보수·복지개선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현장 경찰관이 책임성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처우)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경감 근속승진 횟수 확대(1회→2회)
▶ (복지) △특수건강검진 단가 50%↑ △수련원 신축·리모델링 예산 확보(강릉·신안·남해)
▶ (애로 해소) △시도청 內 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 설치 △경찰·전문요원 합동대응팀 시범 실시 등

- (법집행 지원) △경직법 上 형사책임 감면규정* △적극행정 면책
△법률지원 활성화 등 현장의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신설, '22. 2. 3. 시행

[3] 개선·보완 사항

□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변화된 수사절차를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실무지원 등 지표*를 운영중이나,

- ▶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조치(30%)
- ▶ 협력적 경·검 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 지원(40%)
- ▶ 수사권 조정의 여론 및 외연확장과 선진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30%)

- 다양한 제도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지표 설계 필요
-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나, 법무부·학계 등과 세미나·토론회로 한정된 창구 운영
- 현장 수사관 의견, 국민 홍보 등 다각도·적극적 환류 필요

□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는 각종 범죄 및 재해·재난 등 주요 치안상황 대비 교육·훈련부터 112신고접수·지령·현장조치 및 환류까지 쉼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기적·체계적인 지표 설계
- 다만,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는 외부위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22년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표로, 목표치(88.9)에 다소 미달(88)
- ’22년 10월말 이태원 참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23년 정책 과제 수립 시 개선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선정, 추진·이행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미흡
2	자치경찰제 내실화	미흡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부진
4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다소우수
5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미흡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보통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다소미흡
8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보통
9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보통
10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보통
11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우수
12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다소우수
13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우수
14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미흡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보통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보통
17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다소우수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보통
19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보통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우수
2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미흡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미흡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다소미흡
24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보통
25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다소미흡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다소우수

연번	관리과제명	평가결과 (평가등급명)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다소우수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부진
29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개선	보통
30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매우우수
31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우수
32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매우우수
33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보통
34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다소미흡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다소미흡
36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미흡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다소우수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	매우우수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우수
40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보통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다소미흡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우수
43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다소우수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다소미흡
45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우수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미흡
47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다소미흡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보통
49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보통
50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우수
51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보통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다소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미흡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탄력순찰) 1~12월 순찰요청 10,535,858개소 중 10,150,258개소 순찰하여 이행률 93.6% 달성, 전년 대비 3.8%p ↑ (전년 89.8%)
- (범죄예방 환경개선) CPTED사업 2,551건 중 95% 사업에 경찰참여 등 전년 대비 참여율 9%p ↑ (전년 86%), 기타 방범시설 설치도 다수
※ CCTV 14,312개, 가로등·보안등 13,568개, 비상벨 7,391개, 기타 32,979개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지역별 협의체 4,130회 개최, 지자체·기업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 논의
 -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경진대회(11.23.)를 통해 지역별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별승진·표창 등 포상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변경) CPTED사업 참여율 외 실제 사업예산·건수 등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임계치 도달된 성과지표 변경 필요
- (정책 환류) 범죄·112신고 외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순찰·CPTED사업 등 분야별 정책효과 확인·점검이 필요
 - － 기존 협업하던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나, 새로운 지역사회 구성 참여 등 저변 확산 노력도 필요
- (홍보 강화)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홍보활동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공헌 활성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참여 유도

- (범죄예방지수)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 범죄예방지수 조사
· 분석 후 시도청 컨설팅 등으로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범죄예방홍보) 시도청과 협업, 관련 예산 확대 등으로 홍보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 적정성 모두 우수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선제적으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장애 요인 극복 등 보완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추진계획을 모두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적극행정 노력도 및 대외 협업 성과가 우수하나, 대내·현장 과의 협업 보완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미흡	▶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모두 임계치에 도달하여 전년도에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적극성이 다소 부족
5. 정책효과성	미흡	▶ 국민편익 증진 등 예방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다양한 효과분석 방안을 강구할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효과 측정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은 우수하나, 정책 반영여부 보완 필요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가시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 활성화]

-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 시·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4. 26.)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증원 경과 △기능별 주요 정책 공유
- (8. 31.) △하반기 자치경찰제 운영 방향 △정원 외 파견경찰관 연장 협의 결과 공유
- (9. 6.) △국정과제(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계획 공유
- (12. 8.) △다중운집 행사 보고체계 강화 안내 △대통령령 개정 경과 △예산 편성 협조 등

-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 발의(2.16.), 국회 본회의 의결(10.27.) 및 '23. 2월 시행 예정
 - －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법령상 설치 근거 마련 △서면의결 및 영상회의 도입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경위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21년 1,134억원에서 '22년 1,417억원(국고보조금 1,299억원, 시·도비 118억원)으로 약 25% 증액,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 －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게 207억원(시·도비) 복지 예산을 편성,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집행 시스템 개발·정비 완료

[자치경찰제의 가치·성과 공유 확산]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책 추진 및 업무수행 과정의 효율성·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교육강화 계획’ 수립·시행

- ▶(현장교육 확대)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3,455명 교육 실시<'22.4.~'22.8.>
- ▶(사이버 강의 제작) ①자치경찰제의 이해 ②자치경찰 예산 및 회계실무 과정 개설

- △자치경찰 웹진 제작·배포(355개소) △순찰차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자치경찰사무 R&D 추진]

- 지역사회가 보유한 기술·인프라를 연계한 ‘자치경찰 R&D’를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의 과학치안 R&D 생태계 조성 △자치경찰사무를 과학치안으로 뒷받침

▶(의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기존 경찰청 주도의 ‘폴리스랩2.0’ 연구개발 사업과는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지방) 주도로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추진 체계) ‘경찰청-Hub(과학치안진흥센터)-Spoke(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지방연구기관)

▶(기간·예산) ‘22 ~ ‘27년(6년), 총 300억원(‘23년 예산 15.5억원 확보) 규모

- － 국가(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시·도) 간 협력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유기적 연계·활용 등 기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한 일원화 모델 취지에 맞게 현장과 국민 모두 큰 혼란 없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
-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 이후 실질적 원년을 맞아, 경찰 내부는 지휘권 분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국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지도 또한 차츰 나아지고 있는 상황
- 다만, 인사·예산 등 일부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고,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 정도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 － △정책 효과성 입증 △공감대 형성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보다 구체화된 정책성과를 요구하며 미흡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現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111. 지방분권 강화’의 주요 실천 과제 내용으로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제주·세종·강원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경찰청·행안부·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발전방안 적극 모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가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전년도 보다 더 적절하게 성과지표가 설계됨 ▶ 정책과제 대표성이 인정되며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 수행 노력도 인정됨 ▶ 다양한 대책 수립을 통해 매우 우수한 정책 수행을 실시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모든 추진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복지포인트 확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성과가 우수함 ▶ 외부기관과의 협업도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나, 대내 협업 및 현장경찰과의 협업 노력 성과가 다소 부족한 편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목표치 달성도는 매우 우수하나, 전년도 성과 달성도에 비해 목표치를 다소 낮게 설정한 것으로 평가됨 ▶ 목표치 기준이 모호하여 초과달성 점수를 환산할 필요가 있으나, 성과 달성도와 적극성은 우수하다고 인정됨
5. 정책효과성	보통	▶ 자치경찰제 연착륙을 위한 법령, 인력,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제 내실화에 기여한 점 우수함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우수하다고 평가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향후 안전과 분권의 가치가 조화된 자치경찰제가 기대되며, 내실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기대됨 ▶ 기대효과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실적을 나열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현장과의 정책환류 노력이 평가지표에 들어가면 좋을 듯 하며, 다양한 현장방문 간담회와 의견수렴 노력도가 인정됨 ▶ 현장과의 의견 소통노력은 훌륭하나,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다양한 정책홍보 노력을 엿볼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나가기를 당부 ▶ 언론보도 상에서 확인되는 자치경찰제 성과가 부족하여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및 그간의 활동 정리·공유

(중국發 입국절차 강화 지원) '22년 연말부터 중국 內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인천공항 입국 절차 및 임시숙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경력 투입(총 58명·일시점 19명 근무, ~2.28.)

(코로나19 경찰대응백서 발간) 코로나19 정부 방역대응 지원과정에서 축적된 경찰의 역량·노하우 등을 기록·공유, 미래 팬데믹 발생 시 지침서로 활용

※ '20년 제1판에 이어 '21년 이후 활동을 시기·조치별로 종합한 제2판 발간·배포(12.26.)

○ 치안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지역경찰 운영지침 정비) '18년 제작 이후 지난 5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변경된 주요 사항을 반영하여 재발간, 전국 지역관서 배포(11.11.)

(지역경찰 조직·인력 효율화) 지역실정을 고려, 시범운영 後 ▲ 도심지역 5조3교대(61개소) ▲ 농어촌 지역 대상 광역단위 중심 지역관서(중심 지역관서+주간 파출소)로 전환·운영(119개소)

○ 112시스템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신고대응체계 구축

(112시스템 고도화) 4개년('20~'23년) 中 3년차 사업 완료(예산 81억) 및 차년도 예산 확보(59.5억)

※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화, 112시스템상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자 정보 현출 등 신고분석 기능 강화

(반복감지 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요원에게 제공하고,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참사 직후 개발(11. 1. ~ 12. 21.) 및 시범 운영 後 전국 확대 시행 中

○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연계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순찰차에 캠을 설치하여 신고 출동 시 현장 영상 촬영, 상황실에 전송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0년부터 시작하여 '22년도 76개 경찰서(순찰차 1,874대) 구축 완료

(통합관제상황판 구축) 시도청·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노후 통합관제상황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 '20년부터 시작하여 '22년도 24개 경찰서 구축 완료

(보이는 112서비스) '22. 1월 시스템 도입 및 대변인실·(주)제일기획과 협업하여 '말없는 112 신고 똑똑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활용성 제고(9. 14. ~ 11. 2. 50일간)

※ '22. 1. 1. ~ 12. 31. 1년간 보이는 112를 통해 17,517건의 신고사건 처리, 12. 30. 字 중앙일보 「'보이는 112' 통화의 위력... 눈에 빠진 3명, 20분만에 구조했다」 題下 언론보도 등 활용사례 증가

○ 재해·재난 등 중요 신고 현장조치 정교화 및 관리 강화

(현장종결시스템 개선) 112신고사건 현장 종결 시 순찰팀장이 적절성 확인 후 승인 및 관련 기능에 통보하는 ‘현장종결시스템’상 대상 사건을 現 14종에서 17종으로 확대 추진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112신고의 총력 대응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현장종결시스템 종별코드 확대 필요, 시스템 개선 中(’22. 12. 26.~)

※ 現 14종(성폭, 가폭,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내·기타 아동학대, 학폭, 살인, 강도, 절도, 마약, 폭력, 실종, 피상사기) → 3종 추가(위험방지, 사망·대형사고, 재해·재난)

○ 근무여건 개선 및 홍보활동 전개로 대내외 만족도 제고

(시도청 상황실 환경 개선) ’22년 최초 17억 예산 확보, 인천청 대상으로 상황실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112요원 업무 능력 향상

(상황실 근무여건 향상) 112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12치안종합상황실 內 ‘심신안정실’ 구축

※ ’21년 서울청·대전청·전남 순천서에 이어 ’22년도 4개청(인천·광주·전남·경북) 구축 完

(홍보활동 전개) △ 제2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영상물·포스터) △ 112요원들의 우수 사례를 모은 사례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 제4집 발간

○ 교육·훈련을 내실화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대한적십자사)와 연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토록 심폐소생술 등 실전위주 응급처치 교육 실시

※ 12.15.까지 전국 경찰관서 및 재난관리특화부대 43,022명 대상 교육 완료

(안전한국 훈련) ’22년 경찰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도로터널 추돌·화재·유해화학 물질 누출 사고를 가정한 토론 및 현장 훈련(세종시와 합동) 실시(11. 2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2년도 위기관리센터는 정책과제(정성, 9개 세부항목) 및 성과지표(정량, 3개)를 설계하여 정상 추진

정책과제 (정성, 9개)	▶ 코로나19 극복 및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 ▶ 치안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112시스템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신고대응체계 구축 ▶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연계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중요 신고 현장조치 정교화 ▶ 현장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내실화 ▶ 근무여건 개선 및 홍보활동 전개로 대내외 만족도 제고 ▶ 새로운 팬더믹을 대비한 위기극복 노하우 공유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위기대응역량 제고
성과지표 (정량, 3개)	▶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112신고자 대상 고객만족도 설문) ▶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 ▶ 위기관리 역량 지수(시도청 및 경찰서 훈련 횟수 + 경찰서 교육 횟수)

- 특히, 성과지표는 각종 범죄 및 재해·재난 등 주요 치안상황 대비 교육·훈련부터 112신고접수·지령·현장조치 및 환류까지 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기적·체계적인 지표 설계

교육·훈련	112신고 접수·지령	112신고 현장조치
← 위기관리역량지수 →	←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 →

- 다만,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는 외부위원 대면컨설팅 의견 등을 반영하여 ’22년부터 새롭게 선정된 지표로서, 목표치(88.9점)에 다소 미달(88.0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난 10월말 이태원 참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23년도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시 개선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선정, 추진·이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80.65/100)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 및 경찰청 주요정책과제와 연계하는 등 지표 설계 적정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보이는112등 기술 접목한 발전이 우수하다고 생각 ▶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처·조치 결과가 다소 미흡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대로 정상 이행 완료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미흡	▶ 선제적·예방적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대내외 협업 과제들을 내실있게 이행 ▶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적극적인 조치 및 타기관과의 대응이 미흡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현장업무처리 만족도’가 목표치에 다소 미달
5. 정책 효과성	미흡	▶ 추진과제를 훌륭하게 처리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환기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미흡	▶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효과적인 추진과제로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환류에 노력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홍보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쉬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4대 범죄 검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 외근수사를 주로 수행하는 형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범인 검거, 안정적 치안상황 유지에 기여

▶(4대 범죄 검거성과) '22년 4대 범죄 검거 건수 323,949건(전년 동기 대비 6.1%↑), 4대 범죄 검거 인원 378,849명(전년 동기 대비 5.9%↑)

- (서민생활 침해범죄 엄정 대응) 연중 상시 단속과 병행, 강·절도, 악성폭력,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 국민 주변 고질적 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발 시기에 맞춰 밀도 있는 특별단속 전개

▶(강·절도) 총 90,467명 검거(구속 3,674명), 전년 동기 대비 12.0%↑

▶(악성폭력) 총 114,468명 검거(구속 2,361명), 전년 동기 대비 16.9%↑

▶(교통사고 보험사기) 총 3,411건 1,706명(구속 53명)

- (수사시스템 재정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월} △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22. 7월} 등 사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수사시스템 재정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역량 강화) △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확대(13개 → 17개 시도청, +32명)
△ 경력채용 활용 확대 △ 안전사고 전문교육 강화(안전사고 수사 교육 年 2회 → 5회)
△ 고용노동부·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인범죄 전담체계 구축)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맞춰, 시도청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및 'TF팀' 구성·운영하고, '수사실무 지침' 하달

- (조직체계 재정비) 지역별·관서별 치안 여건에 맞추어 조직·인력 운용 체계를 재정비, 현장 대응력 강화

▶(형사과 분과) 치안수요 과다 23개 경찰서 형사과를 2과 체제로 분과, 적정 통솔범위 조정을 통해 '책임수사지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3급서 통합당직) 한정된 인력 여건에서 기능별(형사·여청수사·교통조사)로 당직을 분산 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취약시간대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합과 협업'에 초점 맞춰 3급서 통합당직 운영모델 마련,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운영

- (과학적 수사인프라 확대) △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DB시스템*
△ 실종수색 상황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에 기반한 수사인프라 구축**

* 수사기록 영구 보존 및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제사건 276건 수사기록 18만 페이지, 영상 700GB 등 등록, 기록 검색 등에 효율성 제고

** GeoPros 및 GIS 기술을 활용하여 수색범위 설정 - 담당지역 지정 -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실종사건에 대한 신속·효율적 대응 가능

- (피해 회복) 수사 수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필수절차로 정착 △ 강·절도 및 장물범죄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강화

▶ (강·절도 및 장물범죄) 피해품 매입·유통업자 등에 대한 다각적 수사로 피해품 회수에 주력, 회수율 대폭 제고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강화

※ 성과평가 시 피해품 회수율 지표 반영, 31.2%^{19년} → 33.2%^{20년} → 39.1%^{21년} → 39.0%^{22년} 대폭 제고

▶ (고의 교통사고 피해회복 체계 고도화)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행정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업, 보험수가 조정 등 경제적 회복과 교통 행정처분(벌점·범칙금·사고이력 등) 취소 등 행정적 피해회복 절차 신설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특별히 미흡한 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외부위원과의 서면컨설팅·대면회의·평가 등 과정에서 ‘생활 주변 폭력사범 검거인원’ 지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22년에는 ‘첩보수집을 통한 신고접수·발생 前 선제적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거인원 지표 활용 → ‘성과 추이 분석에 용이한 검거율’ 지표 활용 필요 의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3년 자체평가 시 ‘생활 주변 폭력사범 검거인원’ 지표를 검거율 등 지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① 대표적 형사업무인 살인·강도·절도 등에 대한 검거뿐만 아니라, ②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생활주변의 다양한 폭력 행위에 대한 단속테마를 선정·관리하고, ③ 인피뽕소니 사건처리 신속도까지 고려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 및 지표를 설계한 노력을 고려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그간 검거율 제고에만 주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법환경에 맞춰 각종 경찰 수사체제·절차·업무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노력을 고려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외근수사를 주로 수행하는 형사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예정되었던 추진 계획을 모두 준수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정부 각 부처, 경찰청 내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업으로 정책과제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려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3개 지표 모두 적극성 '상'에 해당, 최종적으로 모든 지표가 목표치 초과 달성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외근수사를 주로 수행하는 형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범인 검거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함
5. 정책효과성	보통	▶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생활 침해사범 검거에 형사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 민생치안을 확보하였고, 실질적 피해회복과 함께 △예방적 형사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회복적 형사활동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형사활동 전개로 '튼튼한 경찰像'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려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성과지표만 관리하는 편면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범죄예방·재발방지 정책까지 마련한 노력을 고려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일방적인 정책 하달은 지양하고, 현장·유관부처(기능) 등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용성이 높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한 노력을 고려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생침해 범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신고활성화 유도, 사회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사공보를 통해 오보·추측성 보도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죄정보) 연중 △전세사기 △마약사범 △공직비리 등 민생침해 및 국익저해 사범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부서로 통보했으며
 - － '22.12. 우리청 국민체감 약속 3호인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에 맞춰, 건설현장 갈취·업무방해 등 첩보 입수에 집중
- (지역안전) 건설현장 각종 안전수칙 未준수 사례 및 집중호우·태풍 예보時 △배수 불량 △낙하 위험물 등 위험요인들을 발굴해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다수가 점검·개선되는 성과 거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1년부터 일선서 정보관들이 발굴한 지역 內 위험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 － 외부 성과평가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으로 국민들이 힘든 해가 됐고, 재난예방에 정보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上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유지에 관한 정보활동'은 '정보상황과'의 소관 업무이고, 同 성과지표는 주무기능기관을 지원·보충하는 개념의 활동이지만, 성과평가가 이태원 사고 직후 이뤄져 위원들에게 소명하는 데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시행 3년차를 맞아 시기·계기별 요인에 따른 맞춤형 정보활동 추진 등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
 - ※ (지역안전 건문 분석을 통한 환류 강화) ① 月間 착안사항 하달 → ② 현장 정보활동 → ③ 週間 분석을 통한 현장실태 분석 → ④ 착안사항 再하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대표성과 성과지표 적정성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보관 교육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착안사항 지속 공유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을 모두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미흡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활성화 등으로 원활한 업무 체계 확보 수립이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미흡	▶ 정량지표를 목표 달성했으나, 국가적인 재난 발생에 따라 정성적으로 만점 부여 어려움
5. 정책효과성	미흡	▶ 좀더 능동적인 위험요인 발굴 및 통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요망
6.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이태원 사고 이후 예방 정보활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경찰 기능별 정보부서 및 외부 교수 초빙 특강 등 노력 돋보임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업무 특성상 제한적 홍보 내에서도 지역 맞춤형 홍보에 노력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전후 통계 분석 결과 반영, 정책 추진 방향 도출 및 학교폭력 다변화에 맞춰 사전 감지를 통한 추가 피해 방지

▶ (신종유형 발생경보) 첩보수집 등을 통해 신종 범죄유형 발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전파
※ 제4호 신종 유형으로 ‘킥보드 서틀’ 발생 경보 발령,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 제작·공유(8.23)

- △ 예비소집 불참 △ 만3세 이하 △ 반복신고 등 고위험군 아동 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 점검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구 분	112신고	검거	임시조치	보호조치율
'21.1~11월	23,901	10,611	5,297	22.9%
'22.1~11월	23,139	10,848	6,194	26.8%
대비(%)	▼ 3.2	▲ 2.2	▲ 16.9	▲ 3.9%p

- (현장 대응능력 강화) SPO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기법교육* 실시 및 최근 학교폭력 경향을 반영한 ‘표준교육자료’ 제작·개선**

* 경찰인재개발원 협업 신규 SPO 180명 대상 강의기법교육 2회 실시(6.17/ 8.19)

** ‘표준교육자료’의 통계·법령 현행화 및 최신사례 등 업데이트 등 개선(8.26. 배부)

- 복지부·법무부와 협업, 경찰(APO)·지자체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아동학대 현장대응인력 합동교육 실시(7회, 250명 참여)

- (협력체계 공고화) 경찰청-교육부 간 합동워크숍 개최(12.8~9.) 등 학교폭력 예방 공동 대응 및 SPO 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 유관기관 협업 합동점검 정례화 △ 공동협의체 운영 실질화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로 협업 내실화 도모

▶ △(교육부) 383명 수사(354명 소재확인, 29명 수사중) △(만3세) 13명 수사(전원 안전확인)

▶ △(고위험군) '22년 반복신고·사례관리 거부 등 아동 2519명 점검(△31명 수사연계 △219명 보호·지원)

- (선도제도 운영)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소년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 적극적인 선도제도 운영으로 선도 연계 비율 증가 및 재범방지 효과성 제고

구분	선도프로그램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연계인원	연계율	이수자 재범률	참여인원	참여율	회부인원	회부율
'21.1~12월	20,411	37.7%	20.4%	12,611	23.3%	3,756	6.9%
'22.1~12월	26,714	43.6%	12.8%	13,965	22.8%	4,638	7.6%
대비(%)	▲ 30.8	▲ 5.9%p	▼ 7.6%p	▲ 10.7	▼ 0.5%p	▲ 19.5	▲ 0.7%p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검거 및 피해아동 임시조치 인원은 증가한 반면, 피해아동 발견율은 해외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

▶ (피해아동 발견율) '17년 2.64%→'18년 2.98%→'19년 3.81%→'20년 4.02%→'21년 5.02%(복지부)
▶ (해외국 피해아동 발견율) △노르웨이 13.5% △미국 9% △호주 8.5% △영국 4.3%

- 학대·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수사기능과의 협업이 중요하나, APO·SPO 역할에 대한 대내 인식 부족으로 현장 사기 저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아동학대에 대한 '숨어 있는' 암수 범죄 발굴을 위해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APO·SPO 업무에 대한 대내 인식 개선 및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他 기능에 역할 안내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 등 홍보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근거> 학교폭력·아동학대 관련 국정과제와 성과지표가 연계된 과제로, 치안여건 변화에 맞는 지표 설계 ▶ <제언> APO 활동과 보호조치율 향상이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근거·제언> 치안환경 변화 등 반영,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노력을 인정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근거·제언> 정책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시기별 특성을 감안 하여 추진계획 수립, 모든 추진계획 정상추진 및 이행실적 양호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근거·제언> 촉법소년 통계 전산화·마약예방교육 예산 확보 등 적극 행정 노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를 높이 평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근거·제언> 코로나19 이후 치안환경 변화 등 불확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에서 목표치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보통	▶ <근거>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증가, 소년범 재범률 감소 등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가시화 ▶ <제언> 임시조치 신청과 아동학대 보호조치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자료 보강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근거> 아동학대 발견비율 향상 및 SPO활동 실질화를 기대 ▶ <제언> 피해아동 보호조치율과 발견율과의 상관관계 설명 부족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근거·제언> △연구용역 △설문조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 수렴, 이를 반영 정책 추진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근거·제언> △공모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고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警-檢 스톱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축^① 및 전국 불송치종결 등 전수조사·시정보완^② 등 범죄 대응력 강화

①(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危害 반복 등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 확인時 스톱킹처벌법상 잠정조치(유치) 및 구속 수사 적극 검토, 특히 잠정조치(유치)는 재범 및 危害 우려 중심으로 판단키로 협의

②(불송치종결 등 전수조사) '22.9~10월 중 진행 중인 사건과 불송치·불입건결정 총 7,284건을 전수조사하여 △여죄 확인 △가해자 위험성 재판단 등 총 167건 추가 조치

-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내실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반복신고 대응 강화 △신속·집중수사制 시행에 이어 간담회·현장지도 방문 등을 통해 수사역량 제고 및 제도 안착

▶(시도청 책임수사체계 강화) 경찰서 주요사건 조치·수사 적정성 점검 및 수사지휘·지도 등 시도청 중심 책임수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청 여수지도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유치) 집행·석방 조치 유의사항 등 수사지침 마련, 스톱킹 대응 매뉴얼 개정판 반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례 및 구속영장 사례집 제작·배포

▶(112신고 지령·출동기준 정립) 긴급·주요사건 집중 대응을 위해 주요 최종별 중요사건 중심 112신고 지령·출동기준을 정립하고, 조기경보 시스템 평가·경보기준도 연동

-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고도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및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대상자 실거주지 확인 등 지침·매뉴얼 마련 △소재불명자 및 고지·공개 대상자 전담팀 운영, 상시 생활반응 모니터링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고도화) 피해자로부터 풍부한 진술을 받아 증명력 높은 수사활동이 가능한 AI 피해조사 시스템 전 2급지 등 확대 및 AI 속기 기능 탑재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내실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총괄, △수사기능 전담조사관 지정·운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전담조사관 역량 고도화 △특수직무수당 신설 추진 등 내실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단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등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국민적 우려는 계속
 - 특히,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살인이나 중상해와 같은 중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회 상황과 인식변화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 절실
- 여청수사 체제 개편 및 수사제도·시스템 개선 등 체계화된 지속적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민기대와 신뢰도 향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근절
 - (警-檢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 警-檢 스토킹사범 행위자 특성, 스토킹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잠정조치 이력 등 스토킹 가해자 위험성 판단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스토킹처벌법 Q&A 배포) △언론취재 행위 △충간소음 등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들을 취합·분석, 법률 적용 판단기준 등 Q&A 자료 배포
 - (제도·정책 고도화) △신속·집중수사 범위 정립 △팀장 지휘·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기 사례공유 회의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 신상대상자 전담팀 시범운영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절차 개선
 - (가정 內 범죄 대응체계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기준 구체화 △아동학대 진술분석 등 법·제도 개선 및 수사 전문화
 -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언론 홍보) 경찰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적극적 홍보 병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수사와 피해자 보호 내용으로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였음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선의 어려움 개선 및 현안 대응 노력도가 보임
2-1-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일정별로 정상 추진되었음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3년 평균 목표치의 5% 이상을 달성해 성과 달성하였음
3-2. 정책 효과성	보통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반복신고 대응 강화 및 AI 기반 피해조사 시스템으로 피해자 진술 확보 등 노력도가 보임
3-3.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선도적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다만, 피해자 보호업무는 지나칠 정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보통	▶ 제도 보완에 대내외 의견 수렴 노력하였으나, 다각적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4-1. 정책 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소관 업무 특성상 홍보의 어려움에도 워크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책홍보하고 오보 수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사 역량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 홍보가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 인프라 확충 및 현장경찰관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촘촘한 치안안전망 구축
 -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대응체계 마련, 법무부·여가부·검찰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시스템 구축 및 법령·제도 개선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법 시행 초기 스토킹 대응 체계의 안착을 위해 △전수조사시스템 마련 △과태료 부과징수 매뉴얼 제작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 △스토킹담당경찰관 배치 △전문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건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 신당역 사건과 같은 여성대상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 실효적 피해자 보호책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당역 사건 직후 경찰의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 △재범·보복 방지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정책을 수립·추진 중
 - － 다만, 스토킹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 구현이 가능
-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조치, 가해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
 - － 법무부·여가부·국회 등과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 법률의 한계 등 설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규지표를 추가하는 등 대외적인 변화 대응이 적절하고, 국정과제·정책과제에 대한 대표성·연계성 또한 우수하다는 의견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나, 신당역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추가과제 발굴이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계획 상 추진일정 준수 양호, 4월 정책자문단 회의는 지휘부 인사일정으로 부득이 연기되었음을 위원들이 양해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APO시스템 고도화를 조기에 완료, 챗봇 운영 등 선제적 업무 수행 및 시민단체·지자체·여가부 등과의 협업도도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을 신규 지표로 도입한것에 대해 다수위원 우수 평가, 다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의 목표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5. 정책효과성	우수	▶ 스토킹 대응 현장에서 사법처리·보호조치 상급, 긴급응급조치 최종결정률 상승 등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반응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법률 개정·인력 충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자문단 및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 등 대외 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노력에 대해 우수 평가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가시적 성과 거양노력 우수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사망사고 감소)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요인별 핵심대책을 추진, 전년 대비 사망사고 6.1% 감소(2,916→2,737명)
 - ※ 10월 말 기준 - 5.1%였으나, 연말 음주운전 상시단속 및 보행자 안전 공익광고 방송 등 지속적 안전활동 결과 12월 말 기준 - 6.1%로 상향
- (보행자) 보행자 보호강화 도교법 개정 후 5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 7.8% 감소('21년 1,757건→'22년 1,620건) △사망자 40.5% 감소('21년 37명→'22년 22명)
- (교육·홍보) △국민참여 교통안전 캠페인·이벤트 추진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을 통해 흥미 유도, 홍보 효과 극대화

- ▶ (국민참여 캠페인) 코로나 완화 이후 민간 협력단체·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22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개최(11.16.),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
- ▶ (공익광고) 테마별 공익광고 제작, 주요방송사 및 라디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 권유 및 교통경찰 이미지 제고
 - * 보행자 안전강화 및 음주운전 테마 공익광고 제작, 주요방송사 및 스포츠 애호가 등에 영향력이 있는 SPO-TV와 업무협업을 통해 맞춤형 홍보 추진

○ 사고요인 집중단속

- 「'22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추진」(9~11월), 보행자·고속도로(화물차)·이륜차 등 사고위험이 높은 법규위반 집중단속
-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설문조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문제점 사전 발굴, 보완

- ▶ (시범운영·설문조사 개요) OB맥주 화물 운송기사 및 회사 임직원 대상 시범운영(7~11월, 38명), 장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12월초)
- ▶ (조사 결과) 음주예방에 도움이 된다 94.7% / 운전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 89.4% / 장치 도입 필요성 공감 92.1% 등 만족도가 높으며, 비용 부담에 우려

□ 미흡 원인분석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행자·어린이·화물차 등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가 감소했으나,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이륜차·PM 등 두바퀴 차 사망사고 증가
※ 이륜차 사망자 4.4% ↑, PM 사망자 35.8% ↑
- 이륜차·PM 사고다발지역 중심 집중단속과 함께 배달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범정부 합동 안전대책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가 구체적이며 과제 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법령 개정, 교육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일정에 따라 계획 추진, 일정 준수율 100%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정책효과 달성에 기여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 목표치 중 부상자 감소율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사망자 감소율은 목표치 과다설정 사유로 미달성
5. 정책효과성	보통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5% 이상 감소하는 성과 달성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OECD 교통선진국 진입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망자 감소추세 달성 / 보행자 안전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을 충실하게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였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선진문화 조성 기반 마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대통령 공약)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을 위해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국회 검토 중)
-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23개 민·관·학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주도적 역할(간사)을 하며, 대체 교통수단 확대 등 범부처 활동 전개
 - (조건부 운전면허)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세밀하게 측정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R&D 착수(’22~’24년)
-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
 -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정부혁신 차원의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범운영(6개월)을 거쳐 전국 확대(7. 28.)
 - (법령정비) △보행자 보호 △이륜차 법규준수 강화 △자율주행차 운전자 준수사항 마련 등 도로교통법령 총 37건 개정
 - (국제협력) 대만과 국제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완료(’22. 2월) 및 베트남, 아르헨티나, 美 뉴저지·메인주 등과도 협정 체결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추진 시 수립·집행·평가 등 쉰 과정에 걸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정책추진 시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의 대표성·연계성, 지표설계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객관성·적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전문가 컨설팅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였음
2-1-1. 정책과제의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R&D,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음
2-1-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정책과제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됨
2-2.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는 노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성과도 훌륭함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달성도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 성과도 우수하였음
3-2. 정책효과성	보통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법제도 개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정책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지연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 추진계획에 따라 도입안 마련 등 경찰청 차원의 노력을 이행하였으나, 국회 법안 심의절차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
3-3.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향후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인정되나, 정략적 기대치를 반영한 기대효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 존재
3-4.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체로 우수하나, 특정기간(단기간)이 아닌 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쉼 과정에서 대·내외 의견수렴 필요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이 인정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강화)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③ 교차로 적색 차량신호에서 우회전 시 정지 의무 명확화
 - ※ 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개정('22. 1. 11.) ②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개정('22. 1. 11.)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22. 1. 21.)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가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및 제29조의2 신설 / 제8조 제3항 및 제27조 제3항 개정('22. 1. 1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 대상 확대)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시설’ 외에 ‘장소’를 추가
 -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개정('22. 12. 8. 본회의 의결)
-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계획 성안)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인 「보행자 First! 보행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시행 (3월)
 - ※ 시·도경찰청 의견수렴을 통해 ‘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로 계획 성안
 - (추진사항 점검) 세부과제별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과제는 원인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

○ 무인단속장비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 △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성능 개선 및 확대 보급* △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개발**

*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을 보완하고,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확대 보급(총 71대)

- 무인단속장비 운영 플랫폼 구축 및 무인단속장비 관리 고도화

** 과학치안정책팀과 협업,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기획 연구과제 선정(6월), 연구개발 착수(7월~) 및 개발용 장비 시험운영(10월~)

○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Lv.4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6월~) 및 자율주행 T/F 운영(10월~)

※ 군집주행 허용, 자율주행차 사고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등 Lv.4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초안 마련

-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2차 연도 사업 시행(9개) 및 '23년도 신규 과제(2개)* 상세 기획 실시

* △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석기법 및 재현 S/W 개발, △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평가기술 개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수립 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자 대상 맞춤형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어,
 - 향후 정책·제도 수립 및 시행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법령 개정 및 종합계획 추진 등 과제 수행 노력도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선제적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도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적극적인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5. 정책효과성	우수	▶交通安全 패러다임 전환 등 정책효과성 인정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중장기적으로交通安全 강화 및 국민만족도 제고 효과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인정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홍보 노력도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이버수사 인력증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 및 대국민 수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도청·경찰서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증원
 - ※ '22년 시도청·경찰서 사이버수사관 총 286명 증원('22. 12월)
- (민간 IT 고급인력 채용 확대) 가상자산·다크웹 이용 등 첨단 범죄 대응을 위해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전담수사관으로 채용
 - － 민간 IT 최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경채 인원 중 일부를 他기관에서 선발하는 직급(6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선발
 - ※ '00년부터 경장으로 지속 채용(총 772명), 민간 IT분야 최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경장으로만 선발하던 것을 상위 직급인 경위(박사 또는 기술사)로도 일부 채용
- (연구협력 활성화) 과기부·ETRI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적극 추진
 - ※ (과기부) △국가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10월) △경찰청-과기부 사이버보안 협력(5월, 10월) △민·경·군 사이버보안 핵심기술 기획위원회 신규 예비 타다성 사업 추진(5월~10월)
 - ※ (ETRI) 다크웹 사이버범죄 대응기술 개발 중 ⇨ 2차년도 개발 결과물 전수 및 교육 실시('22. 12월)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학생, 군부대, 교육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 예방교육 총 2,289회, 351,136명 교육('22. 12월)
- (부다페스트 협약가입 추진) 가입의향서 제출(10. 11.), 유럽평의회 협약 당사국 의견수렴(10. 26.~12. 16.) 등 신속한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
- (국제공조 저변 확대) △한-중-일 경찰협력회의(11월)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12월) 등 주요국과 협력관계 강화
- (더 사이버 발간 7호) Androind ID, SSL 인증서 활용 등 최첨단 사이버 수사 사례, 사이버 정책·최신 동향 등을 일선 수사관에게 공유('22. 12월)

- (해외 공조작전 지원) △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 호주 경찰과 합동수사팀 구성 지원(11월) △ 인터폴 주관 단속 작전(해치, I-SOP) 공조(11월, 12월) 등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해외 공조작전 지원
※ 호주 경찰과 합동 수사하여 제2의 N번방 사건 유력 용의자 현지 검거
- (유로폴 공조 확장) 경찰청-유로폴 보안통신선 장비 수입 관련 관계기관 협의 통해 적합성평가·관세 면제 등 사전 준비 완료(12월)
- (국제공조 포털시스템 고도화) 전체 사이버국제공조로 활용 범위 확대 하고, UI 개선 등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로 1차 고도화 완료(12월)
- (첨단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사이버위협정보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합·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시각화 그래프 2차 조희 시 최초 조희 단서와 연결망 표현 기능 도입 등으로 분석기능 강화
 -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 검색결과 게시글 미리보기 △ 고급검색 △ 불법정보 추가 수집 △ 다크웹 접속환경 개선 등으로 검색분석수집 기능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이버범죄 급증)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및 국제공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속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획기적인 개선방안 부족
※ '17~'21년(5년간) 전체 범죄는 1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65.3% 증가
- (범죄의 초국경화) 일상생활 속 온라인 활동의 보편화로 범죄자들은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를 범죄에 악용 중이며 각국의 강력한 정보보호 정책으로 해외 소재 수사정보 확보에 어려움 증대
- (사이버수사 난이도 심화) 다크웹, 가상자산 이용 등 사이버범죄에 최신 IT기술을 악용하면서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피의자 추적·검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요구
 - 또한 수사권 조정, 경찰 내부 수사·심사과정 강화 등으로 완성도 높은 수사를 위해 사건 한 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도 크게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첨단기술력 제고 등 수사역량 강화) 전문인력 증원, 첨단시스템 구축 및 장비도입, 체계적인 R&D 활성화, 최첨단 다기능 복합시설 건립으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 (전방위적 국제공조수사 강화)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 참여와 양·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대상 국가와 기업에 특화된 개선사항 발굴해 선순환적 공조협력망 개선
- (사이버수사 전문교육 강화)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등 최신 IT 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의 대표성> 최신 IT기술을 악용하며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종합적·체계적 지원 확대하였고. 범위도 전세계로 확장하여 국제기구, 해외법집행기관, IT 기업등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함 ▶ <정책과제 연계성> 국정과제, 경찰청장 정책과제등과 연계하여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방위적 사이버 국제공조 체계 강화하여 효율성 증진 ▶ <성과지표 적정성> 첩보지표에서는 B등급 이상 사이버 중요정보 수집을 지표에 반영,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는 자료요청 회신기간·회신율을 지표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확보 도모 ※ 부서와 사회현실에 맞는 과제발굴 및 지표설정은 적절하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성과지표를 추가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사이버 협업치안 확대', '현장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제 등을 수행 ※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위한 노력이 상당하나, 성과를 더 드러내야 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3대 전략목표 하에 22개 실천과제 수립 및 정상 추진하였고 4개 과제 추가 추진 ※ 추진계획 설정에 맞게 준수하게 수행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중독성범죄 선제적 대응', '사이버국제공조시스템 신속 정착', '민간 고급인력 확보', '광대역 수사·포렌식망 전용회선 구축' 등 지시가 아닌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함 ▶ ETRI 등과 협업하여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기술 공동개발을 추진 하였고, 중고나라·당근마켓등과 사이버사기 억제를 위한 업무협약 및 해외법집행기관, 해외IT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 ※ 해외법집행기관, IT기업 등과 협업하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노력이 돋보이나, 사이버범죄 협업의 내용이 예방과 수사는 물론 사후구제를 위한 기획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와 직결된 2개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치 초과달성 <table border="1" data-bbox="670 241 1412 376"> <thead> <tr> <th>성과지표</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사이버 첩보활용 지수</td><td>26.8%</td><td>27.0%</td></tr> <tr> <td>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td><td>385점</td><td>478점</td></tr> </tbody> </table> ※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상당함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26.8%	27.0%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385점	478점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26.8%	27.0%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385점	478점									
5. 정책효과성	우수	▶ 사이버첩보를 수집·분석하여 R&D연구, 더사이버 발간, 첨단 시스템,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이버수사 정책에 활용, 현장성 있는 정책 수립 ▶ 사이버국제공조 업무 효율화를 통한 회신율 증가 및 회신 기간 단축 등 수사 기여도 향상 ※ 정책효과를 적극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양질의 사이버 첩보만으로 사이버 범죄분야에서 대국민 수사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다소 부족해 보임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첨단시스템을 통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 대응’, ‘사이버범죄 온라인 예방교육 및 예방의식 저변 확대’,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사이버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역량 강화 기대 ※ 국내 정부기관중 경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은 최고라고 평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누리캅스 운영계획’, ‘폴사이버 챌린지 향후 계획’, ‘사이버국제공조 포털시스템’, ‘유관기관(금융보안원, 해양경찰청, 인터폴), 민간 기업(구글), 등 사이버수사국 관련 다양한 대내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의견 수렴 반영 결과에 대한 환류 결과는 미흡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사이버범죄 예방의날’, ‘ISCR 2022 개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사이버수사국 홍보관 운영’,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개최’ 등 사이버수사국 대국민 홍보 활동 전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폴사이버챌린지가 인상깊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집중단속> 악성 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등 주요 범죄에 단속역량 집중 △악성사기 검거 증가 △제2의 n번방 주범 해외 검거 등 성과 달성

단속명	단속기간	단속실적*
22년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22. 3. 1.~12. 31.	96,920건 26,201명(구속 1,269)
22년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22. 3. 1.~12. 31.	5,690건 5,007명(구속 329)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22. 3. 1.~12. 31.	2,534건 2,916명(구속 163)
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22. 3. 1.~10. 31.	1,612건 1,694명(구속 99)

- 전년 대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인원 각 9.7%, 7.7% 증가

※ 사이버사기 ('21) 23,882명 → ('22) 26,201명, 사이버금융범죄 ('21) 4,647명 → ('22) 5,007명

- 주요 검거 사례

- ▶ (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기)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복권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제공을 빙자해 피해자 6만 4천명으로부터 607억원 편취한 55명 검거(구속 4) <경기북 사이버>
- ▶ (제2의 n번방) '20. 12.~'22. 8. 간 SNS 및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 호주경찰과 합동검거, 공범·소지자 등 총 34명 검거(구속 6) <서울 사이버>

- <선거사범 대응> 대선 및 지선에 대비, 전국 277개(본청·시도청·경찰서) 관서에 수사상황실 편성하고 사이버선거사범 총 833건 1,279명 검거
- <위장수사> 위장수사관 증원(18명) 및 장비 보급·전문 교육 등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 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239건을 승인·허가받아 442명 검거(구속 34)
- <수사역량 강화> △가상자산 수사절차 개선 △게임사 영장회신 기간 단축 (160일→9일) △수사기법 개발 등 신속효율 수사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24시간 핫라인 구축 및 가상자산 지갑주소

- 확인시스템 개발로 가상자산 조회 간소화·긴급동결 등 수사 효율성 제고
-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운영(분기별 회의) △디지털성범죄 수사 연구회(매월) △위장수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최신 수사기법 개발·공유
- <피해자보호> △경찰청-중고거래 C2C 업체 간 사기신고 게시글 공유(10월~) △불법촬영물·피싱사이트 등 26,220건 삭제·차단 요청(전년 대비 300% 증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가명조서·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등 피해자 보호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악성 사이버사기 등에 대한 엄정 단속 기조 및 예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건수가 각 10.3%, 1.0% 증가
- ※ 사이버사기 ('21) 141,154건 → ('22) 155,715건, 사이버금융범죄 ('21) 28,123건 → ('22) 28,546건
- 전자상거래의 일상화로 오프라인 범죄가 온라인으로 전이하고 있으며,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IT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도 꾸준히 발생
- 강력한 대응으로 사이버성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21)3,892건 → ('22)3,079건)하였음에도 '제2의 n번방' 등 암수 범죄는 여전히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악성 사이버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중고거래 C2C 업체 등 민·관 협조 강화, 언론·SNS·대국민 문자·지역 맞춤형 홍보 등 다각적 예방으로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확대^{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위장수사 기법 고도화(R&D),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해 은밀히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발견·단속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사이버치안 집중단속, 피해자보호 및 회복적 활동 등 검거 및 예방활동이 균등하고 적절하게 지표 설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수행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 모두 완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행정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위해 노력, 가상자산 수사 체계 구축 및 협업도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성과달성도의 목표치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보통	▶ 악성사기, 아동대상 디지털성범죄 검거에 효과성 인정되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삭제차단 요청 건수로만 표현되는 점이 아쉬움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선도적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에서 가상 신분의 활용도가 높지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현장 및 전문기관 의견수렴 활동은 우수, 정책수요자인 시민 의견수렴이 없는것이 다소 아쉬움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언론을 통한 홍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루트(SNS 등)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現 독보적 수사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과(課) 단위로 신설('22. 2.)
- (조직 정비) 일반 사이버범죄에서 사이버테러를 분리하여 전담, '사전 대비-수사-사후관리' 全 과정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체계적 관리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5개팀 32명)·시도청 사이버테러수사팀(26개팀 122명), 전문인력 배치 및 사이버테러수사관 인력풀 선발(32명)·운영
- (사이버테러범죄 수사역량 강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범죄 불법행위에 선제적 대응
 - (월패드 해킹 사건) '21. 8. 17. ~ 11. 22. 間 사전에 해킹한 인터넷공유기를 경유, 702개 국내 아파트 단지 월패드에 침입하여 내부 공간을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0.1BTC(약 800만원 상당)에 판매하겠다고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1명 검거('22. 12. 경찰청)
 - (북한發 사칭메일 사건) 기자·국회의원실 등을 사칭, 악성이메일 발송하여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49명의 이메일 해킹한 北 해킹조직의 소행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과 공조로 국내 87대의 해킹경유 서버 봉쇄조치('22. 12. 경찰청)
- (피해자보호)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384건 삭제·차단요청(달성도 256%) 등으로 실질적 피해 감소 및 2차 피해방지 효과 증대
- (집중단속 추진) 랜섬웨어 공격,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테러범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단속역량 집중, 적극적 검거활동 전개
 - (단속기간) '22. 3. 1.~10. 31.(8개월)
 - (단속대상) △ 해킹(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훼손) △ 디도스 △ 악성 프로그램 유포(랜섬웨어 등)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단속성과) 553건 685명(구속 26명) 검거 / 환수금 116억 원

※ '21년 성과 : 1,075건 619명(구속 19명) 검거 / 환수금 약 50억 원

－ 주요 검거 사례

- ▶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6명 검거 및 국내 송환(구속 3명, 서울청)
- ▶ 증권정보포털 등을 해킹,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39만여건 판매한 흥신소 일당 16명 검거(구속 6명, 서울청)
- ▶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해커를 고용하여 경쟁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385개 홈페이지(주식투자·결혼정보·성형외과 등) 해킹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 6명, 전남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9년 이후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검거건수가 하향세임에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검거건수』 부분에 높은 목표치(761건)를 설정, 목표 달성에 미흡

※ 자체평가 시 1~10월 548건, 달성도 72.0%(추세치 감안 1~12월 86.5%)

최종 1~12월 631건, 달성도 82.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년 신설부서로서의 안정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 추진
⇒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KICS 통계자료 적극 활용, 객관성·신뢰성 확보된 합리적 성과지표로 개선
-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의 대표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및 사이버테러 수사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행 노력이 엿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미흡	▶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미흡	▶ 검거건수 감소추세를 감안한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이 필요해 보임
5. 정책효과성	보통	▶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대해 검거실적이 다소 부족해 보이나, 피해자보호와 관계기관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및 신속한 사이버테러 수사활동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다양한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공유, 대응력 강화 및 시도청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양한 언론보도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이버수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피사범 송환 회복) '22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40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19년 401명)까지 회복

< 연도별 도피사범 송환 현황 >

구 분	'22년	'21년	'21년	'20년	'19년	'18년
송환(명)	403	373	373	271	401	304
송환요청(명)	549	953	953	943	927	579

- 3개국(중·태·캄) '경찰협력관' 4명 단기파견('22. 8월~'23. 6월) 및 4개국(중·필·태·캄)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기간」 운영('22. 8~12월)

< 주요 송환 사례 >

- ▶ (전화금융사기) 필리핀 내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피해액 108억, 피해자 562명) 총책 송환(10.20.)
- ▶ (선박파괴)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된 화물선 폭발야기한 피의자, 최초로 선박 송환(8.31.)
- ▶ (마 약) 베트남 내 약 70억 상당 마약을 밀수한 동남아 마약 밀수 총책 송환(7.19.)

- (전화금융사기 총책 집중) 외사기능(본청· 시도청)－국수본－현지 파견자 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TF」 구성·주관(9회)
- 국내외 추적단서 공유 및 해당국과의 공조로 '22년 총책 13명* 검거·송환
* 중국 4 · 필리핀 7 · 태국 1 · 캄보디아1
- (인터폴 인프라 활용 확대) 우리청 주관 합동검거작전에 인터폴 내 주요 부서(도피사범추적과·아시아테스크 등 4개 부서) 최초 참여, 11개국 간 3,121건의 공조 요청을 통해 도피사범 총 75명 검거하는 등 합동 검거 성과 극대화
- 우범자 경고를 위한 녹색수배서 최초 발부(10월), 인터폴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CT-CAF) 조회를 통한 위험인물 식별(87명) 등 인터폴이 제공하는 주요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국경범죄 대응

- (유관기관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분야별 국제범죄 동향 보고서(6건) · 신종 범죄수법 수배서(80건)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식약처 등 15개 부처에 배포하여 신종 수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종 범죄 예방 및 대응
 - － 문체부(저작권보호과)의 인터폴 편당(I-SOP)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범죄 대응, 관세청(국제조사과)의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 최초 활용
- (인터폴 내 영향력 확대) '64년 인터폴 가입 이래 최초로 인터폴 총회장에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발표(외사국장)하여 참석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입지 공고화
 - － 인터폴-경찰청 공동주관 국제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99년 인터폴 총회 개최 이래 최대규모), 인터폴 현장 등 주요 법령 개정논의 참여(지배구조개선탄)하여 인터폴 내 영향력 확대
- (글로벌 치안활동 중심국가 위상 정립) 인터폴·SELEC·아프리폴 등 국제기구를 발굴·분석, 전문가 양성·홍보 등 「국제기구 등 해외파견 확대 추진전략」 수립
 - ※ 청장님 보고회 개최 및 SELEC·아프리폴에 국장님 서한문 송부
- (해외파견자 증원·선발·파견) 미얀마(1)·가나(1)·리비아(5) 경찰주재관 7명 증원·선발·파견 및 상반기(8)·하반기(14)·카타르(1) 경찰주재관 선발·파견
 - － 국제성 범죄 대응 예산 2억 6,900만원 확보, 중국(2)·태국(1)·캄보디아(1)에 경찰협력관 신규 파견, 한국-태국 경찰청 상호파견 MOU 추진약정서 체결
 - － 인터폴 사무총국(리용·싱가포르)에 인터폴 협력관 3명 신규 파견, 필리핀 코리안테스크 3명·남수단 UN PKO 3명·치안전문가 UAE 2명 교체파견
- (재외국민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통합 신속대응팀 운영 기본 계획 수립·인력풀 확대(인권보호·피해자지원·수사 분야 신설), 사건사고 대응 훈련 실시
 - － 외교부와 파트너십 확립을 위해 영사조력체계 고도화 협업과제 제안, 재외국민보호 요청(대만 해역 선박 조난 실종자 신원확인·카타르 월드컵 임시영사사무소 파견)에 적극 협조
 -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개정('22.8.1.)으로 해외안전계를 직제화하여 외사국 내 여러 기능에 분산되어 있던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해외안전계 고유사무로 규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부분에서 국수본 등 수사기능과의 협업도 횡수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
 - －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는 주로 외국 사법기관 및 해외 파견자를 중심으로 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업 및 소통 부분이 다소 미흡하게 평가되는 경향
- (인터폴 D/B 등 타부처 활용) 국제범죄 동향보고서 배포, 인터폴 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국내 유관부처들에 인터폴이 제공하는 D/B 등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은 미미
-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 보이스포싱 외에도 다양한 전문기능의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부 제시
 - － 경찰협력관 파견은 외국 사법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국가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국수본 등과 소통이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국수본 등 수사기능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23년부터 '도피사범 추적·검거 TF(가칭)'를 구성 예정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수사 기능과의 의견공유 및 해외도피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 － 국제공조 성과 홍보시, 우리청 주요정책의 전략적 홍보와 함께 수사 기능 성과 부각 등 협업적 홍보도 병행, 수사기능과 소통 기회 증대
- (인터폴 D/B 등 타부처 활용) 인터폴 인프라 활용 부처(부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관련 부서 담당자와 컨택포인트를 구축·유지
 - － 인터폴-해당 부처간의 업무 관련성을 주지시키고, D/B 활용 확대·합동단속 참여 등 독려하여 인터폴을 활용한 초국경범죄 대응 유도
-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경찰협력관 신규 파견지 선정을 위해 국수본 유관기능(경제범죄수사계·마약범죄수사계)과 국제공조 수요 등 사전 논의
 - － 국수본 유관기능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베트남·말레이·라오스·호주·네덜란드) 대상 경찰협력관 신규 파견 우선 추진 및 세부 필요성 분석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평가위원 제언)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도피사범 검거 등 지표 설정이 중요과제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평가위원 제언) 정책과제 전반에 대한 노력도가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 모두에 있어 잘 나타나 있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평가위원 제언) 본 추진일정표에 따르면 정상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여짐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평가위원 제언)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들이 잘 적시되어 있으며, 대내외 협업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원 제언) 흠잡을데 없이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음. 다만, 인터폴 교류시 우리 경찰청 내 각 담당부서 전문가를 보다 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평가위원 제언) 도전적인 목표치였음에도 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여짐.
5. 정책효과성	보통	▶ (평가위원 제언) 흠잡을 데 없이 매우 우수. 다만, 수사에 있어서는 담당부서가 훨씬 전문적인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터폴 협력 시 동참 또는 의견수렴을 해주시는게 좋을 듯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평가위원 제언) 신속대응팀 운영, 국외에서의 특별신고 자수 기간 운영 등 다양한 정책개발 등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평가위원 제언)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포싱 외에도 여러 전문기능과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평가위원 제언) 다양한 방식의 홍보노력이 돋보임(인터볼과 공동보조자료, e-북 플랫폼 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문화치안활동 전개〉

- (체류외국인 보호·지원) △범죄피해 이주여성 협의체 확대(152⇒192개서)
△지원대상 확대(유학생·다문화가정 자녀 등) △위원정비 등 내실화 추진
-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사례 429건에 대해 맞춤형 지원 실시, 우수사례 포상·공유 및 간담회(25개서)를 통해 현장 관심도 제고
- (치안 네트워크 형성) 범죄예방교실(7,791회), 운전면허교실(549회), 도움센터(394개소), 자율방범대(2,573명)·치안봉사단(2,205명) 운영으로 치안안전망 구축
- (치안접근성 강화) △통역 인력풀 재정비(3,385명) △전문화교육(540명)
△수사통역 ‘종합지침서’ 개편을 통해 통역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한국외대 협업, 특수외국어 교육(16개 어권, 950명) 실시 △원어민 전화회화(343명)·검정시험(1,044명) 실시, 외국인 사건·사고 대응역량 강화

〈외사정보 역량강화를 통한 선제적外事정보활동 추진〉

- (외사정보 전문성 강화) 외사요원 대상 외사첩보 수집·작성요령 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첩보 평가방식에 유가치율을 도입하여 첩보의 질을 향상
- (공공안녕 위험정보 수집) 체류외국인 관련 위험정보·범죄정보, 주한공관 상황정보를 선제적 발굴·분석, 유관기능에 통보하여 위험요인 사전 차단
 - ▶ (위험정보) △외국인 유흥업소 실태 △외국인 위장결혼 브로커 △러-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내 위험요소
 - ▶ (범죄정보) △외국인 사기·조직범죄 △국내 난민 신청자·인정자 위험인물 △체한 무슬림 커뮤니티 내 테러위험인물
 - ▶ (상황정보) △러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한 공관 인근 집회 계획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관련 지역주민 반발 분위기
- (외사 안보정보 수집) 고가치 대테러·방첩 첩보 입수, 안보 위해요소 차단
 - ▶ (대테러) △UN 지정 테러단체 추종, 비밀모임을 조직해 테러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크인 강제퇴거
 - ▶ (방첩) △기자로 위장한 러시아 정보요원 의심자 △대사관 연계 정보활동 의심 파키스탄인 첩보
- (치안정책 수립 지원) 국내외 치안 현안 관련 해외 사례 및 우수시책 분석·공유, 유관 기능 정책 수립·추진 적극 지원
 - ▶ (우수정책) △주요국의 노령층 자전거 사고 예방대책 △주요국 사제총기 사건 발생 현황·규제방안 △주요국 흥기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 매뉴얼 △해외 신종 마약류 밀반입·유통에 대한 각국 대응책 등

〈대테러·방첩정보활동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국가안보 확립〉

- (안보 전문인력 양성) 경찰서 ‘외사 안보정보 연구회’ 선발(87명) 및 시도청 외사안보정보관(68명) 대상 순회 컨설팅 실시로 전문성 제고
- (대테러 협력망 구축) 인니·인도 대사관, 美 FBI 산하 테러리스트 감시센터, UN 대테러실 등과 실무회의 개최, 대테러 협력체계 강화
- (방첩 교육·홍보 강화) 신임·외국어 전문요원 등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방첩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주도 맞춤형 교육으로 방첩의식 제고
- (테러 예방) △ 인터폴·법무부 등과 협업, 테러위험인물 기소·강제퇴거·입국금지 △ 방심위와 협의, 테러사이트 접속 차단
- (방첩 취약요소 대응) 국내 방첩기관과 협력, 對韓 정보활동 외국인 대상 △ 합동 모니터링 △ 고가치 정보 공유 등 방첩활동 진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축에 있어 질적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대내 정책홍보에 비해 언론 등 대외적 홍보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문화시대에 대비하여 ‘다문화치안활동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외사경찰 활동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
 - － 법무부·방첩사·UN 대테러실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상호견학·회의·위탁교육을 추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 ’23년 시도청 성과지표 평가항목에 ‘대외홍보’ 실적을 추가, 외사경찰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성적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컨설팅 이후 내부역량을 통한 지표로 적절히 설정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제도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모든 과제(1~10월, 17개)를 지연 없이 기한 내에 수행 완료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노력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였고,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업무협업도 잘 이루어짐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준수한 정책 목표치 설정 및 성과달성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5. 정책효과성	우수	▶ 다양한 분야 첩보 발굴 등으로 관계부처의 정책시행에 도움을 주었고, 테러위험인물 강제퇴거·입국금지·테러사이트 차단을 통한 국가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행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효과를 보임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국외 위탁교육 신규 발굴,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임, 다만, 중장기적 정책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평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현장의견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이 성실히 이행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국정원, 법무부 등과의 협업, 다문화치안활동 언론홍보 노력 등 대내 정책홍보에 노력하였으나, 언론 보도 등 대외적 홍보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외국경찰·국제기구와의 고위급 교류 및 초청행사 등 다양한 교류협력 대면활동을 통해 재외국민보호·국제범죄 공동대응 등 글로벌 치안 협력기반을 구축
 - － 경찰청(차)장 △UN경찰청장회의·두바이 세계경찰청장회의·IACP 총회 참석 △오만·인터폴·유로폴 총수회담 등 고위급 교류 적극 추진
 - － △아세안 리더십 포럼 및 수사역량강화 연수 △ODA 연계 고위급 초청 △몽골경찰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국제 치안협력 교류의 장 마련
 - －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 및 UNPKO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수립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찰의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전개
-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경찰 국제협력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 － 국제협력사업(ODA) 예산증액을 위해 외교부·기재부 설득 등 적극 대응, 정부안 반영(최초 3건→8건*) 및 KOICA 신규사업**(2건) 추가 발굴
 - * 몽골·방글라데시·피지·캄보디아·베트남 등 자체 8건 정부안 반영('23년 24.6억, 10%↑)
 - ** △우즈베크 교육훈련장 △필리핀 범죄수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2건 50억 확정
 - － 16개 분야 59명의 국제협력 치안전문가를 선발(5월), 표준 교안개발 등 치안시스템 전수 시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교육 제공
 - － 양자·무상원조 중심에서 UNDP 등 국제기구 협력·유상원조(EDCF) 사업발굴로 대상국 범위 확대,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 지향

-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한국경찰 영문자료 작성 등 홍보전략 다각화
 - － △ 주요정책 영문보도자료(10회) △ 한국경찰 영문 홍보영상·PPT
△ 한국경찰 장비&시스템 브로슈어(국·영문 각500부) △ 경찰청장
정책방향 해설집 번역 및 영문 프로필 작성 등 홍보 전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환류를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이 외교부·KOICA 등 외부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대내적 의견수렴 확대 필요
- 국제협력사업(ODA) 및 외국경찰교류 등의 업무 확장성은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제치안협력 강화 관련 정책환류 향상을 위해 내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각적인 업무추진 방안 모색 필요
 - － '23년 국제경찰청장회의 관련, 경찰의날 행사·치안산업박람회 등
동시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관련부서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협력을 강화
 - ※ 경찰 국제협력활동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시행('23.1월 예정)
 - － 경찰 ODA 사업수행은 교육기관 및 시도청 중심으로 위임하고
경찰청은 △ 치안 ODA 의제화 △ 발전전략 수립 △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집중, 유기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통강화
 - ※ '23년 경찰청 치안 ODA 사업수행기관 공모(서울·경기남부 등 7개 기관 선정)
- 치안 ODA 규모 확대 및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유상 ODA 사업
수행 등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확대를 추진
 - － 국제회의(행사) 개최 계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안
발굴 및 치안 ODA를 통한 연계 및 홍보방안 적극 발굴·시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근거) 부서업무와 정책과제의 대표성·연계성이 높으며, 정책과제 목표에 부합하게 성과지표 선정됨. 국정과제(3개) 및 경찰청장 전략·정책과제에 포함되는 등 연계성 인정됨. 지표설계 또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근거) 치안한류의 세계화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이 사료됨. 비대면 수단을 활용한 행사 추진이 탁월하며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근거)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수립한 17개 추진계획 중 16개를 정상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함(1개는 외국 정부방침상 연기)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근거) 내·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익창출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됨. 부서의 특성상 타부서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적극행정의 노력을 기울인 여러 성과가 돋보임 ▶ (제언)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외국경찰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 제시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근거) 국제치안협력의 정책과제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인정됨. △ 국제교류협력지수 △ 치안인프라전수지수 △ 홍보지수 등 3개 지표 모두 목표치 100%이상 달성함 ▶ (제언) 3년 대비 평균치 이상을 목표치로 선정하였으나, 전년대비 비교시 다소 낮은 지수로 고려됨. 타부서와 비교할 때 성과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함
5. 정책효과성	보통	▶ (근거) 치안교류협력 및 국제협력사업(ODA) 확대 등으로 재외국민보호 및 글로벌 치안강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제언) 장비전시회를 통한 한국 장비수출은 우수한 정책효과로 인정되나 과거의 사업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내용 제시가 필요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근거) 치안강국 이미지 제고 등 많은 교류를 통해 높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한국 치안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과 보다 많은 국가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근거) 외교부·KOICA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돋보이며,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외부 수요조사 및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근거) 다양한 행사추진 등 국제치안협력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거사범 단속) '22년 대선·지선이 연이어 실시된 만큼, 공명선거 분위기 구현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 추진
 - 선거 일정에 따른 체계적인 단계별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선거 사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지휘,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대선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여 732명(구속 8명) 송치
지선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여 1,650명(구속 29명) 송치
- (부패사범 단속) 고질적 부패행위,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행위 등 모든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에 기여
 - (4대 부패범죄)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특별단속 추진 중 ⇒ 총 2,873명 검거(구속 43명)
 - (무고 등 거짓말범죄 단속) 국가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악성 무고 범죄' 관련 자체 인지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수사력 낭비 방지
 - (부동산 불법행위)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3. 21. 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단속 추진 중
-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 수사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 및 지역협의체 구성·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
 - 공정한 채용질서 회복 및 건설현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중

- (부패사범 수사역량 강화) '22년에는 수사권 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되는 등 부패사범 수사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
- 주요 부패범죄 수사 관련 검찰·공수처 등 반부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및 공조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음
- 검찰선거사건 수사 관련 논의를 위한 경·검 정례 실무협의회 실시, 공수처이첩·통보 사건 관리 및 사건처리 절차 전자화·KICS 연계 구축 등을 통한 쏠 수사 과정에서의 업무효율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2년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더불어, 양대 공직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선거사범 대응에 수사력이 집중되었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등 최우선 단속과제로 추진하였음
-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선거사범 대응에 전면적으로 동원된 상황에서 필수 중점 단속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집중(특별) 단속 추진은 다소 미흡하였음
- 반부패·공공범죄 분야 수사역량 강화 관련, 각종 대면 교육과정 및 회의 등 운영이 어려워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 진행 중인 「4대 부패범죄」,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 일선 현장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 안전비리 △ 의료·보건 범죄 △ 환경범죄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반부패·공공 범죄에 대해서도 시기별·테마별 단속 전개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대표성 등 적정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계획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모든 목표치 초과 달성 등 노력함
5. 정책효과성	보통	▶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각종 현안 대응에 노력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다양화 등 의견수렴 진행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즉시성 있는 홍보를 위해 노력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과제인 마약류 범죄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에 강력 대응 결과, △마약류 사범(27.9%), △조직폭력사범(8.0%), △외국인범죄(7.7%) 초과 달성
 - ▶ (마약류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기간 2개월 연장 총력 대응
 - ▶ (조직폭력 범죄) 조직폭력 범죄 기승에 따라 일제 점검 기간을 특별단속으로 전환 단속 강화
 - ▶ (외국인 범죄)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외국인 입국 및 범죄 증가 대비 단속기간 1개월 연장 대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제범죄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전국 국제범죄 수사 실무자 대상 현장 간담회 및 팀장급 회의를 실시 후 수렴한 의견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 내역이 없어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음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유기적인 정책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방안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마약류사범(27.9%), △조직폭력사범(8.0%), △외국인범죄(7.7%) 등 3개의 정책과제 지표 모두 초과 달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조폭, 외국인 범죄’로 국민 불안감 증가 여론에 따라, ①마약단속은 정부기관 합동 연말까지 총력 대응, ②조직폭력배 일제점검도 연말까지 연장, ③외국인 범죄 단속도 1개월 연장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 목표 달성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정책과제 추진 일정 기한 내에 모두 완료, 최근 범죄 동향에 맞춰 마약, 조폭, 외국인범죄 모두 단속 및 점검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범죄 대응에 경찰력 총동원 집중단속, 업주의 마약류 범죄 방조 행위도 능동적으로 선제적 대응, 불법체류 범죄피해자 보호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또한 마약단속 관련 국무조정실 등 14개 정부기관과 시·군·구청,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 등 4개 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과제 실효성 추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마약, 조직폭력, 외국인 범죄 3개 성과지표 목표치 초과 달성 ※ 마약류사범(27.9%), 조직폭력사범(8.0%), 외국인범죄(7.7%)
5. 정책효과성	보통	▶ 성과지표 관리에만 집중하는 편면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정부부처 협업 등으로 마약·조폭·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 실행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정책 성과 창출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정부기관 협업 등을 통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여 드러나는 지표도 우수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수사환경 개선, 제도 개선 추진, 범죄예방 활동 등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통한 범죄 감소 효과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부 각 부처 경찰청 내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범죄 관련 공조 회의 등 정책과제 수행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온·오프라인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신고활성화 유도, 사회이목이 집중된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사 공보를 통해 추측성 보도 방지 및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정책홍보 실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제범죄 기획수사

-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② 사이버사기, ③ 유사수신, ④ 전세사기, ⑤ 보험사기, ⑥ 투자·영업 등 기타 조직적사기, ⑦ 다액 피해사기를 악성사기로 규정, 8. 16.~12. 31. 총 14,255건·17,790명 검거(구속 1,203)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국토부와 협업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7. 25.~12. 31. 399건·884명 검거(구속 83)
- (전화금융사기 단속)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검거, ▲8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등 종합적 단속을 통해 ‘총책 등 조직 상선’ 657명 검거(전년 대비 24.7%↑)
-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기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중점 단속하여 1~12월 1,963건·4,646명(구속118)
-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시도청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22. 7~10월간 870건·3,203명 검거(구속55)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보조금 허위신청,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공무원 비리 등 단속, 1~12월 609건·1,338명 검거(구속8)

○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

- ▲조직원 검거, ▲범행수단 차단, ▲피해예방, ▲유관기관 협업, ▲제도개선 등 발생 감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 '22년 총 21,832건 발생(전년 대비 29.5%↓), 피해액 5,438억원(전년 대비 29.7%↓)

○ 범죄수익추적수사 활성화

- 경찰서를 포함한 전 수사부서로 전담팀 운영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전문역량 강화 등 범죄수익 보전 활성화 추진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건수 1,203건(전년 대비 40%↑), 일선 경찰서 수사팀 자체 161건·218억원 보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성과 우수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나, 일부 위원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 제고 필요' 등 더 적극적인 성과 창출 요구
- (원인분석)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책 등 범죄조직 특별단속,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등 추진하였으나, 범죄조직은 수법을 지능화·고도화하여 계속 범행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해외 범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범죄조직 분포 국가와의 공조에 한계가 있었으나, 방역 완화추세에 따라 향후 국제공조 활성화 예정
 - ※ 범죄조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중국의 경우, 입국 시 목적을 불문하고 내·외국인 모두 별도 장소에서 2주 격리 요구 ⇨ 공조회의 다수 취소
- 통합신고·대응센터 신속 설립 및 운영
 -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대응센터를 '23년 중 설립해 범죄 대응역량은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함은 최소화
 - ※ 운영예산 총 11억원 확보 完 / 직제 관련 행안부 협의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①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②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③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등 지표 설정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단속·예방·제도개선·타기관 협력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상 주요 과제 전부 실시하여 100% 달성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각종 기획수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유관부처들과 협업하였고, 그 외에도 발생 감소,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적극행정 노력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①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12명 설정, 13.7명 달성), ②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2.8%설정, -19.16%달성), ③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30.4억원 설정, 31.6억원 달성) 등 3개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100% 달성
5. 정책효과성	우수	▶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단속 등 시의성 있게 대응하여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100% 달성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단순한 단속 외에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전개하고,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추진하는 등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일선 수사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 환류하였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보도자료 다수 배포하여 경제범죄 피해사례 및 단속 계획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매매 예방 활동 강화) 점점 지능적 음성화되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공급·수요 접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여 사전차단 예방활동 강화
 - － 주요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차단<'22년 총 9개 사이트 운영자검거 및 차단>
 - － 성매매 전단지·온라인 광고 전화번호 통화 차단 및 이용정지로 알선자와 구매자 간 연락 차단<'22년 총 6,466개 전화번호 차단>
- (불법 게임장 단속역량 강화) 풍속 요원의 전문성 및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체계 구축, 현장 대응력 강화
 - － 게임위 권역별 사무소(5개소)와 권역 내 위치한 시도경찰청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지원> 게임위 전문 인프라(교육장, 강사) 활용, 상시교육 지원
 <현장 지원> 경찰의 현장 지원 요청시 게임위 사후관리팀 적극 지원

- (재영업 차단)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 후 재영업 가능 요소 제거 조치(△범죄수익금 환수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성매매 건물주입건) 강화
 - ※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재영업 차단활동의 디딤돌」 발간 배포('22. 6. 1.총 600부)
 - － 전년 比,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187%, 성매매 건물주입건을 위한 사전 통지문 발송은 14.5% 증가

【재영업 차단 조치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원)	217억	623억	187%↑
건물주 통지(건)	619	709	14.5%↑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최종점수 비율^{89.58%}을 밑도는 평가항목은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등^{85%}
△향후 기대효과^{83%}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86%} 3가지로 분석
- －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등) 관리과제로 설정한 ‘풍속사범 단속’은
부서의 대표적 업무이나 편중된 경향이 있어 課 업무 평가 한계 有
- － (향후 기대효과) 정책과제로 인해 대내·외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추상적으로 예측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신뢰성 결여
-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업무 특성상 ‘단속 결과 언론보도’ 방식을
주로 활용 중이나 사전예방 활동 및 대내적 홍보 미흡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 특정 업무 편중 완화 △정책효과 예측의 객관성 확보
방안 강구 △홍보 내용 및 활동의 다양화로 정책과제 고도화 추진
- － (추진업무 추가 설정) ‘풍속사범 단속’ 외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부서(課)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업무를 추가 설정, 대표성·연계성 강화
- － (기대효과 예측의 객관성 담보) 정책과제 기대효과를 정량화하거나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 향상 방안 마련
- － (홍보 활동 강화) 예방활동 홍보 강화로 국민적 경각심 제고,
대내 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병행 내부 공감대 형성 극대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근거) 대표적 과업으로 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정책과제 설정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표 마련 ▶ (제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총포·화약류 관리 등도 성과지표에 추가 고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근거) △불법 풍속영업 단속 및 근원적 차단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자치경찰제에 부합한 계획수립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 (제언) 정책부서로서 활동을 더욱 부각해 주기 바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근거) 추진계획을 모두 수행하여 정책과제 목표 달성 기반 마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근거) 시스템 개선 및 지침서 발간, 성과지표 개선 등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함 ▶ (제언) 기존 예방 활동 사업에 대한 기능개선 노력은 우수하나 업무 확장도 필요해 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근거) 목표치의 적극성을 '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8% 초과 달성하였음 ▶ (제언) 목표치가 3년 평균치의 0.2점 상향된 것은 인정되나 전년 대비 낮은 수치이므로 이점도 고려 필요함
5. 정책효과성	우수	▶ (근거) 대외적으로는 근원적 차단조치 및 단속역량 강화로 불법영업 근절 효과, 대내적으로 풍속요원 유착비리 근절 및 자치경찰제 정착 노력으로 안정적 과업 수행 환경 조성 효과 예상됨 ▶ (제언) 단속활동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 外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필요해 보임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근거) 생활질서 확립,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 및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경찰상 제고 기대됨 ▶ (제언) 정량적인 수치를 추가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근거) 대내외 각종 회의·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 내용 즉시 조치하여 환류하는 등 노력, 특히 전문위원 컨설팅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지표 개선함 ▶ (제언) 성매매 단속을 위한 내부 의견수렴 필요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근거) 언론자료 배포 및 대내외 각종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를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함 ▶ (제언) 국민 혹은 대내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 경찰 비전 선포
 - － ‘국민 중심 인권 경찰’ 비전을 바탕으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5개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3개 세부추진과제)
 - － 인권경찰상 확립기반 구축 및 국민의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
-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시행
 - － 경찰의 불법·부당한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동료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견제를 통한 인권보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
 - － 전국 258개 경찰서의 20%인 53개 경찰서를 시범운영署로 선정, 약 18,500명 교육 완료('22.7.1.~12.31.)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동료개입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및 강사 워크숍
 - － 동료개입 프로그램 시범운영 기간 중 확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기인사 등 인사이동으로 강사 및 현장 메신저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23년 정기인사 이후 인력풀 재정비 및 강사 워크숍 진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료개입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및 강사 워크숍
 - － 동료개입 프로그램은 '22. 12월 말까지 완료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없이 '23년 상반기 전면시행 방안 추진
 - － '23년 정기인사 직후 강사 인력풀 재정비하여 1분기 중 강사 및 메신저 워크숍 진행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인권보호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한 점, 인권영향평가 반영률을 지표화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한 점 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평가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시기별 맞춤형 주요 정책을 일정에 따라 적극 수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경찰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기관 최초 동료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노력도가 높이 평가되며, 대내외 협업사항도 내실있게 운영된 것으로 보여짐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달성도는 '달성' 상태이며, 목표치가 '추세치 이상', '전년도 실적치 이상' 수준으로 설정되어 목표치 적극성에 있어서도 우수하게 평가됨
5. 정책효과성	보통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방향성에 따라 각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권보호 강화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동료개입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토대로 향후 정책효과가 더욱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점이 우수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각종 언론보도와 인권영화제 등을 통해 경찰청의 인권보호 정책을 적극 홍보한 점이 인정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준법역량 강화) 준법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 제고를 위한 ‘준법지원’,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 적극 추진
 - － (준법지원) △ 정보자료 모니터링 △ 현장점검·간담회 △ 실태진단 등
 - － (법률지원) △ 집시법·시행령 개정 △ 집시법 개정 토론회 등
- (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후속 조치 △ 실무 관행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 내실화로 인권 보호 및 경찰행정 신뢰도 제고
- (정보교육) 정보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 교육 시스템 발전 및 원격교육 병행 등 양질의 교육 확대(총 114회·5,087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점수가 상대적으로 미흡(4.1/5)했던 것으로 확인
-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이루어낸 실질적인 불편해소·편익증진 등 정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확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준법역량 강화) 준법 정보활동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준법 역량 강화 노력 지속
 - － ’23년은 본청 주도의 준법 교육·점검과 동시에 시도청·경찰서 준법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준법 관리 업무 추진
- (홍보 강화) 집시법령 개정과 관련,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 토론회 △ 언론보도 등 대내·외 홍보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부서업무와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이 높음 - 관련 지표의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계획수립이 적절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등 고 난이도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사전 계획한 추진일정 준수(全 평가위원 만점 부여)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신원조사 비대면 시스템 구축, 집시법 개정 등 적극행정 노력은 인정되나, 관계 기관과의 협업이 미진하다는 제언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세부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 △전문화 교육 지표가 정성적인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렵고 △달성하기 쉬운 건수 위주의 지표 설정이 아쉽다는 제언
5. 정책효과성	보통	- 준법역량 강화와 신원조사 오류율 최소화, 정보교육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인 - 정보 교육뿐 아니라 높은 정보가치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준법역량 강화 활동을 통한 예산 절감, 국민 편의 증대 등 효과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 - 대내에 비해 대외 의견수렴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제언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업무 특성 상의 홍보 한계 속에서도 다양한 홍보 노력 - 다만 대내외 홍보노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집회제한 해제 · 정부출범 등으로 집회가 크게 확대*되고, 노동계의 집단불법 · 진영간 경쟁적 집회 개최가 치안부담을 가중하였으나
 - * ('21→'22년) 1만명 이상 집회: 3→45건 / 참가인원: 1,338,949 → 3,414,013명(2.5배 ↑)
- － 선제적인 정보활동과 유관기능 · 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현장의 법 집행 지원, 공공안녕위험 최소화
- 한편, 안전사고 · 마찰 등이 예상되는 집회시위 및 집단민원 현장마다 대화경찰을 배치, 변수 예방 및 인권 · 안전 확보에도 성과
 - 인력풀: 1,677명→1,714명 / 현장배치율: 66.0%→89.3%
 - 6개월 장기농성 주민들 자진해산...공권력 대신 대화로 해결(10.28 중앙)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 자체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던 가운데, 목표를 초과 달성(107%~121%)하고 집회문화 개선 등 상당한 정책효과 거양
- 다만, 일부 위원이 사전정보활동 · 홍보(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대화경찰) 등 과제 수행 노력이 일부 부족했다고 지적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집회시위 및 집단갈등 관련 사전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의 소음 ·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과 대화경찰을 적극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현장에서 뛰는 정보상황과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제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잘 전달되었다 판단됨 ▶ 정책과제와 지표가 적절히 연계 및 설정되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대규모집회·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증가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올바른 집회관리 및 장애요인 극복 등 노력이 돋보임 ▶ 공공의 안녕 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전정보활동이 아쉬움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늘어난 집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중요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화경찰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도전적인 성과지표였음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해왔다고 판단 되어짐 ▶ 적극적 대응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우수	▶ 대화경찰 제도를 통해 불법시위가 크게 감소 / 대화경찰의 역할을 통한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 보장 정책 효과가 기대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변화하는 사회환경 및 집회시위 관리에 능동적 자세를 통해 다양한 집회 관리 대응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돋보임 ▶ 대화경찰이 집회관리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쉰 과정에서 대내외 의견 적극 수렴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집회시위관리의 홍보 중 시민불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의 홍보방안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엄정대응 보도자료 배포에도 불법시위 소음 여전히 심함 ▶ 대화경찰에 대한 직접적 홍보가 아쉬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사 상 인권보장 강화) 사건관계인의 인권·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책·지침을 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최소화
 - (수갑가리개 사용범위 확대) 유치인 호송시에만 사용하던 수갑가리개를 체포·구속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전국 7,987개 배부)
 - (정보공개 기준 완화) 영상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사건관계인 방어권 보장 강화(기존에는 시청·녹취로만 제공)
- － 특히,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 권리보장 강화
 - (수사서류 점자문서 제공) 시각장애인 요청시 수사서류를 점자문서로 제공하고, 비용은 경찰관서에서 부담하도록 지침 수립
 - (외국어 수사서류 번역) 외국인 체포·구속·동행 요청 시 체포·구속 통지서 등 수사서류 3종에 대해 16개국 언어로 번역·제공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조사 매뉴얼 개정, 전국 전담조사관(2,260명) 배부
- (인권 최우선 수사환경 조성) 인권보호에 기반한 시설 개선·확충·시스템 설계를 통해 인권침해 방지·수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 (유치장 환경개선) 유치장 內 △밀폐형 화장실 △강화플라스틱 투명창 △지능형 CCTV 설치 등 유치인 인격권 보호 및 안전사고 요인 사전 차단('22년 5개소)
 - (영상녹화 시설 등 확충) △영상녹화실 증설(10개소) △진술녹음장비 추가보급(253대) △영상녹화·진술녹음 통합저장장치 구축
 - ※ 영상녹화·진술녹음 건수 : '21년 106,363건 → '22년 113,650건(+7,287건 / 6.9%↑)
 - (행동환경 설계) △사적접촉 통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청탁신문고 단축버튼 신설 △KICS 유의사항 팝업창 제작(아너코드 이론 적용) 등 사적접촉 통제·사건문의 금지 강화
- (선제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안전조치 개념을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까지 확대하고, 보호수단 확대·고도화로 추가피해 방지
 - (고위험 가해자 신속 조치)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신속·집중 수사 사건' 지정, 가해자 대상 체포·구속·접근금지 등 신속 조치로 추가 범행 시도 차단
 - (보호수단 고도화) △위치확인 성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도입^{22.12.26.} (총 3,700 → 10,000대)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개발 등

- 月 1회 경찰서장(수사과장) 주관 안전조치 점검 회의 개최 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조치 및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

※ 안전조치 실시 : '21년 24,810건 → '22년 29,365건 (+4,555건 / 18.4% ↑)
스마트워치 지급 : '21년 10,989건 → '22년 14,204건 (+3,215건 / 29.3% ↑)

- (긴급단계 지원 강화) 피해 발생 직후 긴급지원을 위한 **인력·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정책 운영 확대**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 도모

- (인력·시설 확충) △ '22년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추가 채용(35명) △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케어센터' 추가 조성(3→6개소) 등
- (지원정책 운영 확대) 회복적 경찰활동(200→230개서) 및 범죄피해평가제도 (208→230개서) 운영 확대로 실질적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행안부령 제정)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하여 행안부령으로 제정·추진하였으나

- 법제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독자적 인권보호 규정마련 차질, 후속 조치 예정이던 「인권수사 매뉴얼」 또한 수립 지연

* 입법예고(2.15.~3.28.)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의뢰(4.8)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사 중

- (안전조치 고도화) '22년에는 한정된 예산을 극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 △ 지능형 CCTV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조치 수단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나,

- △ 신형기기 도입으로 인한 계약절차 등 추가 검토 △ 안면인식·인공지능 기술 정교화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 지연

※ △ 지능형 CCTV 시범운영 (8월 → 9월) △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 (9월 → 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사인권 시스템 구축) △ 신규 범죄유형 △ 인권위 진정·권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인권침해 리스크 발굴, 선제적 대응

- (데이터 분석) △ 인권위 진정·권고(年1,300건) △ 판례 △ 범죄통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요인을 발굴·개선
- (대내외 인권진단) ① <대외> △ 전문가·시민단체 참여 토론회·자문회의 개최 △ 교차분석·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방식을 개선한 변호인 모니터링 실시 ② <대내> 기능간 협업을 통한 시도청 인권진단 등 투트랙(Two-Track) 인권진단 추진
- (인권 교육) △ 교육기관 내 인권·청렴 과목 개설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진단 결과 공유 △ 인권매뉴얼 수립을 통해 인권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업무개선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조치 고도화로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통계·사례분석을 통해 계량화·표준화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발, 신속·정확한 위험성 판단으로 고위험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 (안전조치 대시보드) 폴넷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서별 △안전조치 건수·기간 △추가피해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 안전조치 관리 강화
- (민간경호 지원) 스톡킹 등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으로 추가 범행 방지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 전까지 보호 공백 해소 ('23년 수도권 시범 도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경찰청 주요 정책과제 등과 연계하여 각 성과지표의 대표성·연계성·적정성을 모두 확보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인권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대부분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나 △외부기관 평가 지연 △공정한 계약 수행 △사회적 이슈 대응 등으로 일부 과제 추진 지연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증액 등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고, 주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기관·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4개 성과지표 모두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함 ※ △제도개선(110%) △교육·홍보(103%) △보호·지원(110%) △회복적 경찰활동(104%)
5. 정책효과성	우수	▶ 선제적·적극적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한 추가 범행 방지 및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공정한 수사활동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사회적 변화를 예측·전망하여 새로운 인권침해 리스크를 발굴·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고도화하는 등 미래치안 선도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 수립·추진·점검·환류 전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 및 수용도를 제고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폭넓은 대상과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전개, 정책추진에 대한 대내·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화물연대 불법상황 조기 해소)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 등 소기능 총동원,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24시간 대응
- － 非조합원 폭행·운송방해, 주요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현장 체포(7명) 및 신속 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부 위원은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와 기동대의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 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파 안전관리) 이태원 참사(10.29.) 후 인파관리 개선 TF를 구성,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인파관리 특별교육 추진
 - ▶(매뉴얼 제작) 美·日 사례·매뉴얼 벤치마킹, 경찰·지자체·민간에서 사용가능토록 개발
 - ▶(특별교육) 총경급, 뽕경비·112과장, 기동대장 등 총 1,200명, 안전분야 교수 초빙 교육
- (안전장비 도입) 인파관리 등 안전활동에 경력 지원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와 피복을 개발·확충
 - ▶(방송조명차 고도화) 차량 루프에 경찰관이 탑승, 모니터링과 안내방송 수행<日, DJ 폴리스>
 - ▶(고공 타워) 지상 10m 높이에서 카메라·조명·방송장치 이용, 상황관리<美, Sky Watch>
 - ▶(안전관리 피복) 기동복 보다 시인성·활동성이 우수한 소재의 피복<日, 재난경찰>
- (전문인력 양성) 공공안전분야 국내대학 위탁교육 과정 및 부서장(총경~경감) 대상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인파관리 과목 신설
 - ▶(위탁교육) <장기> 석사 과정으로 인파·안전관리 및 AI, 로봇, 드론 등 교육 / <단기> 2~3개월 과정으로 인파·안전·위기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직급별 기본교육) 인파관리 통제기법, 현장대응 요령(23.3월~, 경찰인재개발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설정 및 컨설팅에 맞는 적절한 목표설정이라 보여짐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대통령실 이전에 대책기구 구성, 예비비 확보 등 장애 극복 노력이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 지연없이 정상적 추진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의경 폐지·대통령실 이전 등 치안환경 변화를 혼성 기동대 운영 등의 대안 도출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경비부서를 선호부서로 내부적 기류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5. 정책효과성	우수	▶ 다양한 성향의 집회와 대규모 인원 집회관리가 많았음에도 목표에 맞는 성과를 얻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 되어짐.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집회시위 소음 규제 등 국민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가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집시법 개정 토론회,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의견환류 우수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뉴스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홍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책임수사 역량강화) 역량과 경험을 갖춘 3만 4천여 수사인력이 ‘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체계에 따른 상향 균질화를 도모

- 수사관 개인의 ‘인적역량 강화’와 ‘시도청 중심 중요사건 대응 시스템’ 중심의 기반을 토대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추진

- ▶ (수사경찰 인적역량 확보) ‘역량’과 ‘경력’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21년) 이후 수사관 최고 자격인 책임수사관*을 178명 선발하는 등 장기 근무여건 조성
* 책임수사관은 實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관 중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등 검증된 수사지휘자로 구성
- ▶ (수사분야 전문가 채용·양성)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총 2,067명 선발 △전문수사관 총 5,043건·4,292명 인증('22년 103개 분야 추가 인증)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생 중 일부를 '예비 수사경과자'로 선발하여 수사 집중 교육 후 경찰서 수사부서 배치(100명 선발)
- ▶ (신임수사관 先 교육 後 배치) '22년 하반기부터 신임수사관은 정기인사 직후 의무적으로 수사연수원에서 '1건 수사서류 작성법' 신임교육 실시 후 수사현장 배치
※ '22. 8~12월간 수사연수원에서 신임수사관 교육 1,707명 수료
- ▶ (중요사건 시도청 대응 중심체계) '경찰서 → 시도청 →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을 시도청에 결집
※ '22. 1~10월까지 경찰서 접수 중요사건 中 시도청 이관(47.0%), 시도청 집중지휘(7.0%)
- ▶ (사건관리 종합대책) △시도청별 사건처리·보유현황 분석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 제도 실시 △경찰서 수사부서 법률지원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 시행

-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전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업무량 과중을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처우 개선·교육 강화 등 각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 ▶ (인력 증원) '22년 수사분야 정기직제 반영 443명(수사심사관·경제팀·사이버팀), 자체 인력재배치를 통한 수사분야 증원 253명(경제팀·사이버팀·여청강력팀) 등 696명 증원
– 현장 수사인력 부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의 대대적인 인력재배치를 통해 경제팀(통합수사팀)·사이버팀 1천명 이상의 수사관 정원 추가 배치 예정
※ (10. 12. 경찰청장의 현장실감 4호 약속) “일선 현장 수사관을 1천명 이상 증원하겠습니다” 발표
- ▶ (예산 확보) △사업비 : '23년 국수본 3,693억(전년 대비 35억원 ↑), 수사기획조정관 2,352억(전년 대비 53억 ↑), △사건수사비 619억(전년 대비 48억 ↑, 최초 600억 이상 확보)
△기금사업 수사동 2개청 시도청 사건기록관 2개청 신규 반영(총 851억원 규모)
- ▶ (처우개선) △경제팀 특진 배정인원 확대(5→30명) △치안종합성과평가 시 경제팀(통합수사팀) 가점 부여 △경제팀에만 적용되던 근무평정 우대를 통합수사팀에 확대 적용 등 추진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사권 조정 1년 차 수사기피 현상, 사건장기화로 인한 국민 만족도가 저하되었으나 인력·예산 등 물적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
- 엄중한 위기의식 속에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시행(6월)하였고,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사관 이탈현상이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전환

❖ (수사부서 전출률) '21. 下 7.7%→'22. 下 5.3% (2.4%p 감소)

❖ (신임수사관 비율) '22. 上 19.9% → '22. 下 17.3% (2.6%p 감소)

- '22년 경찰수사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은 청렴성(0.4점 ↑)·편리성(0.5점 ↑)·공정성(0.2점 ↑) 측면에서 지난해 대비 만족한다고 평가한 반면, 수사지연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한 상황(신속성 1점 ↓)
- 일정 수준 국민 신뢰를 확보한 청렴·공정 등의 가치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신속성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건관리 종합대책 실시('21. 12월) 이후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식으로 75.3일^{'22. 2월}까지 치솟았던 사건처리기간은 67.9일^{'22. 10월}까지 감소 추세*
- * (2월) 75.3일 → (4월) 73.5일 → (6월) 70.7일 → (8월) 68.8일 → (10월) 67.9일
- 전국 평균 1인당 접수건수는 85.1건·1인당 처리건수는 87.1건으로 모든 시도청에서 접수보다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건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했던 결과로 해석
- 충분한 인력증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청 자체의 인력재배치 또는 정원조정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시도청 수사부서의 인력증원을 추진

❖ (증원 개요) 모든 수사부서에서 업무량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①경찰청 차원의 인력재배치 ②시도청별 정원조정 順 추진

- ①경찰청 차원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인력증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 ②시도청 내 정원조정을 통해 수사부서간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추진

❖ (경제·사이버팀당 증원) 팀당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여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연계성 우수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충분히 열심히 수행하였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사건처리수당 관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고려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전문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5. 정책효과성	우수	▶ 현장수사 기피현상을 위해 많은 노력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향후 기대효과 큼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현장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불편함도 해소하려고 노력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대내외 정책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검 협의체 논의로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검사의 권한남용 등 사례에 신속·적극 대응하여 수사주체성 확립
-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정비로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발전 기여
-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지표 설정 미흡
- 학계 소통, 현장 수사관 의견, 국민 홍보 등 다각도·적극적 환류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제도개선 효과 측정지표를 발굴하여 평가항목에 반영
- 세미나·토론회 등 한정된 창구를 다변화, 국민에 대한 환류 강화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핵심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 과제를 충실히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항목을 설계 ▶ (제언) 성과지표가 보고서, 공문, 세미나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책임수사시스템 정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고, 다양한 현장실무 지원 및 외연확장 ▶ (제언)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응했다고 판단은 되나, 경찰수사 독립성 관련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월별·분기별 계획을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 및 진행 ▶ (제언) 행정원과 세미나가 외부적·비통제적 원인으로 연기되었으나, 다른 접근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었음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경검협의체 적극 대응 및 관계 부처·학계·경찰 내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제 유지 ▶ (제언) 경검협의체 대응 노력은 인정되나, 원만한 성과도출로의 연계는 다소 모호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성과 지표(3개 항목)로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 ▶ (제언) 목표치와 달성도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시각에서도 검토할 필요
5. 정책효과성	보통	▶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국민 불편 완화 및 수사권법령 개정 에 따른 후속 법제 정비로 형사법체계 안정화를 건인 ▶ (제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그러나 현시점의 효과로 보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경·검 협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수사서비스 토대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경찰 수사의 역량 및 국민권익 강화 기대 ▶ (제언) 현장 수사에 경·검협력 확대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국회·정부·언론·학계·수사현장 등 다양한 소통 활동 노력 ▶ (제언) 의견수렴 및 환류 부분에 있어 적극성이 아쉬움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언론보도 칼럼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 및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 對국민 인식도를 제고 ▶ (제언) 다양한 홍보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사 완결성 도모) 3중 심사체계가 경찰 수사 전반에 안착되도록 조직·인적 기반을 확장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경찰책임 수사체계 구축

△심사인력 확대(784→812명) △경찰수사 심사체계 운영계획 수립 △책임수사 지도관 점검업무 개선계획 수립 △정책·제도 진단 계획 △심사인력 현장지원 강화 계획 △경찰교육 훈련에 '수사심사실무과정'을 포함시켜 심사관 역량 상향 균질화

- (수사 공정성 확보)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단계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촘촘히 마련

△고소·고발 접수절차 개선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개정 △불송치 결정 통지 관련 지시 △개정 형소법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군사법원법 개정('22.7.1.시행)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 및 정원 이관, 전담체계 마련

- (수사역량 강화)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경찰수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사 편의를 도모하고 수사기법 개발을 활성화하여 현장 대응역량 강화

△「수사자료 분석포털」 개발 △지능형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 지침」 마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행범 체포 등 신병 처리 지침」 마련 △「현행범 체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군사법원법 이관 및 규칙 개정사항 등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인 현장과의 소통 및 외부홍보가 부족하였고,
- 성과지표 측정요소를 일부 변경하면서 계량화된 과거 실적치가 없어 성과 추세 확인 곤란이 미흡한 요인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사정책·제도 수립 시부터 현장자문단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그간 쌓여있는 수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찰책임 수사체계의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정량적 지표로 변경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지표의 가중치 외에도 성과지표 측정자료 및 반영방식의 타당성 검토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정책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정도에 대한 근거자료 없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만점으로 해당 사항 없음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도는 외부 시민단체, 대내 협업 및 현장과의 협업 성과가 없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4개 지표 모두 신규지표로 적극적 판단기준은 평가자별 상이함으로 객관적 판단 불가
5. 정책효과성	보통	▶ 수사 공정성 및 전문성, 현장 대응력은 내부직원 뿐만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불편해소나 편익증진 정도가 적시(계량화)되지 않음
6. 향후 기대효과	미흡	▶ 기대효과가 계량화되거나 적시되지 않았고 성과지표 외 정책효과나 부수적 효과도 적시되지 않음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 환류 노력도에서 심사인력 확충, 책임수사관 점검 개선만 정책에 반영되었지만, 전년도 최종평가, 중간점검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대외 홍보노력 부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Data, Network, AI 기반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 증거기반 수사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 － (1차년도 사업기간·예산) '22. 4. 29 ~ '23. 1. 24.(270일간), 17.8억원
 - － (주요 내용) △ CCTV 위치정보 제공 △ 도주경로 內 은신장소 추정
△ 현장상황 메모녹음(Voice to Text) △ 화재·수중·체취증거업무 전산·DB화
△ 현장사진 객체인식 △ 수사단서·유사사건 추출 기능 등 6개 과제 수행
- AI 활용 지문분석 시스템 구축 및 GeoPros·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 － (AI 활용 지문분석 시스템) 감정 절차 자동화, 검색알고리즘 개선 등
감정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 － (GeoPros) T맵모빌리티 등 대외 데이터 협업 강화 및 매뉴얼 개편·
노후 서버교체 등 시스템 고도화
 - － (얼굴인식시스템) △ 인식범위 확대 △ 영상 노이즈 개선 등 분석률
증대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치안환경 변화에 발맞춘 현장대응력 제고>

- 특수감식 및 범죄분석 활동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
 - － (특수감식) 유관기관 합동 수중 집체훈련(8月) △ 봉괴·매몰 등
현장 대응을 위한 체취증거 집체훈련(9月) △ 실종자수색·증거물확보 등
체취증거팀 190건, 수중과학수사 21건 출동('22년)
 - － (범죄분석) △ 물리적 증거 부족 사건 등 진술 분석 강화 △ 시스템

개선 등 범죄분석 활동 체계화(진술분석 138건, 사건분석 133건, 심리면담 157건)

○ 국민체감 업무절차 개선

- (지문채취 절차 개선) 피의자 수사자료표 작성 시 △근거법령·목적 등 지문채취 필요성 사전 설명 △피의자 동의 확인절차 추가 등 절차 개선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 △매뉴얼 발간·교육 등 사전조치 △범죄경력 회보 TF 구성 등을 통해 오류없는 안정적 운영
- (스마트폰 지문 신원확인 시스템) 요구조자 신속 신원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23년, 10.6억) 확보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수사 신뢰성·객관성 강화>

○ 과학수사 기초자료 고도화 및 자료관리분야 국제공인(ISO) 획득

- (지문자료 고도화) 기존 지문자료 개선(고해상·디지털화), AI 활용 지문 분류·품질검사 자동화
- (국제공인 획득) 자료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인증 획득 (관리체계 2종, 정보보안 3종 '22. 10월)

○ 국제인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감정역량 강화

- (국제인정 확대) 족·윤적, 문서감정 2개 감정분야에 대해 한국 인정기구(KOLAS) 인정 획득('22. 12월)
- (감정관 자격제) 감정관의 인적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감정관 자격시험 시행, 감정관 자격 부여('22. 10월)
- (인적역량 강화) 전문인력 채용(영상분석4, 뇌파분석5), 국내·외 전문교육(영상분석·문서감정·법심리)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내부홍보 부족 및 외부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미흡
 - (내부홍보)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해 내부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외홍보에 비해 다소 미흡

- (전문가 의견수렴) 과학수사 자문위원을 통한 대외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외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GeoPros 공모전 등 과학수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병행
- 관련 학회 참석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정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대표성) 현장감식·범죄분석·증거감정 등 과학수사 전반을 담당하는 범죄분석담당관실 전 업무를 반영함 ▶ (정책과제 연계성) '22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및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유효증거채취율)와 연계 ▶ (지표설계의 적절성) 4개 지표를 각 25%씩 반영하여 전문가 대면 컨설팅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감식·범죄분석·증거감정·시스템구축 등 과학수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 증거기반 수사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 △ 현장 대응력 제고 △ 과학수사의 신뢰성·객관성 강화 등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 증거채취율 지속 향상('20년 174% ⇒ '22년 219%), 프로파일링(범죄분석) 활동 대폭 증가(전년 대비 122.9% 증가), 지문 자료 고도화를 통한 신원확인율 불가율 감소(2.25% ⇒ 1.87%),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신원확인(45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모든 과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일정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행정 노력도) △ 주민원지 송부방식 및 현장감식 평가제도 개선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新 업무방식 도입 △ 체취증거팀 경진대회 개최 등 신규정책 적극 시행하였고, △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 지문감정 및 분야별 감정을 통한 사건 조기 해결 기여 △ VISA 심사 관행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 교육·훈련 수행, 분야별 연구·개발 활성화하였음 ▶ (협업도) 경찰 내부는 물론 국과수 등 과학수사 유관기관 및 T맵 모빌리티와 같은 사기업과도 협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全 성과지표 초과 달성함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table><tr><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tr><td>▶ 범죄분석 지원지수(25%)</td><td>175점</td><td>208.2점 (119%) 초과 달성</td></tr><tr><td>▶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td><td>18.3% 이하</td><td>16.1% 목표치 이하 달성</td></tr><tr><td>▶ 통계분석시스템 이용지수(25%)</td><td>2,850,000건</td><td>2,991,299건 (105%) 초과 달성</td></tr><tr><td>▶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25%)</td><td>200%</td><td>205.6% (102.8%) 초과 달성</td></tr></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범죄분석 지원지수(25%)	175점	208.2점 (119%) 초과 달성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	18.3% 이하	16.1% 목표치 이하 달성	▶ 통계분석시스템 이용지수(25%)	2,850,000건	2,991,299건 (105%) 초과 달성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25%)	200%	205.6% (102.8%)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범죄분석 지원지수(25%)	175점	208.2점 (119%) 초과 달성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	18.3% 이하	16.1% 목표치 이하 달성																	
▶ 통계분석시스템 이용지수(25%)	2,850,000건	2,991,299건 (105%) 초과 달성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25%)	200%	205.6% (102.8%)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우수	▶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①현장감식 증거채취율 향상('20년 174%⇒'22년 219%) ②업무협약을 통한 수사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시스템 접속율 지속 증가(전년대비 약 4.5%) ③과학수사 기초자료 분야 ISO, 족적·윤적·문서 감정 분야 KOLAS 인정 획득 ④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율 향상(97.75%⇒98.13%) ⑤멀티미디어 분석불가율 감소(20%⇒17.83%) ⑥장기미제사건 805건을 재검색하여 45건의 피의자 신원확인 등 성과를 거양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증거물 채취율 등 성과지표 향상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적극 지원은 물론 기존 범죄수사에 국한되었던 과학수사의 영역을 범죄예방 및 치안 정책 수립 지원까지 확장하여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기여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수립·시행에 앞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근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음 ▶ 적극적인 대외 의견 수렴이 필요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및 다양한 최신 기법·시스템 소개 등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적극적인 경찰 내부 홍보가 필요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포렌식 역량강화 종합대책 수립) 현 시점의 주요 과제 및 미비점을 짚어보고 향후 경찰 디지털포렌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업무개선 회의 실시, 총 21개 과제 도출하여 추진 中
 - ※ '22. 9월 ~ 10월간 업무개선회의 상시 개최, 주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인적전문성 확보) 우수인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전문분야의 교육·연구모임을 통한 전문성 강화
 - ※ △기초 - 전문 - 심화과정으로 구성된 분석관 전문교육 실시('22. 8월 ~ 11월, 분석관 182명 교육), △디지털포렌식 연구회 정기 개최 등
- (현장경찰관 디지털증거 처리역량 강화) △스마트폰·CCTV 등 압수 수색 절차, 디지털포렌식 도구 사용법 등 7개 과정 온라인교육 실시 ('22. 5월 ~ 6월, 총 1,000여명 이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수사관이 숙지해야 할 모든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배포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역량 강화)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확대 도입으로 경찰의 스마트폰 잠금해제 역량 대폭 강화(1대→6대, 예산: 6.25억 → 12.5억)
 - ※ (잠금해제 성공 건수) '21년 157건 → '22년 579건으로 422건(268%) 증가
-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디지털증거 수집 단계부터 현장을 지원,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준수 및 동일성·무결성 확보에 기여
 - ※ (압수수색 현장지원 건수) '21년 722건 → '22년 895건으로 173건(24%)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인력 부족)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 대비 분석인력이 부족하여 전국 분석관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음
 -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 45,103건('18년) → 73,609건('22년)

-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부족) 현장수사관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 수사현장에서의 수사활용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력증원 추진) 관련 기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준수 및 수사의 효율성 증대, 피압수자의 정보인권 보장 등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전담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을 통해 현장지원 강화
- (디지털포렌식 도구 홍보 및 활용도 제고 노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구 개발 및 온라인 교육 실시, 도구 기능 및 활용법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디지털포렌식 도구 적극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신뢰성 확보와 역량 강화 위한 지표 설정 위해 노력함 ▶ 디지털포렌식 업무 신뢰 확보를 위한 적정 평가기준 제시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장비,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보, 인적 전문성 강화 등 노력 보임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절차 적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아쉬움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일정별 성과 달성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연구회, 회의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전개 ▶ 연구회 중심으로 다수 보고서 생산 대외 협력 등 노력 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 도달 우수 ▶ 분석관 1인당 현장지원 활성화 부분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5. 정책효과성	우수	▶ 디지털포렌식 역량강화로 인한 대국민 신뢰확보는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함 ▶ 현장 지원을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 및 수사 지원 효과성 인정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국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 방안 마련 우수 ▶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제고를 위한 효과가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정책 반영 위해 노력하였으나, 향후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챌린지 대회 개최 등 관심도제고 노력 보임 ▶ 디지털포렌식은 대내 홍보, 전문가그룹 홍보, 관계기관 홍보 및 대국민 홍보가 균형 있게 병행되어야 정책 목표인 책임 수사를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될 것이라 생각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책임수사 체제 안착) 현장 문제 해결형 과학수사 R&D와 첨단 장비·기법 확충을 통한 과학치안 견인 및 경찰 책임수사 총력지원

- ▶ **【법곤충 감정실 구축】** 부패·백골화가 진행된 사망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하여 범죄 혐의점 판단 등 변사사건 수사 지원을 위한 **국내 최초 「법곤충 감정실」 구축·운영**(‘22.5.)
※ “사망시각, 곤충은 안다... 국내 첫 법곤충감정실 출범” 등 題下 매일경제 등 보도(‘22.5.17.)
- ▶ **【DNA 수사역량 강화】** △ 신속 DNA 분석기·혈흔탐지 新 시약 보급 △ 범죄자 DNA DB 운영 △ 고도화된 DNA 신원확인시스템(DIMS) 운영 등 DNA 증거발견·분석역량 향상

-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 국내·외 과학수사 유관기관 소통 및 치안 협업 거버넌스 기반의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과학수사 활동 활성화

- ▶ **【치안한류 선도】** △ 제8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 과테말라 치안 ODA 사업 연수 △ IAI(국제감식협회)·AFSN(아세안법과학네트워크) 연차회의 참가 △ 국제 치안산업 대전 과학수사 R&D 개발물 전시 등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우수성 전파·전수
※ “43년 미제사건 해결 美 박사 기조강연 CSI 컨퍼런스 이변주 개막” 등 題下 뉴스 등 보도(‘22.10.16.)
→ 올해 최초 ON-OFF line 동시 실시간 진행 및 해외 86개국 3,290명 포함 총 7,773명 참가
- ▶ **【DVI분야 국제협력】** △ 인터폴 DVI 전문가 초청훈련 △ 인터폴 DVI 컨퍼런스 참가 △ 인터폴 DVI 워킹그룹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개최 등 K-DVI 국제화·전문화
- ▶ **【인적 전문성 제고】** △ 과학수사 전문수사관 63명(마스터 4), 화재분야 국제공인 자격 35명 획득(CFI 2, CFEI 33) △ 과학수사 자문위원 운영 △ 전국 세미나·KCSI 온라인 포럼 개최 △ KCSI 매거진 발간 등 과학수사 신뢰성 제고 및 전문지식 공유·내재화

- (과학수사 만족도 향상)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현장 과학수사관 건강·안전 증진, 현장 인프라 확충으로 대내외 만족도 제고

- 전문성·신뢰성 강화 등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수사 접촉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 과학수사 만족도 역대 최고점(80.2점) 달성

※ 廳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전화조사(국민 1,000명 대상, ‘22.10.) ‘21년 79.4점 대비 0.8점 상승

- ▶ **【대외】** △ 과학수사 토크콘서트, CSI 체험캠프 △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 과학수사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등 대국민 참여 및 제언 수렴
- ▶ **【대내】** △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과학수사관 특수검진·예방접종 지원 △ 감식감정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 CA챔버 등 감식·감정 안전장비 확충 등 과학수사 인프라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별 평가 배점 대비 원점수 달성을 분석한 결과,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87.8%),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88.1%) 順으로 저조
- (정책홍보 노력) 언론보도·매거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과학수사 주요 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으나,
 - － 수사지원부서 역할 특성상 수사 이외의 他 기능 상대로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대내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향상 노력이 다소 부족
- (환류 노력도) 과학수사 현장자문단 운영 등 대내외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증액·설계기준 반영 등 현장 의견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학수사 홍보 강화) 과학수사 활동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숏폼·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대내·대외/수사·비수사 모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노출도를 높이는 홍보 노력 강화 필요
- (환류 노력도) 연간 추진계획에 대한 경찰 내부 기능 연계한 의견수렴 활성화, 현장 의견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과제 구분하여 체계적인 피드백 전달 노력을 더욱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부서와 사회 현실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과제 대표성 및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우수 평가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세부 추진계획을 지연 없이 100% 정상 추진하였다는 평가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국내 최초 법곤충 감정분야 도입, 인터폴 DVI 국제회의 개최 등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하나 대내적 협업이 미흡하다는 평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과학수사 활동지수, 현장지원지수, 대국민 교류지수)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100% 이상 초과달성 평가 ▶ 다만, 올해 목표치가 추세치 보다 도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계치에 근접한 목표라면 개선 항목을 찾아 목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부위원의 제언이 있음
5. 정책 효과성	우수	▶ 과학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등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 효과성을 잘 제시하였다는 평가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향후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한 노력을 고려 하여 우수하다고 평가하나, 일부 외부위원 중 의견수렴으로 인한 환류의 구체적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경찰 이미지 및 과학수사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여 정책홍보 등 성과 양호하다는 평가 ▶ 일부 내부위원 중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아 대내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18개 특공대 창설·장비 도입) 강원·울산·충북특공대 창설을 위한 예산(72.2억원) 확보, '22년 장갑차·전과차단기·드론탐지기 등 총 27종 137억원(전년 대비 7.3%↑) 장비 도입
 - ※ '23년 정부 예산안이 267억 57백만원으로, 전년 244억 37백만원 대비 9.5% 증액
- (국제세미나 및 합동훈련) 경찰청 주관 대규모 '국제세미나(2회), 해경·軍 특공대 등이 참가하는 국가대테러 연합훈련('22.9월), 환경부·질병청·원안위 등 화생방 관계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생방 대테러 종합훈련('22.7월) 실시
- (항공요원 인프라 구축) 항공안전관리과정 신설 등 교육인프라 구축
 - － 인재개발원과 협업 '항공안전관리과정' 및 전문교육(53명) 실시
 - － 헬기모의비행훈련센터 기금예산(6억원) 확보 및 시뮬레이터 계약(총 60억원)
- (헬기 교체) 대형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단발헬기 중형헬기로 교체
 - － 중형헬기(KUH-1P) 2대 도입 및 신규 중형헬기 2대 계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대테러과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①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 체감안전도 설문조사(40%)	긍정답변 (78%이상)	78.6% (목표 달성)
②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20%)	실시율 (100%)	100% (목표 달성)
③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20%)	1,020점 (12월 1,225점)	1,087점 (10월까지) (목표 대비 106.5% 달성)
④ 항공 안전관리 역량강화(20%)	100명/75건 (12월 120명/90건)	122명/93건 (10월까지) (목표 대비 122%/124% 달성)

- 대테러·항공업무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보 미흡
- 대내·외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테러활동은 보안사항으로 규정되어,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대테러·항공 합동훈련 등 홍보대책 강구
- 대테러·항공 업무상 대내·외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좀더 적극적 협력체제 유지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 － 타부처 대테러부대와 교류훈련, 타기관 항공요원들과 교류교육 등
- 치안현장 헬기지원 활성화 필요 및 헬기 가동률 향상 필요
 - － △대테러 △재난관리 △실종자 수색 △수사·교통 등 각종 치안 현장에 신속한 헬기 지원을 위한 헬기 가동률 향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대표하며, 구체적이고, 평가위원의 컨설팅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신규 경찰특공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및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됨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예산 절감 및 세종특공대 본청사 및 격납고 예비부지 확보 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되며, 대내·외의 다양한 협업 추진을 하였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대테러 및 항공 두가지 업무에서 모두 국민을 위한 안전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효과성	우수	대테러 체감안전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의 효과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됨
3-3. 향후 기대효과	보통	대테러업무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실제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테러대책협의회, 현장 컨설팅, 세미나 등 통해 충실히 대내·외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 분석, 필요 예산 확보, 협의 등 환류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됨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포스터 제작등은 시행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정책홍보 노력이 필요함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안보수사 역량 강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경찰 중심의 책임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 정책추진
 - － △ 교육과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 재직환경 조성 등 인사·교육시스템 획기적 개선
 - ▶ (보안경과제 개선) △형사법 과목 신설(20문항) △수사 출제 비율 75% 상향 등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존 경과 재설계, 개선 보안경과시험 실시(22년 7월)
※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22년 2월) 및 同 시행세칙 제정(22년 6월)
 - ▶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안보수사 경력·전문성 및 성과를 검증받은 수사관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임 안보수사관’ 36명 선발(22년 9월)
 - ▶ (대공수사 전문교육 고도화) 국정원 수사기법(해외정보 등) 전수를 위한 院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OJT 형식의 교육 기회(연 3회) 마련 등 교육과정 업그레이드
 - － 특히, 국정원 수사역량을 대체하기 위해, 안보수사에 특화된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신설 예산·인력 등 추진 동력 확보
 - ▶ (예산) 원활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인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국정원·기재부 상대 수차례 방문설명 ⇨ '23년 신설 예산 16억 1,300만 원 확보
 - ▶ (인력) 안보수사 교수요원 인력풀 선발(29명),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 확보
 - － 또한, 안보수사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도 현장자문단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절차 강화
 - ▶ (국정원 공동주최 세미나) 사이버 드보크 등 첨단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Cyber Espionage 세미나 개최(※ 국정원·국회 등 9개 기관 협업)
 - ▶ (안보경찰 현장자문단) 局 추진정책에 대한 본청-현장 간 소통·제언 창구 마련, 안보업무 분야별 현장 전문가 선발(4개 분야, 55명) 및 소통 활동 강화

- (탈북민보호 강화) 안전지원팀 신설*(22년 2월, 경찰청-통일부 협업) 등 신변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 정착불안 탈북민(범죄피해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22년 2월 통일부에 안전지원팀 신설 운영 ⇨ 경찰청 자체 발굴 지원사례(10건) 선정

- － 인권친화적·효율적 탈북민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등 법 개정 △범죄예방교육 등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다각적 정책추진

▶(법 개정 추진) 「북한이탈주민법」 및 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2.12.7 입법 예고 / '23년 상반기 국회 제출 협의)

▶(범죄예방교육) 소통 위주의 대면교육에 집중, 소규모 단위로 수시 전개 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뒷받침하는 표준강의안 배부 ⇨ 교육 접근성 강화

- (안보상황 관리) 접경지역 등 안보취약지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상황관리 및 軍·국정원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공동 대비태세 구축

▶(안보상황 관리) △폭발물·거수자 발견 △무인기 출현 등 주요 안보상황 대응(1,481건) 및 유관기관 합동정보조사(총 898건) 등 변수 없는 상황관리

▶(안보취약요소 개선) △北 접경지역 △남북출입사무소 △北선박 입·출항 지정항구·공항 △국가중요시설 등 상시 점검을 통한 안보위해요소 개선

※ 접경지역(6회), 공항만(4회), 국가중요시설(2회) 등 현장점검 총 16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 등 관련 지표설계 및 추진 노력에 대해 내·외부 평가위원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 － 다만, ‘산업기술유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22년 4월) 관련 정책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량적 수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국 內 경제안보수사 TF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신설
- 한편, 탈북민 범죄예방교육의 경우, 단순 정량적 수치의 확대보다는 과거 추세분석 등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매우 우수 ▶ 부서와 사회 현실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지표 설정 적절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수행 관련 다각적인 목표 달성 노력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평가기한 내 쏜 계획 모두 정상추진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열악한 상황에서 적극행정과 협업 등 노력이 엿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안보수사 SS, 탈북민 S 안보취약요소 SS
5. 정책효과성	우수	▶ 의미 있는 정책효과성 보임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양호한 정책 수행으로 향후 기대효과 높이 평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전년도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환류한 점 인정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비공개가 특성이던 안보수사 부서가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높이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요 안보사범 검거지수[50%]) 전통적 국가안보를 넘어 포괄적 안보 영역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목표치 756점 대비 155% 초과 달성(1,172점)
 - － 수사 난이도가 높고 검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중요 안보사범 검거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국가안보 수호의 최일선에서 크게 활약하였음
 - ※ 중요 안보사범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
 - － 안보수사국 이관 2년이 된 시점에서야 경제안보, 테러 등 공공안보사범 수사 업무도 안착, 전년 대비 실적 크게 향상(경제안보 48%↑, 공공안보 57%)
 - * '21. 1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외사국 수사 업무를 국수본 산하인 안보수사국·형사국 등으로 이관
 - － 활발한 수사 활동과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24. 1.)을 대비한 「안보수사 협의체」 운영,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산업보안협의회·협력관 제도를 전국 확대하는 등 안보역량 강화의 초석 마련에도 만전
- (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25%]) 사이버안보수사 활성화 및 선제적인 피해 예방조치로 목표치 454점 대비 161.8% 초과 달성(734.5점)
 - ※ △ 입건 전 조사 238건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2,585건
 - － △ 국가기밀 및 안보정보 탈취 △ 방산·침단산업체 기술 해킹 등 사이버 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첩보 입수 및 수사역량 집중, 가시적 성과 거양
 - ▶ (첩보) 시기별·테마별 첩보 집중수집 기간 2회 운영, △ 사이버안보 침해사고(4월) 분야 총 194건 첩보 입수, 주요첩보 40건 입건 전 조사 착수 △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6~8월) 분야 IT 노동자 46건·가상자산 8건 첩보(일보 이상) 입수
 - ▶ (수사) 전년 대비 △ 입건 전 조사 개척 56%↑(153건→238건) △ 검거 168%↑(66명→177명)
 - －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 합동대응팀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
 - ▶ 태영호 의원실 사칭 해킹메일 공격 인지, 관련자 대상 피해 예방조치 완료('22. 5월)
 - ▶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인사(62명)대상 해킹메일 사건 관련 국정원과 합동 피해통보(8월)
 -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 침해사고 대응훈련(年 3회) △ 민간위탁 전문 교육(모의해킹 등 2개 과정·총 42명) △ 사이버전문가 경력채용 등 지속 추진

-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25%]) 수요 폭증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업무에 대해 △현장 지원 △선별 압수 △전문 교육 등 목표치 초과달성(140.6)
 - 시도청 구분없이 사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전국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수사 역량 강화
 - ※ 전년 대비 △디지털 포렌식 지원 9.7%↑, △현장 지원 13.9%↑, △선별압수 23.5%↑ 지표 향상
 - 전국의 모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분석 △암호 설정 파일 암호 해제 △대용량 이메일 분석 등 고난이도 디지털 포렌식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증거 누락 방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정책 효과성(20점 만점에 16.8점으로 84% 득점) △향후 기대효과(5점 만점에 4.2점으로 84% 득점)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점 만점에 3.95점으로 79% 득점) 등 3개 분야에 대한 내·외부 평가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효과성) 높은 검거실적, 다양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과거와 비교되는 정책효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인된 바 유관기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논문 등 실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 (향후 기대효과) 안보수사활동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인프라 구축 등 안보수사국의 당면 현안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된 바, 경찰의 책임 대공수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서술 필요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대국민 홍보가 어려운 전통적 안보사범 외에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집중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대국민 경각심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TV, 라디오방송, 유튜브 등 대국민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안보수사의 중요사항을 정책과제 지표로 잘 설정하였으나,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종합적 노력에 대한 성과지표가 미반영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전년 대비 실적 크게 향상하여 정책수행 노력도가 돋보이나, 정책과제별로 연계한 정책추진 반영 측면이 아쉬움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하였으나, 추진내용 관련 증빙자료가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0.05점 감점 조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이나, 성과기술서 내용 중 일상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기관 간 협업 추진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 성과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나, 변화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변수를 고려한 적절한 지표 설계가 필요
5. 정책효과성	우수	▶ 정책효과성 우수하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발생한 실질적 효과 증명이 아쉬우며, 방산안보 분야 업무개척 요망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향후 업무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나, 대공수사권 이관 등 주요 현안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폭넓은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이 확인되나, 전통적인 의견수렴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다각적인 노력 전개하였으나, 향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노력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안보첩보 심의위’ 전국 도입, 첩보의 중요도 판단 및 필요조치 실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 － 일선 경찰서에 수집한 첩보를 전문 수사기능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가치 첩보의 死藏을 방지하고 첩보-수사 긴밀성 확보
- ▶ '22년도 전국 총 576회 심의위 개최, 2,000여 건 심의하여 수사 필요 사안 발굴 및 통보를 통해 입건전조사 증가(전년 대비 19%)
- (법령 정비)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을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며 전부개정, 첩보분류부터 최종 배당까지 첩보처리 프로세스 재설계
 - － 안보첩보 수집·처리업무의 법적근거와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 안보수사 역량 제고 기여
- (해외 안보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테러 등 초국경적 안보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한 외국기관을 중심으로 안보정보 협력 확대
 - － 미 연방수사국(FBI) 대테러·산업기술유출 수사기능과의 교류 확대 및 정보분석 교육과정 개설 등으로 정보분석 역량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의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10점 만점/9.1점 득점)
 - － 안보수사의 특성인 △장기간의 수사기간 △인지단서의 유일성(첩보수집)을 기준으로 한 정책과제 설계 및 성과도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여 적정성에 대한 이해도 저하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10점 만점/6.55점 득점)
 - '21년도 부서 신설이후,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과제를 변경하고 있는 바 전년도와의 성과 달성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어 평가에 한계
-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15점 만점/13.45점 득점)
 -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사안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부득이 단편적으로만 제시하는 추진내용만으로는 부족
- 정책효과성(20점 만점/16.7점 득점)
 - ‘첩보수집’에 한정된 사무범위로 인해서 ‘수사성과’와는 달리 “국민 안전 확보”를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다소 부족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점 만점/4.4점 득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국민 정책홍보 등 ‘책임안보 수사기관’으로써의 종합적인 홍보를 시행하여는 노력은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보첩보 수집분석 역량강화 지속 시행
 - △ 署 안보기능의 첩보수집 역량강화 △ 외국기관과의 교육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제고방안 시행
- 대내·외 업무공유 및 홍보방안 검토
 - △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책임안보수사기관’으로써 안보경찰의 임무과 역량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종합적인 홍보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는 "입건전조사 건수 대비 실제 송치결정 비율'로 재설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를 전문가 자문 횟수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 '고가치 첩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여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첩보 평가절차 및 배부 등 신설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신설 이전과의 성과 비교분석이 필요 ▶ 가령, 첩보의 입건전조사 개척 및 수사착수 비율제고 노력, 첩보 처리규칙 개정과 '고가치 안보첩보 수집' 목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다소 어려움
2-2. 추진계획 준수도	보통	▶ '대공첩보수집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 목표시한 도과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보안이 요구되는 사례이더라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협업의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3가지 추진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첩보규칙 개정 의견수렴', '국정원 간담회' 등을 단편적으로 제시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설정의 적극성이 다소 아쉬움 ▶ 신규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적 근거자료 미흡
5. 정책효과성	비흡	▶ 정책과제 달성 노력도와 내용이 중복되고, 국민안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 ▶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기대효과에 대한 소명이 부족(첩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더라도 관련내용 기술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마흡	▶ 내부 의견수렴활동은 인정되나, 대외 의견수렴은 근거자료 미흡. 또한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환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책임안보수사기관'으로써 대내외 정책홍보, 입법기관·수사기관·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홍보 계획 및 근거자료 부족

(1) 평가 결과

□ 경찰경호 역량을 최대한 집중, 단 한건의 오차 없이 완벽한 경호 실시

- (대선 및 지방선거)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전담 경호팀 운용, 완벽한 신변안전 확보로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에 기여
- (국내 요인) 대통령 당선인 경호 및 이·취임식, 전직대통령 사저 안전대책, 4부요인 중요행사 등 경호역량 집중으로 완벽히 임무 완수
- (국외 요인) 바이든 美 대통령, 독일·사우디 등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 등 방한 국·외빈에 대한 빈틈없는 경호 수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신뢰도 확보) 전문화교육 후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도 지표로 반영하였으나 만족도 점수가 적극적이지 않고 신뢰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감점으로 이어짐
- (실전형 교육 필요)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여타 항목에 비해 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객관성 및 적극성 제고 위해 지표 개선 연구
 - － 설문조사 시 폴넷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등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하고 성과지표에 외부(outcome)요소를 추가, 지표에 반영
- 인재개발원과 연계, 보다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실시토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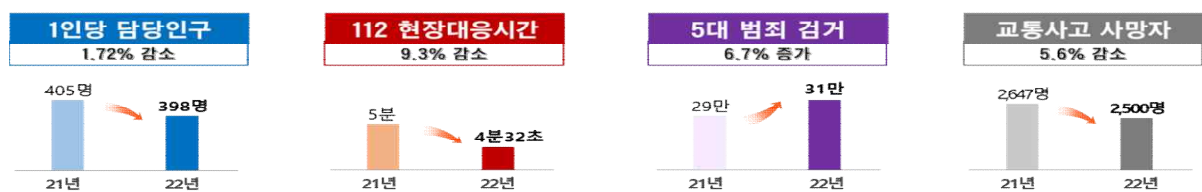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지표의 경우 성과목표치는 100%이상 달성 ▶ 경호 역량강화와 교육, 유관기관 협업 등 지표를 상향하는 등 계획수립이 적절하게 설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올해 경호 수요가 크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 제거하는 등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등 수행 노력 인정 ▶ 다만,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세부추진과제 모두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경호행사 시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과 관련 기능과 적극적 기능협조로 성공적 경호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치를 매우 뛰어 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 다만, 지표 설계 자체가 교육 실시, 점검횟수 등 달성하기 쉬운 난이도로 설정되었으므로 일부 감점 적용함
5. 정책효과성	우수	▶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에 따른 경호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임무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현장중심 경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민과 더욱 가깝게 하는 경호과가 될것이라고 사료 ▶ 다만,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로 향후 기대되는 효과가 기술되어야 하나, 향후 전망 위주로만 기술되어 아쉬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경호행사 이후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 마련 필요.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치된 사항 기술 부족(구체성 미흡)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홍보가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적극적인 홍보 노력 ▶ 경호관련 다양한 이슈제기에 대해서 대응은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이전관련 부정여론을 최소화하는것에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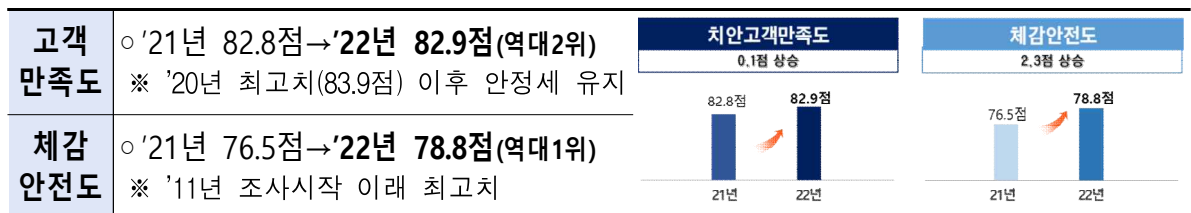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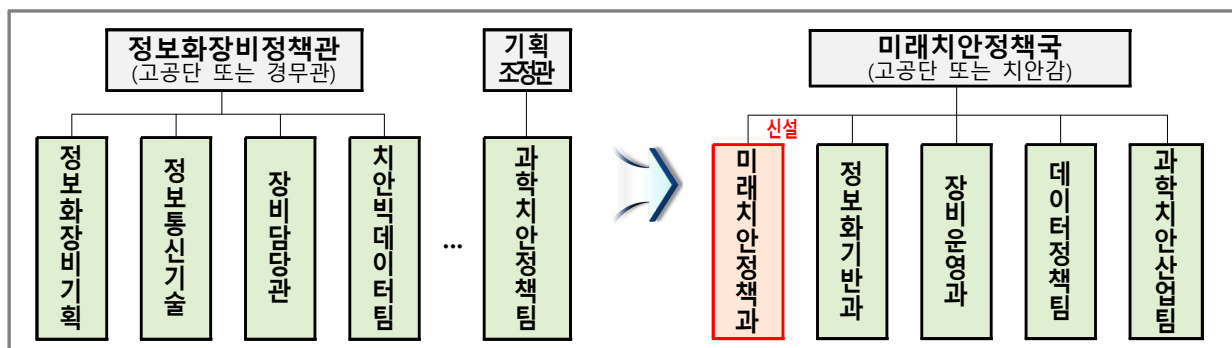
- 국민·현장 중심의 정책관리·인력 운용으로 주요 민생지표 향상
 - △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 112 현장대응시간 △ 5대 범죄 검거 △ 교통사고 사망자 등 정량적인 주요지표는 지속적으로 향상



- 또한,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의 ‘치안고객만족도’ 안정세 유지,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안전도’는 역대 최고치 경신



-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로 선제적·능동적 경찰활동을 조직 전반에 정착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미래비전 위원회」 발족('22.2월), 「경찰 미래비전 2050*」 대국민 발표('22.9.29.)
 - ※ △ 5대 전략방향 △ 14개 도전과제 △ 29개 시행과제 △ 72개 실행과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2.12.29.), 「미래치안정책국」 신설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성과지표 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성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23년 성과지표 수정·보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내실있게 수립되었으나, 정책 운영의 내실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대외적 변수가 큰 정책임에도 유연하게 대응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세부일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책추진 기반 마련에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됨. 다만, 일선경찰관들에 대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체질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3개 성과지표 모두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함 ※ △ 국정과제 성과지표(100%) △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103%) △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103%)
5. 정책효과성	우수	▶ 정책수혜자의 불편해소, 편익증진 측면에서 효과성 우수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기관 내 총괄부서로서 주요업무계획, 국정과제 등 주도적 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치안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 등 정기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선·보완이 기대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내외부 경찰업무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인사직무만족도	81.0점	81.4점
여경 비율 확대	15.0%	15.1%(0.1%p 초과 달성)
현장우수사례 표창 비율	50.9%	51.0%(0.1%p 초과 달성)

- (인사직무만족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 마련, 법령개정·부처협의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시행
 - － 특히, 현장의 오랜 숙원이던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

<'22년 인사제도 주요 개선사항>

- ▶ (경감 근속승진 확대)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경감 근속승진을 연 2회(1.1./7.1.)로 확대, 대상자가 조기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4,100여명 승진규모 확대
- ▶ (전문직위 신설·재정비) 경찰관 전문직위 전수정비(172개 직위 폐지·신설) 및 운영 절차 확립, 일반직 전문직위 지속 확대('22.4.21. 43개 직위 신설) 등 업무 전문성 제고
- ▶ (경제팀 활성화 인사방안 마련) △ 중요범인검거 즉시특진 확대 △ 「경제팀 수사활동 평가」 우수자 특진 대폭 지원 △ 심사승진 인사우대방안 추진 등 업무 몰입도 및 전문성 강화 기대

- (현장 우수사례 포상) '22년 수여한 경찰청장 표창 13,517매 중 6,895매(51.0%)를 현장 우수사례에 활용, 목표치 초과 달성
 - － 이외에도 특진(812명)·승급(1,182명)·정부포상(488명)·행안부장관 표창(992명)·모범공무원(574명) 등 각종 포상을 통해 현장 활력 제고
- (여성경찰관 비율) 채용인원의 25.0%(4,247명 중 1,060명)를 여성경찰관으로 배정하여 여경 비율 15.1%(134,968명 중 20,381명)로 목표치 초과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사직무만족도) 인사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나,
 - 향후 보다 활발한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인사운영을 꾸준히 추진, 체감도 향상에 주력

<주요 추진 사항>

- ▶ (공정·적정성) 경찰 조직의 치안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승진·인사배치 등을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
 - ▶ (공감·수용성) △현장 자문단 운영, △제도개선 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인사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사항 환류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제도 개선 추진
-
- (현장 우수사례 포상) 현장 중심의 포상 기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특진·특별승급·정부포상 등 다양한 포상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의 업무 동력을 높이고 일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제고
 - (여성경찰관 비율) 여경 비율은 금년 목표치인 15%를 달성, 現 채용 기조를 유지하되, 통합모집* 및 양성평등목표제를 병행 실시하여 성별 균형인사를 통한 조직 내 성평등 가치 제고
- * '20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및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 통합모집 실시 중, '26년 순경 공채 등에 통합모집 전면 확대 시행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과제내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현장 중심 인사 및 여성 비율 균형배치 등 적극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모두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해 조직 구성원 다수의 관심사인 경감 근속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노력이 인정되며, 업무과다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제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인정됨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법령개정 등 유관기관 및 내부와의 협업 노력도 인정됨 ※ 다만, 적극행정 노력도와 국관 내부와의 협업이 다소 부족하다는 내부위원 지적이 있었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성과달성도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당시 일부 지표(직무만족도, 여경비율)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 으나 추후 이의제기 기간에 관련 내용 소명, 최종평가시 반영
5. 정책효과성	우수	▶ 현장의 관심이 높은 인사정책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포상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다양한 인사 제도의 노력이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다양한 의견수렴 및 내부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다만, 인사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국관과의 효과적인 소통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내부위원 지적이 있었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부정적 여론에 신속, 선제적 대응하고 직원들이 관심갖는 인사제도 추진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됨

□ 주요성과

- (국회 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형의 감면규정), 「자율방범대법」(자율방범대 설치·운영), 「경비업법」(허가요건 완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해소) 등 경찰청 소관 법안 40건의 국회 통과 주도
- (타 부처 소관 법안)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경찰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타 부처 법령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능과 함께 정책적·법리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경찰청 입장 정리·회신* 등 대응
 - * '22년 5,214건을 접수·처리, 이 중 103건에 대해 경찰청 입장 정리 후 검토의견 회신
- (규제 개혁)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 손수레 보도 통행 허용 △ 경비업 민원 온라인 처리 확대 등 국민편익 효과가 높은 규제 다수 개선 아울러, 자율주행차·로봇 분야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타 부처와 적극 협력, 실증특례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노력도 지속
- (현장 법률지원) △ 소송지원 제도(공무원 책임보험 및 경찰 법률보험 등), △ 손실보상 등 법률지원 제도 관련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비점 보완 및 개선 등 내실화, 현장의 직무집행을 두텁게 보호

▶ 「경찰 법률보험」 강화: 형사상 '보상 불가'로 규정된 죄명에 대해 유죄 확정이 아닌 한 보험으로 보장받도록 보장 범위와 한도 확대('22. 6. / 재계약) ➡ 현장 동료들의 법집행 활동을 두텁게 보호
▶ 「손실보상제도」 보완: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실무 적용사례 교육 등을 확대 ➡ 손실보상 심의 적정성은 높이고, 예산 집행 저조율은 감소시키는 등 제도 미비점 개선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통합 법률·소송지원 체계 만족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으나, 추세치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다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던 응답자 위주로 만족도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률·소송지원 제도 성격상 직접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는 제도의 필요성 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홍보를 확대하고, 절차 안내창구로서의 '동료지킴이' 역할·기능을 강화하여 접근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전략과제 및 주요업무 계획상 과제를 포괄하는 4개 지표를 적절하게 선정 ▶ (제언)만족도 관련 성과지표의 차년도 목표치 하향조정이 필요해 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부입법과 국회입법, 송무, 규제개혁, 현장법률지원 노력도가 높음 ▶ 난이도있는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 100%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현장지원 정책 발굴, 실무수습 변호사 도입 등 적극행정을 하였고, 내외부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우수함 ▶ 타 부처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경찰청의 정책 및 법안 추진을 지원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 만족도>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상승치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에는 0.8점 부족한 점수를 기록해 일부 미달성 ※ 사·도청 송무관이 정원 대비 3명이 결원이었고, 365센터 근무자 4명이 13만 경찰의 실시간 법률상담을 담당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추세치 이상의 다소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
5. 정책효과성	우수	▶ 입법대응, 현장지원 강화 정책 효과성은 만족스러운 수준 ▶ 각 파트별로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정책효과 거양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규제혁신과 실무수습 변호사 확대는 대외신뢰도 향상에 도움 ▶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해 현장경찰관의 소송부담 감경 및 부당한 경찰의무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내부 구성원, 대외기관의 의견수렴이 정책 반영으로 귀결 ▶ (제언)법률지원의 직접 영향을 받는 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 생각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제언)다양한 루트로 적극 홍보활동을 병행하였으나 대외홍보가 다소 부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경찰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보직인증제 설계 등 교육-인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직장교육과 사격훈련을 개선하고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개편하여 쏠 경찰관의 현장대응력을 제고
-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및 표준면접질문지 개발 등 우수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별시험장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용절차를 완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교육 현장활용도) 전년도 실적치 92.9점보다 1% 향상된 93.8점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0.99% 향상 도출(목표치 대부분 달성)
- (인재채용률) 최근 5년간 인재채용률은 급격한 하락 추세임에도 '22년은 상승세 전환을 기대하고 목표치를 설정(0.5%p 향상)하였지만,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지원자 대폭 감소로 불가피하게 목표치 미달
※ '21년 실적치 94.8% / '22년 목표치 96.2%, 실적치 92.9%(전년 대비 2%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 현장활용도) 지표의 의의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성과 측정에 활용해왔으나, 결과값이 임계치에 도달하여 상승의 한계가 도래함에 따라 대체 또는 보완 지표 신설 필요
- (인재채용률) 채용계획 인원 대비 채용인원이라는 단순한 결과 지표 대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제반 활동(면접관 등 역량강화·채용 홍보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교육현장활용도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한 점이 우수함"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중요 업무이고, 엄청난 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수행 노력 우수"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대부분 온나라 공문 등 증빙자료 잘 갖췄음" ▶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 우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다양한 협업활동이 이루어짐" ▶ "적극적인 교육안 발굴 등 전문역량 강화 노력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노력으로 달성도 통제가 되지 않는 설문조사, 채용률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일반직 지원자 대폭 감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인재채용률 목표치 미달
5. 정책효과성	보통	▶ "교육을 강화하고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실제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 (교육이 실제 직원역량 강화를 이루었는지, 훌륭한 인재 비중이 늘었는지 등등) ※ 교육 현장활용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결과지표 도입 검토 중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임" ▶ "공정 엄정한 인재 채용 노력 우수"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노력이 인정"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다양한 방안을 통한 홍보 활동 추진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외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은 자체 점검함과 아울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치안행정에 대한 점검으로 유사 사례 발생 차단

∴ <'22년 감사 실적> 4개 기관 종합감사, 2개 주제 특정감사, 332건 일상감사

- (대외 이슈) ① 서울 ◇◇구청 공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서 현금 출납 업무 실태 점검, 개선안 마련 ② 체력단련장 예약 부정 사실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
- (치안 정책) ① 스톱킹 112신고 접수코드 분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후콜백이 누락되는 사례 보완 ② 면허정지 대상이 아닌 자에게 오인하여 정지 처분한 사례 적발

- 시도청 중심으로 반부패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높여 체감청렴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원 서비스 개선 도모

- (추진체계 강화) △올해부터 권익위 청렴도 평가시 시·도청 청렴도 별도 평가 △성과평가에 시도청 반부패 노력 반영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포상금 증액(1.2천)
- (시민·현장 참여) △청렴정책협의회·시민청문관 운영 활성화 △관서별 청렴 선도그룹 운영 △반부패 추진 우수사례 포상·인센티브 강화 △제1회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 개최
- (민원 서비스) △무인민원 발급 예산 확보(9억원) △19개서 통합민원실 사업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본 과제는 '22년 평가 항목에서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국민 의견수렴과 대외 홍보 등의 적극적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3년 정책과제 설계 시 대국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지표를 보완하고, 대외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선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적극행정 면책이 지표화된 것은 타당하나, 국민 중심 감사 활동 달성을 위해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외에 보완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적극행정 추진성과 근거자료 보완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모든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음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협업도는 높이 평가하나, 선제적 대응 노력은 다소 부족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목표치는 100% 달성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이 다소 소극적
5. 정책효과성	보통	▶ 효과성 우수하나, 감사효과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음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기대효과 우수하나, 시민청문관 제도나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제도가 전체 기대효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국민 의견수렴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대내 홍보는 우수한 반면, 대외 홍보가 더 강화될 필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음주운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로 음주운전 발생건수 전년 대비 약 27% 감소
- 주기적인 경찰 관서장 지휘·감독 참고자료 제공으로 전국 경찰 관서장의 조직 운영을 보좌

▲ 음주운전 발생현황 ▲ 갑질신고 등 주요 진정·신고사례 ▲ 주요 감찰조사 결과 ▲ 주요 보도·이슈 등으로 구성, 2~3週 주기로 전국 총경급 이상에게 공유

- 테마별 특별점검활동을 실시하여 관·부서장 중심 책임지휘체계 조기 정착

▲ 오미크론 대응체계 특별점검(1.28~2.18.) ▲ 선거기간 방역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2.21.~3.9.)
▲ 00청·00청 업무추진 현황 점검 ▲ 추석명절 기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9.1.~9.12.)

- 직무범죄 수사체계를 안착시켜 조직 내 청렴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22.10월 기준 37건 수사 진행하여 종결 29건(기소외건 송치 18건(구속 2명), 불송치·불입건 11건), 수사 중 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3% 증가
- 조직 내 인·물적 취약요인에 대한 진단 중심의 감찰정보활동으로 안정적 조직운영 보좌
- 비위 사건·언론보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확인 및 감찰조사를 통해 신뢰도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홍보 노력 및 성과항목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바, 이는 사례 공유 외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노력의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3년 감찰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첩보수집건수 상승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경찰관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찰관 정원 대비 10% 이상 등을 목표로 하는것이 타당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지휘관 지휘권 및 감독권한 활성화 및 확립을 위한 업무중심 감찰활동 전개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시기별 맞춤형 계획 수립 후 적절한 이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직원 대상 교육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 설정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너무 쉽게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 아닌지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정책효과성	보통	▶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음주운전 예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의무위반행위 예방활동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중요 비위에 대한 수사연계를 통해 내부 부패 일소라는 향후 정책효과가 기대됨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식으로 업무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사례 공유 외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노력은 확인이 어려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찰 성평등 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경찰 성평등 목표 수립 종합계획(21-24)」 이행점검 등 안정적 제도 추진
 - ※ △기능 및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안내('22.6월) △본청 주관, 중간점검 실시('22.10월)
- 경찰 주요 정책·홍보물 등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 운영지원
 - ※ '22년 기준, 홍보물 등 총 3,080건 검토(1,270건 개선, 개선율 94.3%)
- 양성평등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 **(전문인력 확보)** 총액인건비 신규사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전문인력 확보(임기 2년 '23년~)
 - ▶ **(역량 강화)** △'22년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공유 등을 위한 화상회의 실시(3월)
△성평등 정책 컨설턴트단 워크숍 참여(3월) △성인지 통계교육안 공유 등 워크숍 실시(8월)
- '조직 내 성범죄 예방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22년 4회) 및 법령 등 제도 정비
 - *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추진

- ▶ **(법령 개정)** 「경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22.9)
 - ▶ **(가이드북 업데이트)** 경찰 구성원의 성범죄 대응 가이드북 업데이트 배포
- 쉼 직원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경찰청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교육 운영계획 수립(4월) △신임경찰 성평등 표준교육안 개발(3월) △사이버 직장교육 실시(7월)
 - ▶ △성희롱·성폭력 교육 운영계획 수립(5월)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6월) △사이버 직장교육 실시(10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동영상 제작(10월)
- 「성평등 값이가치 발족」 등 조직 내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 (성평등 같이가치) 성평등문화혁신네트워크 '성평등 같이가치 발족(4월)' 및 간담회 실시(3회)
-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 경찰선언 영상제작(9월) △성평등 문화대전 추진(9월)
- ▶ (뉴스레터 발간) 성평등 뉴스 새로쓰는 경찰이야기 vol.5 발간(7월) / vol.6 발간(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교육 등 성평등 업무 분야는 전문영역으로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선 충분한 전문인력 필요
- 본청 및 시도청 단위 운용 중인 양성평등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22.12월 임기종료)의 중도 퇴사로 인한 전문인력 부재로서,
- 목표한 성과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평등 정책 실행체계 확립) '23년 양성평등 전문인력(임기제, ~'24.12월) 채용 예정, 조속한 정책 실행체계 확립을 위해 워크숍·직무교육 등 추진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개선)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사전 점검을 활성화하고, 제도 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 및 목록별 관리 방식 도입
- (성평등 교육) 교육 참여율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주제별·직무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양성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대부분 지표 설정 등에 있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성평등 인식개선 방식을 알 수 있는 지표 발굴을 제언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맞춤형 정책을 주기별로 적절히 수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타 기능 및 시도청과 협업사항을 어 떻게 이끌어 냈는지가 불분명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성평등관점 개선 노력도 성과지표 94.3% 달성(목표치 94.3%) ▶ 성평등 교육 정착도 성과지표 94.1점 달성(목표치 91.9점)
5. 정책효과성	보통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점검 필요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되나, 성평등 수준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도입 필요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우수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성평등 관련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 필요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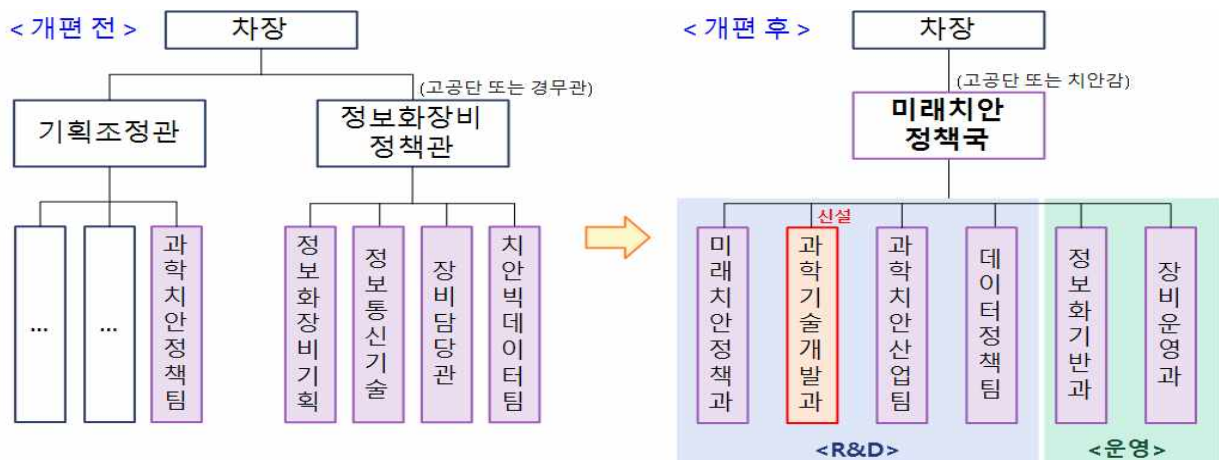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치안R&D 예산 확보) 미래 치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및 재정당국 대상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 '23년 치안 R&D예산 674억원 최종 확보(올해 대비 +82억원, 14%↑)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안)
예산	22억	51억	97억	133억	186억	225억	492억	592억	674억
증가율	-	131%	90%	37%	38%	39%	118%	20.2%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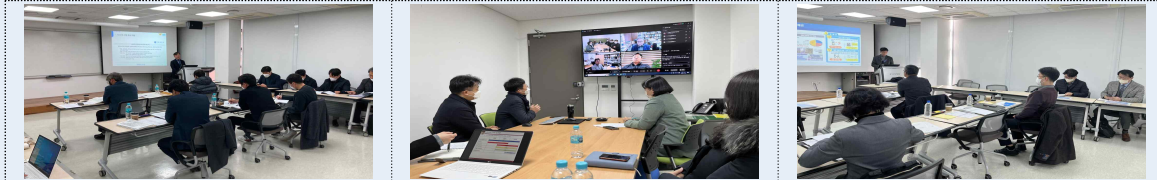
- (과제 발굴) 「경찰 미래비전 2050」 전략에 맞춰 '24년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기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 또한, 각 국관 및 시도청, 현장 경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하여 '24년 신규과제 후보 총 67개를 발굴, 치안 R&D 사업화 등 추진
- ▶(미래비전) △ AI 치안 어드바이저 △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차세대 방탄·방검복 △ 치안산업 기술표준·인증체계 △ RPA 전환가능 직무 발굴 △ 지휘역량평가 체계확립 등
- ▶(수요조사) △ 군중밀집 관리 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반 경찰 직무발명 치안서비스 연계 사업 △ 범부처 마약청정사회 구현 연구개발 △ 첨단 사격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등
- (추진체계 강화) R&D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7년 '계'(R&D계), '21년 '과'(과학치안정책팀)로 확대 후, 現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

< 미래치안정책국 조직도 >



- (성과 관리) 경찰청 자체 R&D의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구성, **과제별 연차컨설팅**(①달성도, ②우수성, ③활용계획 검토) 개최

▶(대상과제) △112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확장현실(XR) 기반 복합테러 대응 교육·훈련 테스트베드 구축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을 통한 용의자 추정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추적기술 개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법곤충 감정기법 고도화



- (정책 홍보) 과학치안 정책 관련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대외행사** 적극 추진

- <국제기구 초청> 「약물이용 성범죄 예방기술」 사업 관련 협업한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소장과의 **형사국장님의 환담회** 개최
- 연구개발 성과를 UNODC에 홍보하고, 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 <다부처 협업> 특허·소방·해경청과 공동 주최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관련 **국회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경찰·소방·해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모전(우리 청 대상 수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치안 R&D 연구성과가 가시화되고, 국제치안산업대전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
- 실효성 있는 치안 R&D 추진을 위해서 국민과 치안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치안 R&D 체계 구축으로 과제 발굴 및 현장 도입 가능성이 증가한 만큼 관련 기준지표(①신규과제 건수, ②수혜자 만족도)의 **상향 조정 검토**
- 산업 진흥 관련 정부부처의 정량·정성적 지표와 온라인 지표를 참고하여 변경 고려

※ (타 정부부처의 주요지표) △정량지표: 참가기업 수, 참관 인원, 상담 건수
△정성지표: 만족도, 재참가 의사 △온라인 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조회 건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과학기반 치안서비스, 효율적 인력운용 등 시대적 과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정책과제 및 지표 설계에 스며들어 우리 경찰조직의 미래대응에 대한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나, 성과수혜자 만족도 지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경찰 미래비전 2050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및 내실 있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을 확대 개최하여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치안 R&D 예산 확보 및 신규과제 발굴, 국제치안산업대전 확대 개최 등 모든 과제 정상 추진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치안 R&D 개발과 과학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치안산업 진흥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인정되며 대외부처와의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모든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지표의 상향 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5. 정책효과성	우수	▶ 다양한 연구개발의 추진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실제로 연구성과물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효과성이 인정됨.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경찰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되어야 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안 R&D 확대 및 치안산업 진흥 관련 더 큰 가시적 성과가 기대됨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경찰도 과학화·전문화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치안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임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국관 및 시도청, 현장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2회 개최하여 내실 있는 환류가 이뤄졌음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경찰의 날과 연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SNS, 유튜브, 해외잡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과학치안 기반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서목표에 부합하는 정책과제 수립 및 추진 노력으로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 성과 향상
 -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우수’ 달성 △‘사이버공격 방어대회’ 상위 입상 등
-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노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 업무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성 강화
 - ※ △지능형위협대응시스템 확대 △단말탐지대응시스템 고도화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경찰전산망 보호) 각종 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감사 등으로 보안성을 강화하였으나 일선 담당자 업무 전문성과 현장직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
 - － 기관별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직원 대상 PC·디지털복합기 등의 보안 취약점 홍보 강화 필요
- (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추진 결과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및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다소 미흡
 - － 지표 설계 시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 직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제고가 요구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전산망 보호) 온라인 상시감사의 미조치 현황분석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 자체 대응훈련·직장교육 개설 등으로 보안의식 제고
 - ※ 매월 ‘정보통신 보안 수칙’ 등 청사 승강기 내 모니터 송출 추진
- (데이터 활용) 경찰청 보유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부 정보공유 회의 및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추진
 - ※ △품질관리 지침 개정 및 매뉴얼 배포(상반기) △전문교육(상·하반기) △담당자 회의(매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경찰 전산망 보호,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높게 평가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관련 성과지표를 차년에 도출했으면 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경찰전산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 ▶ 신해킹기법 방어망 구축으로 대응, 정보보호 교육 증진 노력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목표한 추진계획을 준수하게 수행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온라인 상시감사 실시 노력,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협업 좋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목표를 상향하고 초과달성함
5. 정책효과성	우수	▶ 프리카스 예측 정확도 제고 등 효과성 우수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성과 높음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등의 측면 기대 ▶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적 치안서비스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 우수 ▶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기관 자문 등 의견수렴 돋보임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적절한 정책홍보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튼튼한 정보통신 기반 확립 >

- (언택트근무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중단 없는 업무시스템 구현
 - 모바일플랫폼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각종 내부시스템(폴넷, 메신저, 메일, 온나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구축
 - 경찰청 원격근무시스템의 가용인원과 편의 기능, 보안성을 강화
 - ※ △ 동시 사용 인원 확대(2,000 → 3,200명), △ 문서보관솔루션 도입 등
- (경찰정보통신망) 표준화 등 체계적 관리로 정보통신망 안정성 강화
 - 경찰관서별 네트워크 구성을 표준화하고 통신회선을 이중화
 - 안정적인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계속 유지관리 계약 체결

< 치안 현장 중심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고도화 >

-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개선으로 현장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
 - △ 폴넷·폴메신저 △ 행정업무시스템 △ 폴리폰 △ 스마트국민제보 등 각 국·관 및 시·도경찰청의 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200건 이상 서비스 개발·개선
 - 최신 DBMS 도입으로 폴조회 시스템의 속도·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공무원증 시스템 통합으로 접근성·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신규시스템) 현장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 경찰청 우편물의 신속한 고지·수납과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약 3년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시행
 - 재난 현장의 헬기 영상 등을 연계·공유하는 영상공유시스템 시범 구축

〈 장애없는 기반·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

- (통합유지관리) 동일한 예산으로 더욱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 － '23년 통합유지관리 대상을 65개 시스템으로 확대, 주간·월간 보고 등 상시 관리 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 '21년 59개 → '22년 60개 → '23년 65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 체결
 -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를 체결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 (장비교체·보급) 노후장비 적기 교체로 장비 장애 최소화
 - － 전국 경찰관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무용PC·모니터·프린터 등 55,477대를 교체하고 MS오피스 등 S/W 13,549조를 보급
 - － 치안 현장에서 각종 업무수행 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바일 장비를 최신의 기기로 교체·보급하여 현장 근무자 만족도 제고
 - ※ 폴리폰(18,584대), 업무용폰(11,777대), 모바일프린터(2,465대) 교체
 - － 보안업데이트, 기술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장애 예방 등 안정적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버 등 노후 장비 교체
 -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255대, 노후 네트워크장비 973대 교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일부 성과지표의 사전 목표치 설정값이 평가위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성과지표 설계 미흡
- (정책홍보) 他 부서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대외(국민)적 정책홍보가 빈약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성과의 양'뿐만 아니라 '성과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신설·개선·보완
- (정책홍보) 궁극적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 SNS 등에 다각적으로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과제 선정과 외부위원 컨설팅 의견을 잘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계 ▶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목표치가 임계치에 도달, '23년 성과지표 설계에 반영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 기반 확립 △ 서비스 고도화 △ 장애 제거 등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부분별 종합적 정책 추진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계획상 일정을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 재난망 기능 개발 △ 행정규칙 제·개정 △ 각종 시스템 개선 (연간 400억↑ 예산절감) 등 경찰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노력 ▶ 정부부처 및 경찰청 각 기능과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업 하여 각종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개선에 반영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의 질'에 따라 평가가 차등화된 점을 고려하여 '23년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난이도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5. 정책효과성	우수	▶ 다양한 정책의 효과로 정보통신 장애가 현저히 감소하고 ('21년 대비 32% 감소) 대내·외 만족도가 더욱 증가(0.8%↑)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모바일오피스 등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경찰행정 구현으로 대국민 치안만족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설문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반영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언론보도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홍보, 궁극적 정책수혜자인 국민에 대한 편익·체감 정책을 적극적 발굴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부 긴축기조 下 우수장비 도입을 위한 장비 예산확보
 - － 신형 방검조끼(124억), 권총(38.5억) 등 핵심안전장비 예산 마련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장비 개발 및 보급
 - － <미래치안 무기·장비> 한국형 전자충격기(2,755정) 개발·시범운영 및 저위험권총 안전성 검사 완료 등 무기 세대교체 성공적으로 안착
 - － <맞춤형 안전장비> 불시의 흥기피습 대비를 위한 삽입형 방검 패드 보급 및 경량 방검조끼 개발 추진
- 현장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현장만족도 제고
 - － <차량보험 개선>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금액 대폭 상향(3억→5억) 및 특별약관 보장범위 확대(공무중인 모든 차량)
 - － <유료도로 통행방법 개선>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경찰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와 하이패스 차로 무정차 통과
-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도입 관련 대통령 1호 지시사항 수행
 - － <우수장비 T/F 구성> ‘경찰·소방·군 등 고위험직군 우수장비 도입 대통령 지시(5.16)’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경찰장비 검사업무 개선 등 경찰청 세부추진 과제 이행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정책 선도
 - － <친환경 피복>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근무복, 혹은한파카 내피 등 경찰피복류에 확대 적용, 국정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 실현에 기여
 - － <친환경 차량> △업무용 전기차 286대 △수소버스 3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경찰관서 내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간담회, 회의 등 정책수요자 및 현장직원들의 의견수렴 관련 환류 부분 노력도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함
- 정책 수립 등 이행과정에서 자문은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치안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 다소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 평가 계획수립 이후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시 정책환류 노력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기술서 작성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과제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경찰장비자문위원단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현장 장비 개발과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과제 내용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이 큼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함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보통	▶ 대·내외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관행 혁신을 위한 노력도가 높으나 창의적, 도전적, 선제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장비 보급 관련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비 성능 개선 및 장비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우수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지표 발굴 등 적극성 또한 높게 평가되며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5. 정책효과성	우수	▶ 피복비 예산절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같은 대·내외 편의성 증대 및 내부만족도 제고 등 정책효과 인정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여 미래치안 확보에 기여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정책 환류에 충실한 것으로 보임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대·내외적인 정책홍보는 우수하나 궁극적인 정책수혜자인 국민편익 부분에 대한 홍보의 한계가 존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
 - <경찰의 날 행사> ‘미래를 선도하는 경찰상’ 구현 및 ‘국민 안심공동체 실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첨단기술 치안산업대전 등과 연계·기획
 - 경찰영웅순직경찰 유가족 등이 함께하는 사전 환담을 기획하고 △22년 경찰영웅 등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영웅패 수여 △국민경찰 합동공연단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butler** 및 경찰가 제창
 - <기타 행사> 내·외부 직원,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행사 추진
 - 경찰청장 치안현장 방문 (총 16회) : △특진 표창 △근무자 격려 △직원기관 간담회 등
 - 쏠 경찰관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3차례 추진
 - 대법회(불교), 수요예배(가독교) 개최 및 참수리 불등트리 점등 행사 지원행사안내플래카드 등
 - <치안현장방문> 전국 18개 시·도청(67개 관서)를 경찰청장이 방문하여 현장과 스스럼 없이 소통,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
 - <포상·격려 제도> 현장경찰관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사기와 직결되는 포상제도 추진, 치안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 [내부포상] 칭찬플랫폼(매주), 베스트팀장(매월), 베스트경무인(반기)
 - [외부포상] 「영예로운 제복상」, 「MBN 안전영웅 특별상」, 「LG의인상」, 「생명존중대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감·6급이하 연가사용실적 소폭 미달
 - <결과 실적치> 목표치 63% 대비, 59.3% 달성으로 목표치 미달, '22.10.31 기준
 - 지속되는 코로나 19 상황, 태풍 피해 복구, 대선·지선 등 현안 업무로 연가를 활용하기에 쉽지 않은 여건이 형성되어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연가사용 계획('22. 2), 여름·가을휴가 계획(6월, 10월) 카드뉴스 홍보 등 연가사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목표치에 다소 미흡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연가활용률 달성 목표치를 부서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한 설정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 ·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각각 성과지표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고, 컨설팅 내용을 충실히 반영, 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신뢰도 분석 등 타당성, 신뢰성 입증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전반적으로 과제가 잘 추진 되었고, 직장협의회 지원 등 갈등조정을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계획 정상 추진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경감·6급이하 연가활용률 실적은 목표치 도달 다소 미흡
5. 정책효과성	우수	▶ 정책효과성 양호
6.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중장기적 기대성과 양호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내부의견 뿐만 아니라 경찰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도 필요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홍보 성과 양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 경찰관의 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 － 「경찰병원 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22.8~'23.2) 및 병원 관계자 및 의료·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구성·운영
 - － 1인당 건강검진 비용 증액에 따른 검진 항목(소화기계 검진) 추가 및 사후관리 강화(특수건강검진 후 조치 및 관리 가이드 제공)
-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 순직·공상경찰관의 헌신에 걸맞도록 예우 및 지원 기반 확충
 - － <지원체계> 재해전문 노무법인을 통한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서류 작성 등 순직·공상 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유가족·공상자의 부담 완화
 - － <자녀 장학금> 민간장학재단과 신규 협약(7개 재단 3.2억원)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사업 차질없이 진행
 - － <직장어린이집> 전국 100개소 확충을 위해 3차(20개소) 신규 개원, 경찰관서 직원자녀 보육지원 확대(3,580명 → 5,050명)
 - － <수련원> 강릉수련원 증축(122실, '24년 준공), 신안수련원 신축(75실, '24년 준공) 사업 진행 및 남해수련원 신축 예산(214억원) 확보
- 경찰경력-지역별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노인 일자리 문제해결에 기여, 고임금 일자리 진출 등 질적 수준 향상
- ▲자녀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찰관 자녀 대학특별전형' 자료 배포 ▲놀이공원·숙박업소·영화관 할인 등 복지 혜택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한 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상황
- <원인분석> 경찰은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임에 따라 충분한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나, 소방·해경 등 타 직군에 비해 1인당 예산 및 지원 주기가 열악하여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사·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경찰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 종합적인 계획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이라는 부서업무를 대표하여 설계, 주요정책과제와의 연계성도 우수 ▶ 성과지표는 상담 등 이용건수라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자 만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종합대책, 법령개정, 연구용역 등 각 과제 추진을 위한 연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였고, 업무 중 발생한 민원 등 장애요인도 원활하게 극복 ▶ 인원 대비 수련원 시설 부족으로 사용 어려움. 수련원 확충 희망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추진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KB와 협업을 통한 대출 지원, 생일 지원, 어린이집 신축 등 다양한 지원대책 도입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우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접촉 어려움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우수	▶ 건강검진 항목 확대, 퇴직경찰관 취업 인원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정책효과성 확인됨 ▶ 경찰병원 분원 설치 관련,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현장경찰관 복지증진을 통해 직무만족도 및 자긍심을 제고 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국립묘지 안장 요건 관련 의견수렴, KB 관련 설문조사 등 정책 수립·진행 과정에서 현장 직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의견 및 지적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복지 관련 지속적인 홍보자료를 통해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공감 및 공유가 잘 되고 있음 ▶ 경찰복지정책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홍보가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추진계획 등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핵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재정기반 확립을 목표로 예산안 편성
-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전년대비 1.4% 증액된 총 12조 4,548억원 확보

- (국정과제 적극이행)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예산 증액
※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후면 단속장비 시범 도입(10억원, 신규), 급증하는 스톱킹 범죄 대응 예산(12억원, 신규), 고위험 피해자 지원 인공지능 CCTV 도입(14억원, 계속)
- (과학치안) 미래치안 구축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활용 R&D 예산(674억원) 중점 확보
※ 피해자 정밀 위치추적(113억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90억원), 미래치안 기술개발 연구(256억원)
- (수사비 현실화) 수사인력 부족 및 업무량 증가하고 있는 수사부서 환경 개선 노력
※ 사건수사비 619억원(+47억원, 8.2% ↑), 국수본 사업예산 3,693억원(+65억원, 11.8% ↑),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280억원(계속), 경찰서 사건기록보관실 구축 96억원(+3억원)
- (교육 대개혁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및 최신 수사기법 교육 지원 예산 편성
※ 경찰청 자체 국내·외 위탁교육 지원예산(46억원), 수사 전문성 제고 교육예산(4억원)

- 정부 정책(신속집행) 이행을 위한 적극재정 운용, 집행 극대화
- 기재부 설정 목표 대비 +310억원 초과 집행(1분기 경찰청 역대 최고집행실적)
-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사업평가제도와 연계 추진, 집행실적 제고
- 청사 신·증축 기금(234개소, 2,864억원) 확보 및 지·파출소 단가 상향
- 신·증축 기재부 반영기준(노후도 30년 이상, 협소도 60% 이하 등) 충족사업 중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 총 2,864억원 반영(신규 66개소 229억원/ 계속 168개소 2,635억원)
- 일반청사 단가의 9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지역관서 공사비 단가 상향적용(195만원 → 270만원, 40%↑), 청사 품질 향상 기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미달성 / 예산확보수준) 3개 성과지표 중 40%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확보수준 성과지표 달성도가 98.9%로 지표 미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등급
▶ 예산확보수준(40%)	55.0%	98.9%	S
▶ 예산집행률(30%)	74.9%	100.1%	SS
▶ 국유재산증가율(30%)	6.19%	129%	SS

- (도전적 목표 설정)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보여주고자 최근 3년 평균(54.8%)보다 높은 수준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
- (미달성 사유) 건전재정 기조 및 의경 폐지 등 대규모 완료 사업으로 예년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타부처 기후변화 예산 확대에 따라 경찰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아쉽게 지표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정 수준 목표치 설정 및 예산확보 노력 경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가 부서업무를 대표하고 지표설계가 적절함 ▶ 예산 증액을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역대 최고 집행실적 달성 등 정책과제 수행 노력 우수 ▶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추진계획을 일정에 맞게 준수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 노력 우수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 증액 결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 및 대내외 지속 협업을 통해 목표달성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달성도(예산확보수준) 미흡 ▶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확보 달성도가 98.9%에 이른 것은 매우 고무적임
5. 정책효과성	우수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 인정 ▶ 수사비 예산 증액, 예산집행을 초과 달성을 높게 평가함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내실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 ▶ 예산확보 집행으로 대내외 만족도 치안역량 강화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다양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협의로 현장 재정지원강화를 위해 노력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다양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찰청장 취임 초기 대외 공표한 「국민체감 약속 1·2호(악성사기·마약)」 홍보에 역량 총결집하여 이슈화에 성공하였으며
 - － 이를 통해 추진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승 및 이미지 개선 효과 도모
- ‘정부부처 최초’ 7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정책소통) ‘우수’ 기관 선정 및 △ 2022 대한민국 광고 대상* △ SNS 소통 대상(3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단체들로부터 홍보 역량을 인정 받음
 - *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제로 「말없는 112신고, 똑똑 캠페인」이 ‘대상’ 2건(공익광고 및 이노베이션 부문) 및 ‘동상’ 1건(오디오 부문) 수상
- 또한 지면 기사 47건, 온라인 기사·커뮤니티 게시물 245건을 수정·삭제하는 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정책신뢰도 저하 방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2호 등 주요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10. 29.)’ 등으로 기능별 경찰활동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또한, 경찰 관련 부정이슈 발생 시 그간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 대혁신 TF 활동 등 ‘안전 사고’ 방지 노력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교통안전 등 기타 국민안전 정책에 대해 피해예방법 소개 등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
-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이미지」 정립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 ① 긍정 이미지 확산(사례 중심 홍보) ② 부정이슈 관리 체계화 추진
 - ※ 국민체감 약속 1·2호처럼 ‘신뢰 이미지’가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되도록 긴 호흡으로 지속 반복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평가 위원들의 컨설팅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등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적극적 소통활동으로 3개 지표 모두 목표치 달성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국정과제 등에 대해 맞춤형 홍보(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오보, 왜곡보도 대상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신뢰도 저하 방지 ▶ 올해는 △ 외부 전문가 특강 정례화 △ 위기 관리 교육 영상 제작 등 역량 강화 추진 예정
2-2.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 올해 초 예정된 추진계획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전국 홍보기능 워크숍' 개최 △ 경찰청장 부임 초기 소통 지원 방안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더하였음
3.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112신고 '뚝뚝' 캠페인 영상 제작 당시 문체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해당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상' 2건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노력도 인정(예산 1.4억 절감)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전체 3개지표 목표치 달성, 다만 SNS 활동지수(친구 수 등)를 비롯한 일부 지표는 임계치에 도달한 실정으로 향후 목표치를 3개년 평균 등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5. 정책효과성	우수	▶ 경찰청장 취임 초 '국민체감 약속 1,2호' 전방위적 홍보로 언론, 국민 관심 집중 ▶ 정부부청 최다 친구 수를 보유하는 등 SNS 플랫폼 파워 확인
6. 향후 기대효과	우수	▶ △ 직제 신설(디지털소통팀장) △ 임기제 확충(+20명) 등을 통해 고품질 홍보 콘텐츠 양산 기대
7.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시도청 홍보과장 및 실무자 대면 워크숍(5,9월) 및 경찰청 기획홍보 전략회의(12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주1회)와 기자간담회, 문체부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
8.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전문수사관 인터뷰 등 기획홍보(40여회)를 통해 경찰의 전문성, 역량을 홍보하였고, 각종 위원회·협력단체 등 정책고객(8천여명) 대상 주요 치안정책 및 현장 우수사례 전파(월1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과제 성과지표 개선	○CPTED사업의 적용기법·방법시설·예산 등을 종합 평가토록 시도청 성과지표 개선('23.1월)
	○대국민 의견수렴 등 예방정책 환류 기능 강화	○예방활동 만족도 등 범죄예방지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도청 정책 컨설팅('23.1월)
2	○'대내·외 공감대 확보' 성과지표 관련 목표치 상향 및 지표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정책 효과 입증	○'23년 경찰청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컨설팅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성과지표(배점, 가중치 등) 수정('23.3월)
	○자치경찰사무 R&D 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 도입 실질적 효과 견인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대면 현장교육 등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보에 주력(연중) ○R&D사업 수행 지역 공모·선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창출 추진('23.6월)
3	○이태원 참사 계기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위주로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필요	○'23년도 자체평가 정책과제는 해당 내용 중심으로 계획 수립, 추진.이행 예정('23.2월~)
4	○'생활 주변 폭력 사범' 검거인원 지표 변경 검토	○신규 지표 검토 및 선정('23. 3월)
5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분석 활동 강화	○시기·계기별 맞춤형 정보활동 추진 등 관리 체계 정교화 ⇨ 매주 안전건문 분석·공유(즉시)
6	○유관기관 협력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 홍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 협업, 시기별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아동권리의 달(5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등
	○전담경찰관 전문역량 제고	○△강의기법 △면담기법 등 SPO 활동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표준교육자료* 제작·공유 * △사이버범죄예방교육자료 △마약범죄예방교육자료 ○APO 전문성 제고를 위해 △표준강의안 제작 △유관기관 공동 매뉴얼·공동수행지침 마련
7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근절 및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警·檢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23.12월) 및 스토킹처벌법 Q&A 배포('23.7월)
		○신상대상자 시범운영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연중 수시)
8	○'성폭력 피해 상담 챗봇' 운영 성과 분석 및 지속적 성능개선 필요	○분기별 1회 운영 성과 분석(연중) ○행안부 국민비서 내 챗봇 연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챗봇 신규 구축('23.12월)
	○아동성착취물·온라인그루밍 범죄 심각,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홍보·교육 활동 필요	○신학기 학교폭력·성폭력 예방활동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 교육 전개 예정('23.3·9월)

9	○이륜차·PM 안전대책 지속 추진	○'23년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대책 수립 시 이륜차, PM 대책 반영('23.4월)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전개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정보 제공,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연중) ○휴가철, 연말연시 등 상시 음주단속 체계 구축, 집중단속으로 경각심 제고(연중)
10	○정책수요자 대상 의견수렴 노력 향상	○향후 주요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 ※개별 조치계획이 아니므로, 조치시한 없음
11	○정책수립 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 요청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 및 시행(연중)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 홍보활동은 있으나, 정책수혜자 대상 맞춤형 홍보활동 보완 필요	○정책에 따른 홍보대상자를 구체화하여 효과성 높은 수단과 방법으로 맞춤형 홍보 실시(연중)
12	○첨단 기술력 제고 등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연관분석시스템을 추가 고도화하여 데이터 공유 확대 및 분석역량 제고(연중)
		○미래형 사이버수사 및 연구·분석시설을 통해 선제적, 체계적인 수사·분석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첨단 다기능 복합시설(국가첨단치안센터) 건립 ※ '25. 11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진행 중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절차 진행 및 UN 사이버범죄협약 성안 회의 참여('23년 중) ○해외 법집행기관 및 글로벌 IT 기업과 공조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논의('23. 4.) ○보안통신선 장비 수입 및 설치('23. 2.)
	○국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온라인 행사 및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23. 4.)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를 제작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실시('23년 연중)
13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가상신분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통합관리 시스템 및 위장수사용 AI수사관 제작 프로그램 연구개발(R&D) 추진 ('23~'26년, 예산 94억)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루트(SNS 등)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필요	○유튜브 등 SNS, 대국민 문자, 교통수단·엘리베이터 광고 등 국민들에 시인성 높은 다양한 홍보 경로 발굴, 단속 활동 및 범죄 예방 홍보(연중)
14	○검거건수 감소추세를 감안한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이 필요해 보임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KICS 통계자료 적극 활용, 합리적 성과지표로 개선('23. 5.)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대해 검거실적이 다소 부족해 보이나, 피해자보호와 관계기관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이버테러 상황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복구지원 및 공격지 추적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실적 거양(연중)

15	○ 수사기능의 의견수렴 및 환류노력도 필요	○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검거 TF(가칭) 구성('23.3월)
	○ 유관부처의 인터폴 활용도 제고 필요	○ 유관부처(부서)별 컨택포인트 구축, D/B 활용 및 합동단속작전 참여 독려하여 인터폴 활용 확대('23.6월)
	○ 보이스피싱 외에도 다양한 전문기능의 의견 수렴 및 환류노력 필요	○ 신규 경찰협력관 파견지에 대해 국수본(경제범죄수사계·마약범죄수사계) 의견 수렴('23.2월)
16	○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다문화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다문화치안활동 고도화 전략을 수립, 중장기적인 발전 기틀 마련('23.5월)
	○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축에 있어 질적 성과 가시화 필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견학·회의 및 위탁교육 추진 등 협업 강화로 가시적 성과 도출('23.12월)
	○ 언론홍보 등 대외적 정책홍보 노력 필요	○ '23년 성과지표 평가항목에 '대외홍보' 실적을 추가, 외사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23.10월)
17	○ 국제치안협력 강화	○ ODA 책임수행기관 공모·모집(1월) ○ 23년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10월)
	○ 치안협력 다변화	○ 아프리카·유럽 등 치안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와 국제협력사업 및 MOU 체결 추진(연중) ○ UN·인터폴·아프리폴 등 국제기구와도 국익과 치안목적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추진(연중)
18	○ 2022년에는 선거사범 단속에 수사력이 집중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양한 단속과제를 추진	○ 반부패·공공 분야 신규 단속 과제 추진('23.12월)
19	○ 마약류로부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본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부 등과 협업을 통해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실시(연중)
		○ '23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발표(1. 26.)
20	○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율 제고 필요	○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23.3월)
		○ 조직원 검거 특별단속(가칭) 등 추진 예정
21	○ 부서(課) 주요 추진업무 추가 반영	○ 업무 선정 및 성과지표 마련('23. 2월 限)
	○ 정책과제 홍보활동 강화	○ 수립된 계획 시행 전·후 다양한 홍보활동 방안 마련(연중)
22	○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전면 시행	○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면시행('23. 연중)
	○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강사 워크숍	○ '23년 정기인사 이후 인력풀 재정비하여 진행('23. 상반기)

23	○(준법 개선 사항) 시도청 준법책임관 제도 활성화	○'23년 시도청 준법책임관 주관, 권역별·시도청별 '준법 정보활동 토론회' 개최(6~10월)
	○(준법 개선 사항) 준법 정보활동 대내·외 홍보 강화	○'23년 시도청(署) 준법 간담회 개최, 준법 정보활동 현안 공유 및 독려(3~7월) ○시·도청 준법 토론회 시 외부인사 섭외 등
	○(정보교육 개선 사항) 정보경찰 현장대응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안전정보 분야 교육 확대(署 과·계장 전수교육 신설, 인파관리 등 과목 추가), 현장의 재난·안전 사고 위험요소 수집·분석 및 상황 판단 역량 강화('23년 1~2월 限 계획 수립, 연중 실시)
24	○ 사전정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보완 사항 적극 이행 및 23년 지표설정에 반영 검토(23년 초)
	○ △집회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 △대화경찰에 대한 홍보 강화	
25	○수사인권 시스템 구축	○영상녹화 지침 개정('23.6월)
		○시도경찰청 인권진단('23.9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개시('23. 8월) ○'24년도 예산안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증액 반영(연중)
26	○지속적 불법집회와 도로소음 존재로 국민 불편 지속	○집회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입각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기조 견지 ○현장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행·업무방해·손괴 등 고질적 불법행위 반복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정책환류와 정책소통 보통임. 실제의견 내용의 일부반영임	○경비경찰 워크숍, 근무만족도 조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7	○책임수사 정착을 위해 각종 제도·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인력 확보 필요	○경찰청 자체 인력재배치를 통한 수사인력 증원('23년 상반기 인사 前)
		○'24년 예산·소요정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23년 연중)
28	○정책성과 및 국민 체감 효과 홍보	○국회·정부·학계와 유기적인 소통·교류(연중) ○칼럼 등 기고를 통한 제도개선 효과 홍보(연중)
	○시·도청-경찰서 수사관들과 소통강화	○개정 수사준칙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연중) ○실무부담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소통 창구 마련(연중)
29	○정량적 성과지표 개선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 성과지표로 개선('23.5월)
	○현장 소통 및 외부홍보 강화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에 현장 소통 및 외부홍보 반영 예정('23.5월)
30	○적극적인 대외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정책 수립·운영시 민·관·학계 관련 전문가를 대상 자문 등 대외 의견수렴 강화(연중)
	○적극적인 경찰 내부 홍보가 필요함	○경찰 내부직원 대상 과학수사 기법, 의뢰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사지원 효율성 증대(연중)

31	○ 디지털포렌식 분석역량 강화	○ 「온라인 분석지식 공유시스템」 구축운영('23. 1월)
	○ 디지털포렌식 대외협력 강화	○ 전국 분석관 현장직무교육(OJT) 추진('23.3월) ○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 개최('23. 6월) ○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온라인 세미나 개최('23.6월)
32	○ 과학수사 활동 이해도 증진을 위해 내부 비수사부서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환류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필요	○ R&D, 국제협력,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등 관련 미래치안정책국·복지담당관 등 내부 기능 의견수렴 적극 활용 및 카드뉴스 제작 등 홍보 강화 추진(연중)
33	○ 주요 정책과제 추진 시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	○ 카드뉴스, 내부망 안내 게시판 등 활용 제작·배포(연중)
	○ 대내·외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군 협조, 경찰대테러·작전부대 군위탁교육(연중) ○ 국제 대테러 학술포럼('23.4월),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23.10월) 개최 ○ 美 LASD SWAT 초청, 전술교류 훈련('23.4월), 경찰특공대 세계전술평가대회('23.11월) 참가
34	○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확대 신설	○ 안보수사국 內 경제안보TF 및 경찰서 안보 수사팀(56개)·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202개) 신설('22년 말 조기추진) →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지표 항목 개선	○ 과거 추세분석 등을 통해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지표 개선('23.3.)
35	○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타 기관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부분 보강 필요	○ '23년 정책과제 수립 시 경제안보 분야 협업 추진을 충실히 과제로 수립, 보고('22.3.)
	○ 성과지표 설계시 안보수사 대응역량 관련 종합적 노력도에 대한 지표 반영 필요	○ '23년 정책과제 성과지표 설계 시 검거성과 외 안보수사 역량강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및 추진과제를 도입 검토('22.3.)
36	○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제고방안 마련	○ '안보첩보 세부지침' 수립 및 하달('23.2월) ○ 첩보수집·분석 전문화 교육방안 시행('23.2월)
	○ 대내외 홍보방안 발굴	○ 대내외 및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시행('23년 연중)
37	○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	○ 본청 주관 경호전문화 전국 경호인력풀 및 MD-X-ray요원 전문화 교육(4월)
		○ 인재개발원 연계, 수행경호 심화과정 대상 집중 교육(연 3회)
	○ 경호행사 이후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 마련 필요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치된 사항 기술 부족	○ 전국 경호경찰관 워크숍 개최(2월)
		○ 경호행사 분석평가 및 경호지침 마련·배포(반기별) ○ 경호홍보물 제작(6월)
38	○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지표 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성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성과지표 수정·보완 추진('23.3월)
39	○ 인사분야 만족도 향상	○ 인사혁신 현장 자문단 운영('23년 지속 과제)
		○ 제도개선 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인사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사항 환류('23년 지속 과제)
40	○ 통합 법률·소송지원 체계 만족도 지표 보완	○ 외부 평가위원 의견 등을 반영, 만족도 내 지표별 비율 조정 등 개선방향을 설정해 지표 재설계('23.2.)
	○ 법률·소송지원 제도 내부홍보 강화	○ 동료지킴이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직무교육 강화('23. 하반기) ○ 법률지원제도 리플릿 배포, 안내글 게재 등 내부홍보 지속(수시)

41	○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신규지표 설계	○'교육 현장활용도' 대체/보완 지표 신설('23.1월)
	○채용 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활동 강화 및 제반 활동 측정을 위한 지표 개선	○일반직공무원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23.2월) ○면접관 등 역량강화·채용홍보 활동 등 측정을 위해 '인재채용률' 지표 개선('23.1월)
42	○대국민 의견수렴 지표 보완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 관련 내용 반영('23.4월)
	○대외 홍보 적극 추진 필요	○각종 업무계획에 홍보 방안 반영('23.6월)
43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성과지표 수정·보완	○감찰정보 활성화 계획 반영('23.6.)
	○대내·외 홍보 적극 추진	○감찰기본계획 수립 반영('23.2.)
44	○경찰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23년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23.1월) ○'23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워크숍 추진('23.1월)
	○주제 별, 직무별 교육 콘텐츠 도입으로 교육 참여율 및 실효성 제고	○'23년 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23.2월)
45	○치안 R&D 과제 발굴 확대	○「경찰 미래비전 2050」 전략 활용 '24년 치안 R&D 예산안 작성('23.6월)
	○치안 R&D 현장 실증을 통한 만족도 향상 추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 2.0」 '22년 과제 현장 실증관서 지정('23.6월)
46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강화	○사이버정보보안 직장교육 과정 개설('23.2월) ○자체 해킹 메일 대응 모의 훈련('23.3월)
	○데이터 품질 내외부 회의·컨설팅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평가 보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소 담당자 회의(수시)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개선 전문교육 실시('23.4월)
47	○성과지표 재정비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관리과제 수립('23.3월)
	○모바일 오피스 정식 서비스	○모바일 오피스 정식서비스 개시('23.1월)
48	○정책과제 완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및 기술서 보완 작성	○'23년 정책과제 계획 수립('22.3월) ○경찰장비자문위원단 확대 개편('23.5월)
	○연가활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강구	○부서원 대상, 각 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가능한 대책 마련(연중) ○연가활용률 달성 목표치 설정시 신중 검토
50	○수련원 시설 부족으로 사용에 어려움, 수련원 시설 확충 희망	○강릉수련원 증축(122실, '24년 준공), 신안수련원 신축(75실, '24년 준공) 사업 진행 및 남해수련원 신축 추진
	○경찰병원 분원 설치 관련,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병원 건립 관련 충남 아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23년 1분기), '23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으로 사업 추진 속도 제고 노력
51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사업 발굴 등 치안 인프라 지속 확충	○중기사업계획 수립(~'23. 1월) ○'23년 예산안 요구서 작성(~'23. 5월)
	○재정사업 적극적 집행 관리로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	○기재부와 협의 조기집행 계획 수립('23. 1월) ○지속적 집행부진 사업 현장 점검 실시('23.4월)
52	○정책홍보 강화를 통한 긍정이미지 확산	○국관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발굴('23.2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화 교육('23.4월) ○디지털소통팀장 및 임기제 선발('23.5월)
	○부정이슈 관리 체계화	○위기·이슈 발생 시 팩트체크팀 상시 운영(연중) ○위기 유형별 사례 분석 및 D/B/화('23. 6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영상 제작('23.3월) ○언론중재위 초빙 교육 및 위기관리 전문가 특강('23.5월)

[붙임] 2022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 본청 : 1차장, 1본부, 10국, 9관, 36과, 19담당관, 3팀
- ◇ 부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 시도경찰청 18개, 경찰서 258개, 지구대 621개, 파출소 1,421개

□ 핵심기능

생활안전·교통

-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및 여성안전 활동 강화
- ▶ 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교통 안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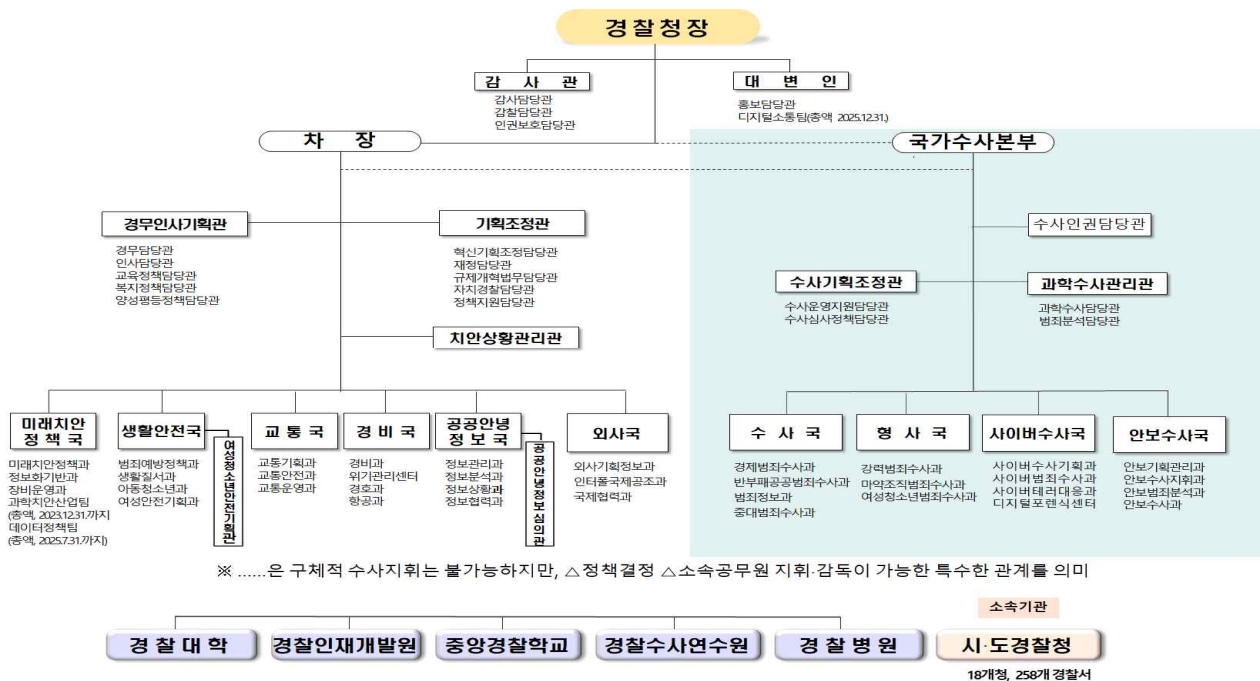
수사·경비

- ▶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민생침해 범죄 근절
- ▶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이룩
-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무.감사

- ▶ 국민 인권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치안행정 구현
-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공감받는 현장 법집행 지원
- ▶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해 자긍심·활력 제고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	--

비전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	------------------------------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II.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III.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	---	---	--

성과목표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성과지표

5대 범죄 검거율

□ 성과지표 개요

〈 5대 범죄 검거율 〉

- 개념 : 국민 안전에 관한 주요 치안지표로서 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측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 조사기관 : 경찰청
- 조사방법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 측정산식 : 5대 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 × 100

□ '22년 측정결과

- 2022년 5대 범죄 검거율은 76.6%(450,623건 발생, 345,156건 검거)로, 전년(77.3% / 419,685건 발생, 324,434건 검거) 대비 0.7% 감소
- '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위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범죄 발생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년	발생	467,547	720	662	21,702	179,315	265,148
	검거	363,743	701	656	21,061	111,112	230,213
	검거율	77.8%	97.4%	99.1%	97.0%	62.0%	86.8%
'21년	발생	419,685	652	495	20,269	166,251	232,018
	검거	324,434	635	487	19,211	103,900	200,201
	검거율	77.3%	97.4%	98.4%	94.8%	62.5%	86.3%
'22년	발생	450,623	689	514	22,582	182,141	244,697
	검거	345,156	667	506	21,207	113,634	209,142
	검거율	76.6%	96.8%	98.4%	93.9%	62.4%	85.5%
전년 대비	발생	7.4 ▲	5.7 ▲	3.8 ▲	11.4 ▲	9.6 ▲	5.5 ▲
	검거	6.4 ▲	5.0 ▲	3.9 ▲	10.4 ▲	9.4 ▲	4.5 ▲
	검거율	0.7 ▼	0.6 ▼	0.0	0.9 ▼	0.1 ▼	0.8 ▼

□ 성과분석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 (탄력순찰) '22년 순찰요청 10,535,858개소 중 10,150,258개소 순찰하여 이행률 93.6% 달성, 전년 대비 3.8% 상승('21년 90.8%)
- (범죄예방 환경개선) 전체 CPTED 사업 2,551건 중 경찰참여 2,423건(95%)으로 전년 대비 참여율 5% 향상(전년 90%), 여타 방범시설 설치도 다수
※ △ CCTV 8,173개 △ 가로등·보안등 56,616개 △ 비상벨 3,546개 △ 기타 52,402개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22년 총 3,820회 개최하여 5,264건의 안건 논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경찰의 노력·성과 홍보 등 소통 활성화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등 생활주변 범죄 엄정대응, 5대범죄 10% 감소
※ (최근 5년간 5대 범죄) '17년 501,978건 → '22년 450,623건
- 또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청장의 국민체감약속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실시

▶(악성사기* 특별단속) 총 2,973명 규모의 전담팀 구성, 15,449명 검거(구속 1,013명)

* ①전세 ②사이버 ③유사수신 ④보험 ⑤전기통신금융 ⑥투자 등 조직적사기 ⑦다액 피해 사기
— 특히, 전세사기 분야는 국토부 등 공조강화로 검거인원 6.7배 ↑('21년 30명 → '22년 200명)

▶(마약범죄 집중단속) '21년 10,626명 → '22년 11,580명 검거(전년 대비 8.9% ↑)

□ 보완 필요사항

- △ 신당역 살인사건 △ 이태원 참사 등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 시스템과 조직역량을 혁신해야 할 과제에 직면
-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법치질서를 훼손하는 구태·악습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제기

□ 향후 추진계획

- ('27년 목표치) 치안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예방·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5대 범죄 검거율'의 5년 후 목표치는 역대 최고지('17년 78.8%)보다 1.2% 상승한 80%로 설정

<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

- (맞춤형 예방치안) AI·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악성사기·스토킹 등 주요 범죄 데이터 접목, 맞춤형 예방치안 전개
※ 탄력순찰 지점을 '주민요청 장소' + '필수 순찰지점(주요 범죄피해자 거주지 등)'으로 확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시 스토킹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관리구역 지정요건에 추가
- (민생치안) 112신고·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순찰, 인공지능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통한 5대 범죄 신속 대응
※ 경찰-지자체 CCTV 관제센터 간 영상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엄정한 법질서 확립 >

- (사이버범죄) △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 불법촬영물 추적,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사이버공간 법질서 확보
*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
- (고소고발 절차 개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선별적 사건 접수 체계를 전부 접수 원칙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
※ △ 각하 사유 확대 △ 입건유예 등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합리성 도모 병행

<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

- (첨단안전도시) 재난·범죄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을 자동탐지하고, 영상으로 현장 확인·대처가 가능한 체계 구축
▶ (순찰로봇) '24~'25년 4족보행 순찰로봇 도입·상용화를 위해 R&D·제반 법령개정 등 추진
▶ (차세대 CPTED) 비명감지 비상벨 등 사업에 IoT 도입, 전국 표준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
▶ (인공지능 통합관제) 위험행동 패턴 등 위험징후 탐지 시 경찰·모니터링 요원 즉시 알람
- (치안약자 안전) △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 약물 성범죄 온라인 신고 플랫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첨단 인프라 고도화

(2)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지표

① 기관 신뢰도

□ 성과지표 개요

〈 기관 신뢰도 〉

- 개 념 : 정부부처(경찰, 법원, 검찰, 국회, 지자체, 중앙정부 부처) 및 사회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의 기관별 신뢰 정도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연 1회 조사
- 조사대상·방법 : 전국 국민 8,000명 대상, 조사원이 방문 면접 조사
 - ※ (문항)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①전혀 믿지 않는다 ②별로 믿지 않는다 ③약간 믿는다 ④매우 믿는다
- 측정산식 : 1~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

□ '22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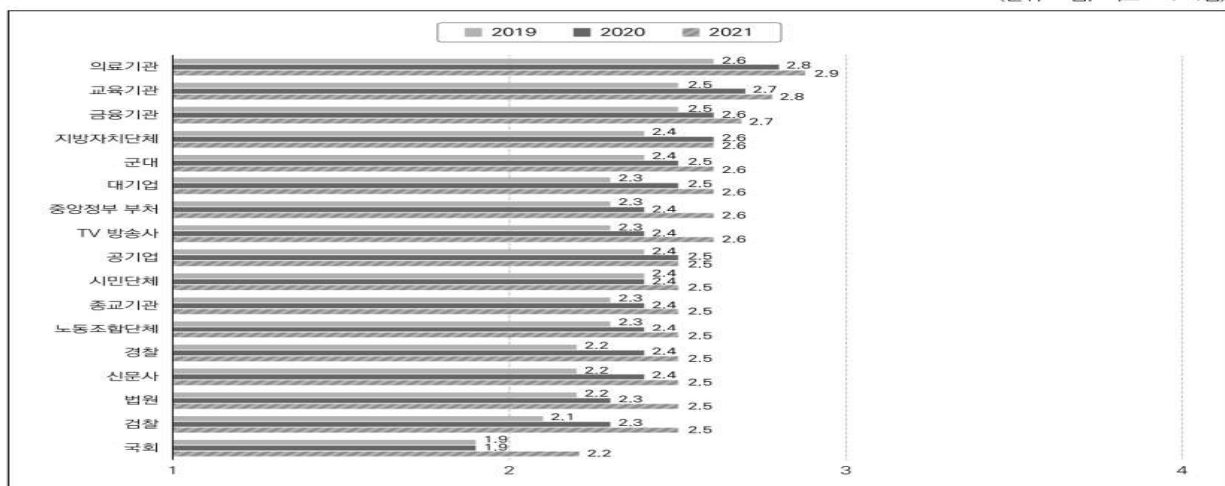
- 2022년 조사결과는 2.5점으로 작년과 동일, 최근 5년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점 만점 중 2.38점 수준

※ '18년 2.3점 → '19년 2.2점 → '20년 2.4점 → '21년 2.5점 → '22년 2.5점

- － 의료(2.9)·교육(2.7)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경찰(2.5)·법원(2.4)·검찰(2.4)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그림 III-44] 기관별 신뢰 정도 차이

(단위 : 점, 척도 : 1~4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 신뢰도」 ('23년 세부결과는 2월 중순 발표)

성과지표

②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 성과지표 개요

〈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

- 개념 : 경찰청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률
※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도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
- 조사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대상 : 정부, 공공기관 등
- 조사방법 : 국가인권위 통계 및 인권업무지원시스템
- 측정산식 : 국가인권위 권고에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권고 건수 × 100

□ '22년 측정결과

- 2022년 경찰청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85%(총 40건 중 △수용 34건 △검토중 6건)이나, 현재 검토중인 6건을 제외하면 100% 수준
- 경찰청은 최근 5년간 197건의 국가인권위 권고 중 184건을 수용하여 93.1%의 수용률 달성, 적극적인 인권위 권고 수용 기조 유지
※ △불수용 1건 △일부수용 3건 △검토중 9건 / 검토중인 9건을 제외하면 98% 수준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
권고	26	24	54	53	40	197
수용	25 (96.2%)	24 (100%)	53 (98%)	48 (94.3%)	34 (85%)	184 (93.1%)
일부수용			1	2		3
불수용	1					1
검토중				3	6	9

(3)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지표

없음

※ '19.6.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결과(정부업무평가실) 반영

□ 성과분석

- (현장대응력 제고) △ 위탁교육 확대 △ 실제상황 기반 교육·훈련
△ 실효적인 신규 장비 개발·도입 등 경찰 교육·훈련 체계 개편

▶ (교육) △경찰청 자체 위탁교육 예산 46억 증액(교육인원 590명 증가) △신임교육 시 실전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94h→207h, 120%↑) 및 체포술·사격·운전 훈련 강화(137h→201h, 47%↑)
▶ (장비) △'23년 방검조끼 구매예산 124.3억원 반영 △저위험 권총 현장실증 추진

- 직무전문성 중심의 중간관리자 보직인사 체계 마련, 남녀 통합채용에 따라 체력검사 제도 개편 등 경찰 전문성 강화

▶ (인사) 16개 계·팀장 대상 보직인증과정 설계, 先 직무교육 後 보직인사 체계 마련('23년 시행)
▶ (채용) '23년부터 일부 분야(경대·경위공채·경찰행정학과 경제) 시행 후 '23년 전면 시행 예정

- (책임수사 역량 강화) 일선 수사관에 대한 △ 인프라·포상 확대
△ 직무 중심의 인사·교육 등을 실시, 원활한 현장 수사활동 뒷받침

▶ (인사) △인력증원·재배치를 통해 696명 증원 △사업비 3,377억원 확보(전년 대비 11.8%↑)
▶ (인센티브) 경제팀 수사관 △특진 T/O 확대(5→30명)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시행
▶ (인사·교육) △수사관 자격관리제 정착 △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전입 수사관 압축 교육 등

- (처우개선) △ 열악한 보수·복지 개선 △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현장 경찰관이 책임성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처우)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경감 근속승진 횟수 확대(1회→2회)
▶ (복지) △특수건강검진 단가 50%↑ △수련원 신축·리모델링 예산 확보(강릉·신안·남해)
▶ (애로 해소) △시도청 內 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 설치 △경찰 전문요원 합동대응팀 시범 실시 등

- (법집행 지원) △ 경직법 上 형사책임 감면규정* △ 적극행정 면책
△ 법률지원 활성화 등 현장의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신설, '22.2.3.시행

□ 향후 추진계획

1. 인적자원관리 고도화를 통한 치안전문가 양성

- (교육훈련 대개혁) 직무 경력에 따른 단계별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자격제를 도입·운영하여 전문가 육성 등 실무역량 강화
 - － 총경 이상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휘역량을 확보하고, 현장 최접점 부서 대상 「상시교육훈련」 도입, 핵심역량을 상시 반복·숙달
- ※ △직위별 「보직인증교육」 과정 신설, 인증교육 이수율 보직요건화 △관서별 보직인사지침 시행 등
- (인사제도 개선) 역량·업무 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이뤄지도록 보직 인사 체계를 정립하고, 복수직급제 확대 등 직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상시교육훈련 운영·지원을 위한 「통합지원팀」 구성, 프로그램 개발·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중심 조직문화 정착

- (조직문화 개선) 조직 내 묵인되고 있는 부적절한 업무형태를 발굴·개선하여 업무중심 문화를 정착하고 직장협의회 등 소통채널 다각화
- (업무효율화) 원격근무·모바일오피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시스템 개선, 현장 부담 경감
- ※ △수사분야 유관기관 정보공동활용 확대 △교통 공익신고 법규위반 자동분석AI 도입 등

3. 일선 경찰관 사기진작 및 영예심 제고

- (인프라 확보)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게 보수*·수당체계를 개선하고
 - △수련원 △청사 리모델링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복인의 자긍심 고취
- * △경정이하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완료('23.1.~) △총경 이상 기본급 상향 추진 중('24.1.목표)
- (복지증진)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지원 강화 △특수건강검진 확대 △마음동행센터 증설 등 경찰관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한 실효적 지원 확충